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I

제1절 평화번영정책 추진환경

제2절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성과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고조를 방지하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I

평화변영정책의 추진

냉전체제 해체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로의 재편과정에 있는 세계는 증대하는 인종적 갈등과 테러, 대량살상무기, 환경문제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직면하여 있다.

동북아와 한반도는 전 세계적인 냉전체제 해체와 역내 경제적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내국간 상호 안보 불신, 역사·영토 갈등 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러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출범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안보질서와 북핵문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평화변영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고조를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제1절 평화번영정책 추진환경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위협,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이 새로운 안보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경제·에너지·환경·보건 등 비군사적 영역의 안보문제도 국제적 안보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역내 국가간 협력기조가 강화되고 있으면서도 사안에 따른 갈등도 혼재하는 이중적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테러·비확산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역내 상호투자과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생산의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는 등 경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중·러간의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면서 미·일 對 중·러의 전략적 경쟁구도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문제와 같은 갈등도 표출되는 등 사안에 따라 대립하는 형국도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핵심 안보현안으로 다시 떠오른 북핵문제는 2005년 9월에 재개된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5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제기하면서 6자회담은 새로운 장애를 맞게 되었고, 이어 북한이 대북금융제재 문제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면서 6자회담은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핵문제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핵문제 이외의 사안이 6자회담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유관국들과의 정상회담 및 6자회담 수석대표접촉 등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핵문

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북한에 충실하게 전달하면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 안보현안으로 또다시 급부상하게 되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718호를 채택하여 대북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가속화되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10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북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면서 '전면 배격'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북핵문제를 둘러싼 교착국면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을 맞았던 북핵문제는 2006년 10월 31일 미국·중국·북한 3개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접촉을 갖고 6자회담 조기재개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어 12월 18일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되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었다.

한편 2006년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4주년을 맞아 실리위주 경제개혁 기초를 유지하면서,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회의에서 「부동산사용료」와 「기업부담 사회보험료」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다. 농업을 핵심과제로 재설정하여 식량증산에 주력하면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개진·현대화를 주요 경제전략으로 추진하였다.

1월에 「기간공업 3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전기석탄공업성」을 「전력공업성」과 「석탄공업성」으로 분리하였으며, 「유색금속법」과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 노력도 전개하였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경제개혁 과정에서 시장적 요소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빈부격차의 확대, 부정부패의 심화 등 사회병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개혁과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사상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막기 위

해 주민들에 대해 휴대폰과 국제전화의 사용을 규제하고,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개혁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체제에 대한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상반기에는 총 19차례의 남북회담이 진행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조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분야를 축으로 한 민간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져 연간 남북 왕래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고,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고용인원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남북관계의 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우리 정부를 비롯한 유관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정세가 안정국면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핵문제 및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간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역내 국가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및 문화·인적 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성과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

가.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설득

2002년 10월 다시 대두된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원적·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북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확고한 3원칙 아래 북핵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왔다. 또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상호 해결을 촉진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따라 양자를 병행시키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이러한 병행 전략에 입각하여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천명하고 이에 대한 관련국간 외교적 해결 노력의 결집과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2003년 4월 북경에서 미국, 중국, 북한이 참가한 3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이 전개되었다. 2004년 2차례의 6자회담과 2차례의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포괄적·단계적 해결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6자회담은 북핵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북핵문제의

정체상태가 지속되는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 주장 및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렇듯 북핵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핵문제를 조기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중대제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중대제안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KEDO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할겠다”는 것으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전략적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을 통해 우리측이 중대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한달 뒤 「6·15 공동행사」 계기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6.17 면담’)을 통해 중대제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대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7월중이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중대제안은 1년여 동안 중단된 6자회담 재개에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고,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에 관한 최초 합의인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되었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임을 공약하고 유관국들은 경제협력, 에너지 지원, 관계 정상화 등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및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과정이 개시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94년 제네바 합의와 달리,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남북이 소통하여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9.19 공동성명('05.9.19) 주요 내용

-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을 재확인
 -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계획의 폐기, NPT 및 IAEA 복귀 공약
 -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의사 부재 확인
 - 한국은 핵무기 부재 확인 및 비핵화선언에 따라 핵 불점수 및 불배비 공약 재확인
 - 여타국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동의
-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 규범 준수 약속
 - 북·미는 상호 주권 존중, 평화공존 및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약속
 -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약속
-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약속
 - 중·일·한·러·미는 대북 에너지 지원 용의 표명
 - 한국은 '05.7.12자 대북 송전제안 재확인
-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 공약
 - 직접 관련당사국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
 - 6자는 동북아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

이처럼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참여국간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와 의견 접근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특히 2002년 10월 북핵문제 대두 이후

2006년 7월까지 총 10차례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에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태도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 설득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호응과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과거 북한은 북핵 문제를 북·미간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우리와의 협의를 기피하였으나, 이제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사안이 되었다. 또한 북핵문제의 교착국면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6자회담의 재개에 기여함으로써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의 유용한 수단임을 재확인하였다.

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정부의 대응

2005년말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의혹 및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가 부각되면서 6자회담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 소재 BDA(Banco Delta Asia)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혐의로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은 '미국에 의한 대북 경제재제 조치의 시작'으로 비난하면서, 2005년 11월 9일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에서 금융문제 해결 이전에는 핵폐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와 관련국들은 핵문제 이외의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금융조치 문제를 중심으로 북미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6자회담 재개가 장기간 지연 되었다. 이러한 교착상황 속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대포동 1기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채널과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경주하였다.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06년 7월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정부는 우리를 비롯한 유관국가들이 미사일 발사를 적극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북한이 제기한 쌀 50만톤 제공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였다.

한편, 유엔은 안보리를 소집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보리 결의 1695호('06.7.15) 주요 내용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규탄하며 미사일 개발 중지 및 기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약속 준수 촉구
- 모든 회원국에게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기술을 구매하지 않고 북한에 미사일 및 WMD 관련 재정 자원을 이전하지 않으며 이를 감시할 것을 요청
- 북한의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 및 9.19 공동성명 이행, NPT 및 IAEA 안전 조치 협정 재가입 강력 촉구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뒤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색케 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 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핵실험 직후 정부 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핵 불용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 유관국 정상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호 조율된 대응기조를 유지하였다.

정부성명 ('06.10.9) 전문

정부는 9일 북한의 함북 지역에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징후를 포착하고 노무현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도중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의 성격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전환하고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1.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 금번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고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짓밟는 행위이다.
3. 북한의 행위는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 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지난 7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인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다.
4. 또한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킨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밝혀둔다.
5.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만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7.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유엔은 재차 안보리를 소집하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1695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핵·미사일·여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 기술 및 자산의 거래와 이전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2006년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직후 정부는 14개 관련 부처로 구성된 대책팀을 통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국회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계획을 담은 안보리 결의 이행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2006년 11월 13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안보리 결의 1718호('06.10.14) 주요 내용

-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 중지 촉구
- 모든 회원국은 무기 또는 군용물자,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물자·장비·상품·기술 및 사치품에 대해 북한으로 직·간접 공급 또는 판매·이전을 방지
- 모든 회원국은 제재위 및 안보리가 지정하는 핵·미사일·여타 WMD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금융동결 및 자산제공 방지, 관련한 북한 인사 및 그 가족의 입국 및 경유 금지
-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외교노력을 환영하고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촉구
-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 설치

나아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와 별개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응조치를 취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정부가 취했던 당국 차원의 쌀·추가 비료 지원 유보 조치들을 계속 유지하며, 금강산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을 계속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한 지원의 대상과 범위도 변화된 정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 평화의 일차적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실험에 보다 분명

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정부가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 성명을 통해 향후 추가적 상황 악화시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 재개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나, 이는 한반도에서의 안보위협과 경제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북 제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붕괴로 이끌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대화국면 진입을 통해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노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정상간 협의, 장관급 회담, 6자회담 수석대표급 접촉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긴장국면으로 치닫던 북핵문제는 2006년 10월 31일 베이징에서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원칙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외교적 해결 모멘텀을 복원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6자회담 재개시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북미 양자 접촉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6년 12월 18일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개최되어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 및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대체로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각국은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회의기간을 12월 22일까지 연장하였으나, 북한이 BDA 문제 우선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각국은 의장성명 채택과 함께 휴회를 선언하고, 가장 빠른 기회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미 양측은 6자회담과는 별도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금융문제 관련 양자협의를 통해 북미간 최대 현안인 BDA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의장성명 요지

-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목표 · 의지 및 공동성명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재확인
-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 방식으로 가능한 조속히 공동성명 이행관련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 휴회 후 본국 정부에 보고 및 가장 빠른 기회에 회의 속개 합의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는 참가국간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핵심쟁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유익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핵심협 이후 악화되었던 외교적 해결 동력 회복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점 등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참가국간에 6자회담 틀과 「9.19 공동성명」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점도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북핵문제의 근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조율 속에서 분명하게 대응해 나가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추구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조성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불안정한 정전체제 하에서의 상호불신 및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남북간 교류협력의 심화·확대 및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남북은 2004년 제13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4일 개최된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5년 8월 13일부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수단이 모두 철거되었으며, 서해 해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남북 함정간 무선통신망이 운용되고 해군 당국간 긴급연락체계를 마련하는 등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구체적 성과를 확보하였다.

2006년에도 우리 정부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6년 4월 21일 개최된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평화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6년 3월 2일에 개최된 제3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 대책의 개선조치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제기하였다. 이후 2006년 5월 16일에 개최된 제4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비록 북측이 서해 해상 경계선 확정문제 선결을 주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우리측은 철도·도로 통행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과 경제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남북간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세기동안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변경하는 과정인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상황,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우선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평화증진을 가속화하고, 남북간 군사·비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미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보장을 통하여 실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남북 및 관련국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남북공동번영의 토대 마련

참여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확산시킴으로써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는 3대 경제협력사업 등 다양한 경제사업 추

진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왔다. 남북간 도로 연결을 통해 남북간 육로왕래가 가능해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개발을 지원하여 북한의 고용 창출 및 기술이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비료와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식량사정 개선에 기여하였다. 실제 우리의 비료지원으로 북한은 2001년부터 4년간 농업증산을 이루어왔고, 그와 함께 식량지원도 병행됨으로써 북한의 식량사정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05년부터는 남북은 서로 주고받는 호혜의 경제협력 사업으로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은 서로에게 유리한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05년에 농업·임업·경공업·광업·수산업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고, 2006년 6월에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를 통해 상업적 방식에 의한 당국간 경제협력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당국간 경제협력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교류협력 환경이 악화되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남북간 대화는 단절로 이어지게 되고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의 이행 지연 및 북한 지역 철도 연결을 위한 자재 제공 중단 등 남북 당국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경제협력을 중심으로 2006년 전체적인 교류협력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06년 남북왕래 인원이 최초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남북교역액도 증가하여 13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2006년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18개 기업의 공장에 11,189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등 북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여건을 개선해 가면서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2000년부터 확대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게 하였다. 북한은 2002년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필두로 하여,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 제정 및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신설 등 남북경협 촉진과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내부적인 제도 개선 외에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주고받는 상거래 방식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합의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뿐 아니라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주고받는 경제협력사업을 먼저 제의하기도 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점차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의 확산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과 북한의 변화 추세를 반영한 제도적인 장치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우선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13개 경협관련 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하여 남북경협 추진의 제도적 토대를 확보하였다. 2006년 7월에는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등 남북이 이미 합의한 공동기구 구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남북간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현장지원기관으로 2005년 10월 개성에 신설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는 남북 당국간 대화중단 상황에서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의 제반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원칙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미래에 관한 비전과 실천 전략을 담고 있는 통일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는 오랜 냉전 속에 계속된 우리 사회의 이념논쟁 및 정치·사회적 갈등과 중층적으로 맞물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는 평화변영정책 추진원칙의 하나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천명하고, 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2006년에는 통일정책이 우리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진정시키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하였다. 정책의 형성과 입안 단계는 물론, 집행과 평가를 통한 환류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고문회의, 정책자문회의 등 자문기구를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및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또한 민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분야별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정책고객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입안과 제도개선에 반영해왔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정책결정·심의기구에 민간전문가와 NGO 관계자

의 참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정책참여를 제도화하였다. 2006년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 18명 중 4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도 25명의 발전위원 중 민간인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당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제도화하여 초당적인 합의 형성에도 힘써왔다.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북한 수해와 관련, 정부가 민간단체는 물론 정치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북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을 결정한 것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결정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정책설명회와 특강을 통해 남북관계 주요 현안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최신 정보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정책홍보자료를 발간하였다.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정책평가회의와 직·간접 정책고객으로 구성된 통일정책 모니터링단이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 및 부서별 업무 평가와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적 동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과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명실공히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10월에는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정책협의 확대 등 초당적 협의구조를 형성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 대국민 설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참여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II

제1절 남북교역

제2절 남북경제협력사업

제3절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제4절 남북간 수송체계 구축

2006년 남북경협은 북한 핵실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간 남북 왕래인원이 10만명을 돌파하고 남북교역액이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이 모두 정상가동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II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2006년 남북경제협력은 열차시험운행 무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간 남북간 왕래인원이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남북교역액이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이 모두 가동되었으며, 상업적 방식에 의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추진에 합의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의 질적인 변화도 모색하였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활성화 등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당국간 회담이 중단됨에 따라 이미 합의된 당국간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 대북투자 수요가 위축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이 보다 진전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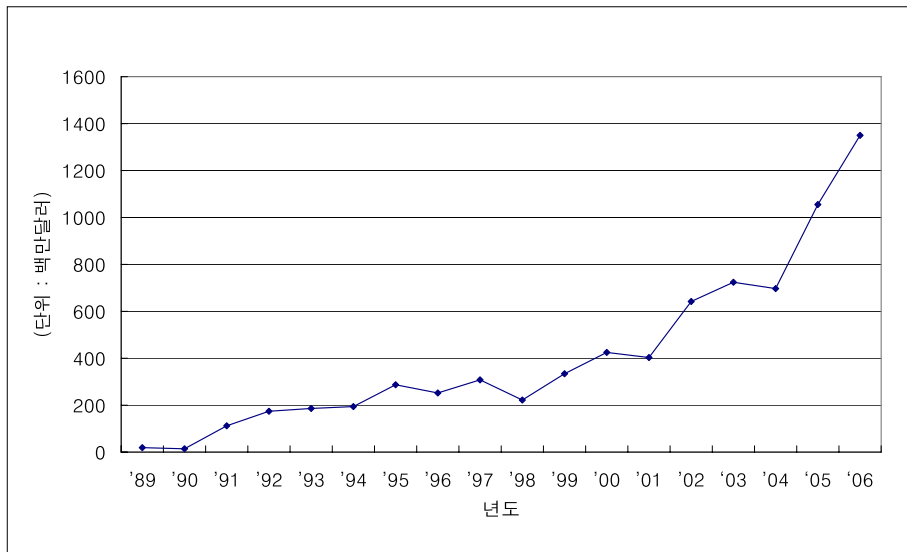
제1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2006년 남북교역 규모는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005년 대비 27.8% 증가한 13억 4,974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건설 자재·장비 반출, 건설중장비 재반입 및 생산품 반입 증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증가 등 상업적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입은 5억 1,954만달러로 전년대비 52.7% 증가했으며, 반출은 역시 개성공단·금강산 등 협력사업장 자재·장비, 위탁가공 원부자재, 대북지원 등에 따라 8억3,020만달러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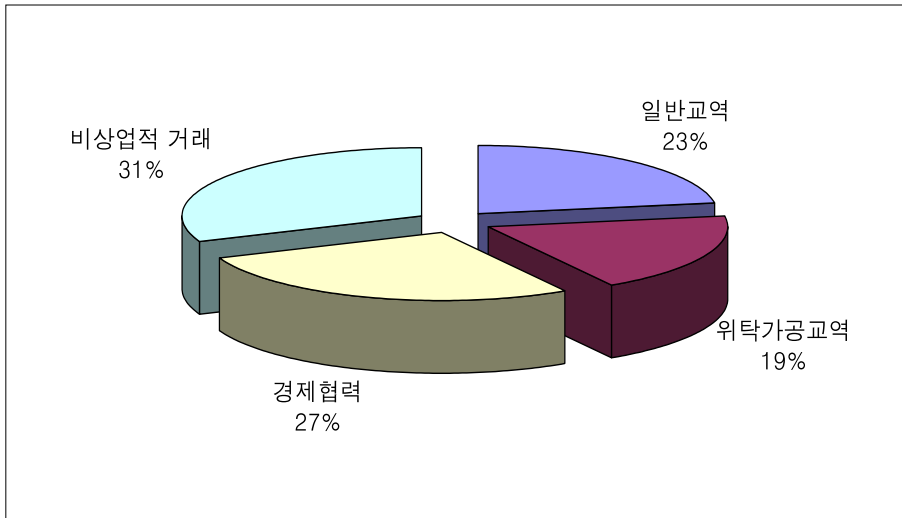


나. 유형별 남북교역

2006년도 상업적 거래는 9억2,807만달러로 전년대비 34.6%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역액의 68.8%를 차지하였다. 이중 반입은 5억1,839만달러로 전년대비 52.5% 증가하였고, 반출도 4억968만달러로 전년대비 17.2%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 중 일반교역은 3억413만달러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위탁가공교역도 2억5,296만달러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다. 그 밖에 개성공단 2억 9,880만달러, 기타경제협력 1,553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69.1%, 149.2% 증가하였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4억2,167만달러로 전년대비 15.1%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의 31.2%를 차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 사회문화협력은 241만달러로 전년대비 208.8% 증가하였고 비료·식량 등 대북지원은 4억1,925만달러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다.

2006년도 남북교역 거래유형



다. 남북간 교역수지

2006년 남북간 교역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흑자이나 경협사업, 대북지원 등을 제외한 실질교역 수지는 적자이다.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누적 명목수지는 남한이 4억 5,085만달러 흑자인 반면 누적 실질수지는 23억 8,764만달러 적자이다. 이러한 교역수지 구조는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물자반출의 증가, 대북 지원 물품의 증가 때문이다. 실질교역수지의 불균형은 주로 북한의 구매력 부족 때문으로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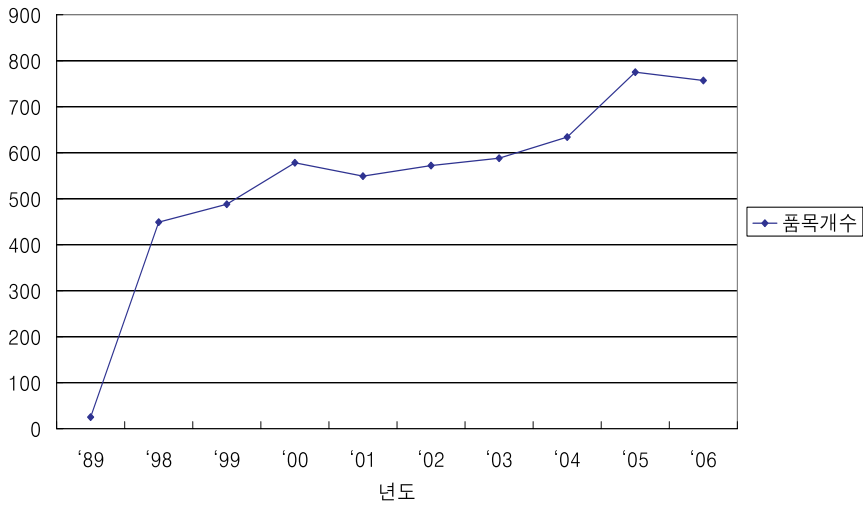
라. 남북한 교역구조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농수산물, 광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섬유류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과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10월 남북교역 기업에게 투자알선 및 면담 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업무 활성화로 남북간 직교역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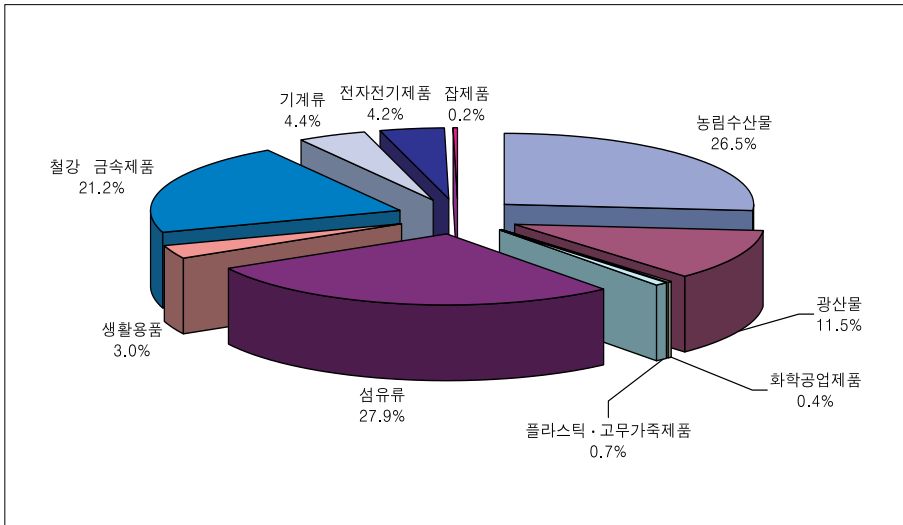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3년 588개, 2004년 634개, 2005년 775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6년의 경우 전년대비 2.4% 소폭 감소한 757개로 이중 일반교역은 343개, 위탁가공교역은 248개 품목이 차지했다.

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수산물, 광산물, 농산물 순이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져 2006년도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27.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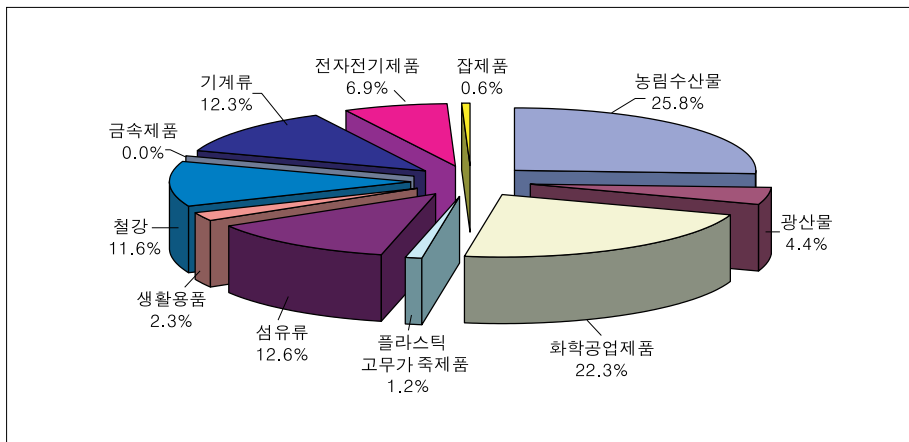
반입품목 구성비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시작과 함께 석유류의 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식량·비료 등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주요 반출품목의 비중은 쌀 등 농림수산물(25.8%), 비료 등 화학공업제품(22.3%), 직물 등 석유류(12.6%), 건설중장비 등 기계류(12.3%)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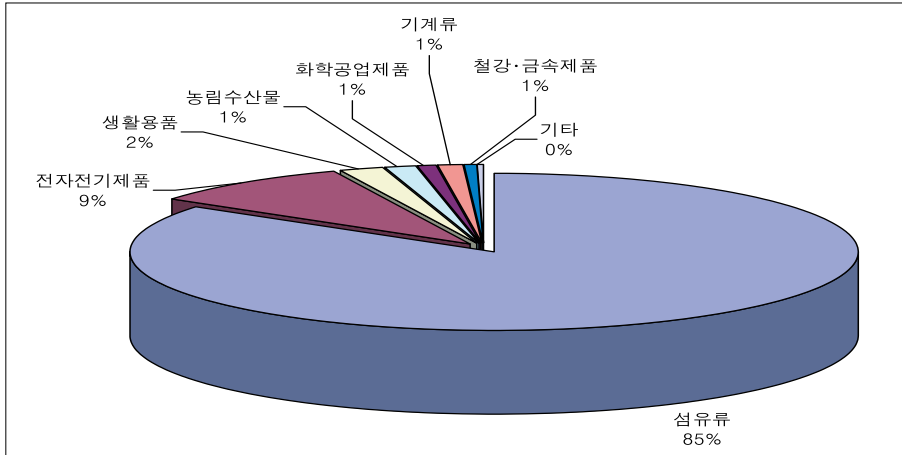
반출품목 구성비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고 북한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교역 형태이다. 2006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미화2억5,296만달러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다. 이 중 석유류 위탁가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케이블TV·전화기 등 전기·전자제품과 휴대용라이터 등 일부 생활용품도 위탁가공으로 생산되어 반입되고 있다.

위탁가공 구성비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는 2000년 157개에서 2002년 108개로, 2003년 109개로 감소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교역에 대한 관심증대로 많은 업체들이 위탁교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반출입 교역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영세업체들은 사업성 확보에 실패하였고, 규모있는 업체가 교역을 주도해 나감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재편되어 가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참여업체가 다시 확대되어 2005년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수는 136개, 2006년은 소폭 감소한 123개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및 품목 현황]

(단위: 개수)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품목수	9	35	63	83	118	108	157	216	257	284	311	217	215	243	248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109	117	136	123

2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투자보장합의서를 비롯한 13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진전된데 힘입어 민간 분야의 경제협력사업은 평양 중심의 소규모 제조업 중심에서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 임업, 경공업, 광업은 물론 IT분야로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다. 1995년 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 승인 이후 2006년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민간분야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은 총 45건에 달하고 있다.

민간분야 경제협력사업은 제조업 등 기존 승인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실적을 쌓아나가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2002년 6월 남포자동차공장 조립생산 라인 가동 이후 2006년 12월까지 총 838대를 조립하여 727대를 북한 내수용으로 판매하였다. 특히 2006년도에는 쌍용자동차 체어맨을 모델로 하여 '준마' 라는 차명으로 18대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등 생산 모델을 점차 다각화 하고 있다.



평화자동차 공장전경



태창 금강산 샘물공장 내부

2000년 공장 준공식 이후 사업이 부진하였던 태창은 2005년부터 금강산 육로를 이용하여 ‘금강산샘물’을 다시 반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 6월 추가 투자를 통해 공장 시설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제품 판매 단계에 접어들었다.

IT분야의 협력사업도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초기 투자비가 적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분야가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 의뢰하거나 중국에서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KT는 각각 2000년, 2004년부터 매년 신규과제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각각 10개, 6개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기기·애니메이션·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IT 분야에서 공동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사업의 형태와 분야도 보다 확대되고 있다. 경평인터내셔널과 아이니무역 등은 사업추진이 보다 용이한 설비제공형 위탁가공협력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일유통은 보다 장기적인 형태의 사업인 조림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일유통은 평양, 개성 등지에 느티나무, 백합나무, 이

깎나무 등을 식수하여 양묘중이며, 과수재배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 대동무역, 태림산업 등은 2006년 각각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연이은 준공식 행사 개최를 통해 북한은 남북경제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이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협력사업 추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림산업은 남포 인근의 용강석산을 개발하여 2006년 11월 상석 22개와 화강석 100여톤을 반입하기 시작했다. 광업진흥공사의 정춘흑연광산도 11월에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시운전을 마쳤다. 대동무역의 강서청산수 개발 사업도 2007년 상반기중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2006년도에는 개성공단 밖의 지역에 대해 4건의 협력사업을 신규 승인하였다. 현대아산은 6월부터 남북 경협기업간 개성을 경유한 견본품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0월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환전 등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아사달과 경기디지털 콘텐츠진흥원 등 2개 업체는 각각 디자인 콘텐츠,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 IT 콘텐츠 제작 분야의 신규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림산업 석재가공공장 작업 현장



정춘흑연광산 현장

2006년 협력사업 승인 현황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농협중앙회	명승지종합개발회사	금강산 관광지구내 금융업	금강산	'06. 5.8 ('06. 5.8)
현대아산	민경련	남북사이 왕래되는 견본품 운송사업	개성	'06. 6.22 ('06. 6.22)
아사달	삼천리총회사	디자인 콘텐츠 제작	평양	'06. 7. 5 ('06. 7. 5)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삼천리총회사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평양	'06. 8.25 ('06. 8.25)

* 주) 개성공단 제외

괄목할만한 것은 그동안 북한 내륙지역 육로 운송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활로가 개척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아산의 운송사업은 남북 기업간 경협사업을 위한 견본품을 육로로 운송함으로써 남북간 육로 운송체계가 진일보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성을 통한 견본품 송달은 해상 또는 중국을 경유한 송달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협사무소에서 확인 및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창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동해선 육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공장에서 생산된 샘물을 반입함에 따라 남북간 육로운송이 확대될 가능성을 넓혀 나가고 있다.

2. 남북관광협력사업

가.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관광은 1998년 4월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되자, 그 해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동해항을 첫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0년에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2년에 이르러 심각한 중단위기에 직면하였다. 초기 무리한 투자로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통제된 '제한관광'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공동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하고, 2002년 4월부터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 대해 관광경비 일부를 보조하였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육로관광을 조속히 실시하자고 북한에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은 2002년 12월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1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타결한 후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을 실시하였다.

한편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구책을 마련하였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당일관광, 1박2일관광 등 관광상품을 다양화시켰다. 관광코스도 기존에 운영하던 구룡연, 만물상, 해금강·삼일포코스 외에 세존봉과 수정봉코스를 추가로 운영하고, 온정각에서 금강산호텔에 이르는 소나무 숲 사이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금강산면세점 등 예정된 투자가 연기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사업의 동력을 이어가고 내실을 다지는 한해였다.

북한도 금강산호텔 2층 식당, 금강원, 목란관, 단풍관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온정리포장마차 등을 개설하는 등 현지 판매시설을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금강산 관광객의 증가로 나타나 2005년 6월 총 관광객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06년 말에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 외금강호텔과 농협 금강산지점 등이 개장되는 등 신규 시설이 확충되고 내금강 시범답사, 금강산 특구 개발종합계획 대북 협의,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면세점 승인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온정각-구룡연 구간 등의 도로와 금강산소방서 건립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다. 현지 관광시설의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치안대와 자율소



외금강 호텔 전경



남북공동 내금강 답사



농협 금강산지점 개소

방대를 구성·운영하게 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관광객 감소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업자의 지구노력과 민간단체의 “금강산 찾아가기” 운동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북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로 논란이 야기되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개성·백두산·평양 관광사업

개성관광은 2005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개성시범관광에 합의하고, 1,600여명에 이르는 우리 관광객이 고려성군관, 선죽교, 박연폭포 등 개성지역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2006년 들어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현대아산과의 갈등을 계기로 개성관광사업자 변경을 요청하며 현대와 개성관광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남북사업자간 합의 존중”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현대아산과 재협의를 모색하도록 유도해 왔다.

백두산관광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자재를 제공하고 백두산 현지 기술협력과 시범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문제로 연기되었다.

평양관광은 2003년과 2005년에 두 차례 실시되어 총 2,400여명의 관광객이 평양을 다녀왔고, 2006년도에도 “평양에서 아리랑이 진행되는 해마다 평양관광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개성·백두산·평양 등으로 남북관광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자간 협의를 지원하고 관광 확대시 필요한 방북절차 등 관련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3. 호혜의 남북경제협력

2005년 7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은 ‘호혜와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남북의 자원과 자본·기술을 결합시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가. 농업·임업협력

남북간 농업협력은 그동안 주로 민간차원의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생 산성 향상 및 농업의 자생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 사업보다는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수반한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하여 북한 농업의 근본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농업협력을 위한 협의창구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05년 6월 24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합의하였고,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은 농업분야에서 시범농장의 조성·운영, 종자정선시설 지원 협력, 농업과학 기술 분야 협력, 특용작물 분야 협력 등의 추진과 임업분야에서 양묘장의 조성 등 산림녹화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국간 농업협력사업을 견인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실적을 보유한 민간 농업협력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부터 통일농수산사업단이 추진하는 대북공동영농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 삼일포협동농장의 공동영농사업을 통해 북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이 농자재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평균 생산량이 20~30%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인근 금천리협동농장을 사업 대상지에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임업분야에서는 한반도 산림자원의 확보 및 생태환경 보전을 목표로 북한의 동·서부 양 지역에 각각 한 개씩의 양묘장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등 당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계 이앙



후기 벼 생육 상태

집중관리와 생육후기의 기상상태가 좋아져 벼 작황이 호조를 보였다. 삼일포협동농장 지역은 평균 정보당 4톤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 남한 방식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농·임업 협력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및 남북관계 진전 등을 보아가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임진강수해방지 협력사업은 90년대 후반 홍수로 임진강하류지역인 경기북부에 약 1조원의 재산피해와 1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임진강은 상류의 2/3가 북한에 위치하고, 하류의 1/3이 남한에 위치한 남북공유 하천으로 남북간 협력 없이는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은 2000년 8월 평양에서 개최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3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2004년 4월 제3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에서 단독조사 항목 및 조사용 기자재 대북 제공, 북한의 사전 자료목록 제공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적 특성, 경제적 실리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상호 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 공동조사 진행'에 합의함에 따라 2005년 8월 10일과 2005년 12월 23일에 단독조사 결과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보장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공동조사는 이행되지 못하였다.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6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을 가졌다. 우리측은 미진한 단독조사 요구, 공동조사 실시일정 확정에 주력하여 2004년 4월 합

의한 「임진강 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요구했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향후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6년 11월 임진강 유역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북한과 구체적인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2005년 7월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은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을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비롯하여 실무급 위원접촉 등을 통해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방식과 지하자원 개발의 구체적 협력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였다.

그 결과 2006년 6월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남한이 2006년부터 북한에 미화 8천만 달러분의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당해년도 3% 상환, 잔여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1%, 연체이자율 4%)으로 제공하고 북한은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경공업 원자재 대가를 상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서는 열차 시험운행 실시 등 조건이 조성되는 때에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서 채택 직후인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함에 따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여 동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다.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기술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개척 및 국내 원자재의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북한의 경

공업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남북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라. 수산업협력

수산협력은 공동어로 등을 통해 북한 수역에서의 제3국 어선 불법조업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부족한 어족자원을 보호하여, 어장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고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협력, 기술교류 등을 통해 낙후된 북한 수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서해 해상 경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완충수역을 확보함으로써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 상호이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은 2005년 7월 27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서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 및 이용, 제3국 불법어선 출입 통제 협력,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우량품종 공동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 공동진출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2006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 수산협력의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서해 경계선 등 군사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는 대로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재개하여 남북 수산협력 추진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1. 사업 개요

황해북도 개성지역 일대를 남북 합작 공단으로 조성하는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22일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100만평) 개발에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다.

1단계 330만㎡(100만평) 개발 개요

-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 사 업 비 : 2,226억원
- 시 행 자 : 현대아산(주) · 한국토지공사
- 수행방식 :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개성공단 사업은 일차적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서울에서 불과 60km 거리에 있다는 점 등으로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긴장의 대결지역을 화해와 평화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수백명의 인원과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 사업은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북한 관리들

과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원리를 학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실용주의적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성공단에는 많은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측 기업인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며 접촉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작은 통일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2003년 6월 착공 이후 3년 반의 기간동안 개성공단사업은 꾸준한 진전을 이루었다. 개성공단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한 시범단지 사업은 2006년 10월 15개 입주기업이 모두 가동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330만㎡(100만평)에 대한 부지조성은 2006년 6월 완료되었으며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내부기반시설은 200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전력(15,000kW)은 2005년 3월부터 공급 중이며 통신은 2005년 12월부터 개통하였다. 1단계 330만㎡에 대한 전력 공급은 10만kW 송전방식으로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남북간 송전선이 2006년 12월 연결되었다.

2006년도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업중단 논란이 일기도 하였지만 남북당국의 사업지속 의지와 입주기업들의 정상적 업무수행, 대내외 사업지속 요구 등에 힘입어 중단 없이 추진이 되어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초로 북한 지역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간에 협조하여 처리할 사항도 많이 발생하였다. 개성공단 출입 절차 간소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북한은 점차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 횟수를 2005년 6



시범단지 및 본단지 1차 전경

회에서 2006년 21회로 확대하고, 북한의 출입절차 수속기간을 2005년 30일에서 2006년 7일로 단축하였다. 한편 기업들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권도 확대되는 등 개성공단의 대북진출 기업들의 사업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는 만큼 정부는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북한 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개성공단이 명실공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1단계 330만㎡(100만평) 개발

가. 입주기업 가동 확대

2004년 12월 15일 (주)리빙아트가 첫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2006년 10월말에는 시범단지 15개 입주업체가 모두 가동하게 되었다.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 국면 속에서도 7,400만 달러를 생산하여 2005년 생산액 1,490만 달러에 비해 4.9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1,900만불 가량의 생산품을 중국, 호주, 러시아,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하였다. 이는 2005년 수출액 860만불에 비해 2배 가량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2006년 11월에는 개성공단 근무 북한측 근로자가 10,000명을 돌파하였다.

분야별 추진 일지

구 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 조치	○ 현대-北아태간 총66,116천㎡(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 현대·토공-북한간 개성공단 100만평 토지임차료, 지장 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4.13
	○ 토공, 시범단지 9만3천㎡(2.8만평) 분양 공고	'04.5.18
	○ 한전, 시범단지 전력공급 개시(1.5만kW)	'05.3.16
	○ 토공, 본단지 1차 17만㎡(5만평) 분양공고	'05.8.1
	○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05.12.28
	○ 1단계 330만㎡(100만평) 토지조성공사 완료	'06.6.29
	○ 한전,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06.12.21
북한 조치	○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02.11.20
	○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03.4 - '06.11
	○ 관리위 북한측 협력부 근무 시작	'05.11.22
	○ 북한측 통행검사소 신축 건물 개소	'06.5.22
남북당국간 합의	○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02.12.8 ('05.8.1 발효)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험합의서 발효	'03.8.20
	○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04.1.29('05.8.1 발효)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4.23
	○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6.14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5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개소	'04.10.20
	○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04.12.15
	○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05.6.3
	○ 주한 EU 상공회의소 개성 방문	'05.11.2
	○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05.12.5
	○ 버시바우 미국 대사 등 주한 외교단 방문	'06.6.12
	○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개 완전가동	'06.10.31
○ 북측 근로자 1만명 돌파	'06.11.21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업체명	주요 생산제품	업체명	주요 생산제품
로만손	손목시계	소노코쿠진웨어	주방기기
신원	의류	호산에이스	공조기 부품
삼덕통상	신발	재영솔루텍	자동차 부품 금형
태성산업	화장품 용기	매직마이크로	LCD 모니터
부천공업	전기배선부품	T.S 정밀	반도체 금형부품
대화연료펌프	자동차 연료펌프	용인전자	트랜스포머
SJ테크	반도체부품 용기	제씨콤	광통신 부품
문창기업	의류		

2005년 8월 분양한 1차단지 17만m²(5만평)에는 총 24개의 업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을 받았다. 2005년 12월 (주)평안이 1차단지 입주업체 중 처음으로 공장건축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9월 29일에는 코튼클럽이 첫제품을 출시하였다.

1차단지 입주기업 현황

구분	업종	회사명
일반 공장용지	섬유봉제의류	성화물산, 서도산업, 좋은사람들, 엠엔에스, 진글라이더, 아이보리, 코튼클럽, 평안, 제일상품, 녹색섬유, 에스엔지 (11개)
	가죽가방신발	아트랑, 밀리온스, 평화제화(3개)
협동화 사업단지	섬유봉제의류	만선, 한국마이크로휠터, 화인레나운(3개)
	가죽가방신발	삼덕통상, 영일신소재, 영화상사(3개)
아파트형 공장용지	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기반시설 확충

(1) 내부 기반시설 공사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에는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내 시설(도로, 상·하수도, 조경, 특수시설물) 등 내부 기반시설과 전력·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이 있다. 정부는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의 본격적 가동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내부 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여 시공하고 있다.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장기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용수시설은 개성공단 북쪽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6만톤(개성시 공급분 1만 5,000톤 포함)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시행하는 저수지 축조와 도·배수관로는 2005년 11월에, 우리가 시행하는 정·배수장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였다. 2006년말 현재 북한측 공사는 85%, 우리측 공사는 43% 공정을 보이고 있어 2007년 상반기에는 공사완료 및 통수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폐수처리시설은 1단계지역 26,446㎡(8천평) 부지에 하루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되며, 그 중 하루 처리규모 1만 5,000톤 시설을 우선 건설하기로 하고 2005년 4월에 착공하여, 2006년 말 현재 90%의 공정이 진행되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1단계지역내 16,528㎡(5,000평) 부지에 매립시설 20만 4,000톤, 소각시설 하루 40톤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단지내 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는 2004년 8월에 착공하여 2006년말 현재 90% 진척을 보이고 있다. 교량 등 특수시설물은 2005년 10월에, 근린공원·체

내부기반 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현 황	완 공
폐수처리장	3만톤/일	'05.4 착공	'07년 상반기
용수시설	6만톤/일	'05.12 착공	'07년 상반기
폐기물 처리시설	40만톤/일	'05.12 착공	'07년 상반기

육공원 등 조경시설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단지 내 시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단지 및 1차단지 17만m²(5만평)은 본단지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하수 개발, 임시폐수처리장 설치, 폐기물 위탁처리, 진입도로 우선 건설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2) 외부기반공사

2004년 12월 3일 남북간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2005년 1월 배전시설(1만 5,000kW)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16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본단지에 대한 송변전시설(10만kW) 공사도 추진하여 2005년 4월 송전경과지 노선을 확정하고, 2006년 4월 송·변전 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 12월 21일 남북간 송전선로를 연결하였다.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시험 및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5월부터 개성공단의 전력을 배전방식이 아닌 송전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송변전 사업 개요

- 송전선 16km(남10.5km, 북5.5km), 첩탑 48기(남33개, 북15개), 변전소 1기
- 공급량 : 10만kW (154kV)

2004년 12월 KT와 북한측 조선체신회사는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양측은 요금, 정산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하여 개성공단에서 우리측으로 통화요금을 1분당 40센트로 결정하였다. 2005년 3월 24일에는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통신공급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KT에서는 개성공단과 군사분계선 인근 통신망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 7월 18일 남북간 민간차원의 최초 광케이블 접속을 하였으며, 2005년 11월 17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한 재수출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2005년 12월 28일 228회선을 개통하였다.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은 기존의 금강산 통신과 같은 제3국 경유 방식과 달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을 직접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006년에는 개성공단 본단지 통신공급을 위해 북한과 본격적인 통신협상을 추진하면서 통신센터 건립 부지 9,917m²(3,000평)를 확보하여 센터건물 건축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향후 원활한 통신공급을 위해 330만m²(100만평)내 통신관로 건설을 추진해 98%의 공정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본단지 대규모 통신공급을 위해 인터넷 조기 도입, 전용회선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환경이 국내수준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성공단에는 제품 제조, 취사, 난방목적의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2곳에서 입주업체, 관리위, 한국토지공사 등에 공급하고 있다.

3. 안정적인 사업 추진기반 구축

가. 법·제도 정비

북한은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이후 2006년 말까지 총 16개의 하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2005년에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을 제정한데 이어 2006년에는 「자동차관리규정」, 「환경보호규정」을

제정하였다. 「자동차관리규정」은 개성공단 본격 가동으로 차량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내 차량등록 절차와 자동차 운행질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규정」은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이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관련 법제도 구축은 남북 어느 일방의 법제도 적용이 아니라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협력의 대표적 예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사업준칙이며,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은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사업준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2006년말까지 「외화관리준칙」, 「통계준칙」등 공단 관리와 운영을 위한 33개의 사업준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남북 당국간 체결된 4대 경협합의서 및 「개성공업지구 통관·통신·검역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서는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제도적 틀로서 작용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05년부터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는 총 10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업지구 하위규정 및 시행세칙, 관리위원회 사업준칙에 대한 자문과 개성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의 처리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초기 법제 구축 과정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개성공단 법제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전문 연구단체의 법제구축 세미나를 지원하는 등 개성공단 법제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저변을 확대하였다.

향후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북한 법제도의 확충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

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 또한 시급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법제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토대 위에서 개성공단사업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나. 지원 체계 강화

(1) 개성공단 관리체계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현지에 설립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 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006년 12월말 현재 위원장 1명, 상근이사 1명, 기획조정실, 사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협력부, 서울지사 등 1실 4부 1지사 총 5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부에는 5명의 북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사무실로 개성공단 시범단지 인근에 부속건물을 포함 3,801㎡(1,150평) 규모의 임시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2009년말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개성공단 관리기관으로서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2004년 10월 통일부의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통일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9개 정부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며, 노무관리·통행·통관절차 등 각종 제도수립, 입주기업 지원, 투자유치, 기반시설 건설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6년에도 범정부차원에서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입주기업 지원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공단지원시설 설치·운영

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은행, 의료시설, 식당, 편의점 등이 입주해 있다. 2004년 12월 1일 관리위원회 임시청사내에 지점을 개점한 우리은행 개성지점은 2005년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하여 송금 및 환전, 예금 및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남한측 인원 2명, 북한측 인원 3명 총 5명이 근무중이다.

의료시설로는 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 개성병원(2005년 1월 10일 개원)을 운영해오다가 2006년 12월 1일 개성공단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이 완공되어 2007년에는 남북의 의료진이 한자리에서 의료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식당과 편의점을 통해 식사와 각종 생필품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005년 2월 소방대를 창설하여 소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대는 남한 인원 2명과 북한 소방대원 11명으로 구성되어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10톤급 물탱크 소방차 1대, 고가사다리차, 소방지휘차, 5톤급 화학펌프차 1대와 소방복,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화재예방 및 화재진화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교육센터, 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시설 설립을 추진중이다. 기술교육센터는 2006년 7월 착공하였으며 2007년 준공하여 북한 근로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센터는 연건평 29,752㎡(9천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개성공단 투자유치 및 경영지원, 전시·판매·컨벤션 및 홍보, 각종 편의시설, 사회문화교류센터 등 복합적인 공공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07년 하반기

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 '대화구조' 확충

개성공단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전문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방위적 정책공동체를 형성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포럼,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개성공단사업협의회, 입주기업대표자간담회 등이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공동체이다.

개성공단포럼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로 사업관련 「총괄」, 「인프라」, 「분양전략」, 「인력·문화」 등 4개 하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개발사업자, 지원기관 등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 한해 동안 전체회의 4회 등 총 6회의 회의 및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개성공단사업 추진 관련 정책 수립시마다 지문을 하였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유관기관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통일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기관 4개 부처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산업은행, 산업단지관리공단,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12개 민간 유관기관 등 총 1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에는 전체회의와 상시 실무협의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개성공단사업협의회는 개성공단 사업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현안을 협의·해결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로서, 관리위원회와 지원단, 그리고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참여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을 협의· 해결하였다.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시범단지 입주기업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채널이다.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공장건축, 제품생산 등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지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 개성공단사업 이해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대

2006년 개성공단을 방문한 인원 및 횟수는 2005년에 비하여 질적,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우선 2006년 한 해 동안 개성공단을 방문한 인원은 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2005년도에는 준공식 또는 착공식 행사 참석을 위한 방문이 주를 이루어졌으나, 2006년에는 각종 투자시찰단, 정치인, 국회, 학자 등 사회 각계각층이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26명의 국회의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예결위, 법사위, 평화특위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국내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방문도 증가하였다. 2005년 외국인들의 개성방문은 EU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이 전부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연초부터 외신기자단 50여명의 방문을 비롯하여 미국 민주당 짐 맥더못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의원 및 보좌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파울 호이네스 주한 덴마크 대사, 아세안 FTA협상단, EU의회 및 집행위원회 등 총 399명의 외국인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해외언론 중에서도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언론들만이 아니라 AP, AFP,



개성공단을 방문(2006년 9월 23일)한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

WP, 로이터, 르몽드, 미국 PBS, 알 자지라 등 전세계 유수의 언론사가 개성공단을 방문하였다.

2007년에는 학계, 언론계, 종교계, 해외 주요인사 등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기획방문을 추진하여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외적인 이해를 보다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원 대책 추진

가. 노무관리 지원

(1) 직무교육

입주기업은 북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에 인력공급을 신청하고, 총국은 개성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공급하고 있다. 기업은 총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기능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합 인력을 최종 선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신규로 채용한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2~3개월 동안 우리 기업문화와 생산장비 등에 대한 기초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학습능력이 우수하여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교육시설이 없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강당 등을 이용하여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실습교육을 다시 해야하는 실정이다.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북한근로자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신규로 채용되는 북한 인력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기술교육센터는 연건평 11,570m²(3,500평)의 3층 건물로 연간 4,000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는 규모로 2006년 7월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기술교육센터가 운영될 경우 북한 근로자들에게 기초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교육도 가

능하여 북한 인력의 우리 기업문화에 대한 조기 적응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기에 양성·공급할 수 있게 되어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조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정부와 협조하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노동준칙, 노동안전준칙 등 관련 규범들을 만들어 북한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식시간시 체조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샤워실·의료시설·체육시설 설치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일반 근로자들의 다수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성공단을 방문한 주한 덴마크대사, 미국의회관계자 등은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노동착취업소의 근로조건과는 전혀 달랐다. 개성공단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물리적 환경은 세계 곳곳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때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한국 정부가 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국 정부 관계자들도 개성공단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새로운 북한 인권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Solution)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있다. 남북간 합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노래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

사항인 임금직불제는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12차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제2차 개성공단실무접촉협의 등 당국간 협의시마다 북한이 임금직불제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직불제를 비롯하여 북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북한 당국, 기업·근로자간 상호 협력을 통해 하나씩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2004년 5월부터 2006년까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모두 82건으로 우리측 근로자 29건, 북한 근로자 53건이 발생하였다. 우리측 근로자들의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들은 기계 조작 실수, 경험 미숙 및 호기심에 의한 임의 조작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노동부와 협조하여 산업안전전문가를 관리위원회에 파견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건설현장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건설현장과 프레스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고예방 강조의 달”도 운영하였다. 아울러 산재예방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안전준칙」 제정을 북한과 협의중이다.

나. 물자 반출 문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자재 반출과 관련,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사용,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다자간 국제협약인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협약(WA) 등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이행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국내기업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개성공단으로의 물자 반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오고 있다.

개성공단에 반출된 컴퓨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06년 3월 24일 통일부 고시인 「개성공업지구반출컴퓨터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정기적 점검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1년 이내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이전에 재반입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컴퓨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정부는 미국과 수출관리규정(EAR)상의 수출통제품목 반출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EAR 규정 준수의 필요

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5년 11월 KT의 개성공단 전화 개설을 위한 통신장비에 대해 EAR 규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았고 이후 2006년 10월 입주기업 J사의 재단장비에 이어 12월에는 무선인식기술(RFID) 시스템구축 사업시행자인 에스원도 관련 장비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EAR에 따른 license를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반출 물품 중 미국 EAR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련 절차를 밟아 투명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 원산지 및 판로확보 문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체제가 완비될 경우 생산 제품의 판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2004년 11월 타결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선례로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2005년 7월에 타결되고 2006년 9월 1일 발효한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FTA 및 2006년 8월 24일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한 한-ASEAN FTA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협상은 2006년 6월 5일 1차 협상을 시작하여 12월 4일 5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역외가공 인정 문제협의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별 국가와의 FTA협상과 별도로 원산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현재 94개 핵심 정책이슈에 대해 논의중인 통일원산지규정 협상동향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2006년 9월 12일-17일, 스위스)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종과 공정을 발굴하여 향후 분양될 입주 업종과 입주기업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신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전」 등 국내외 유명 전시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참가를 유도하여 개성공단을 알리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의 범국민 지지도 제고를 위해 '개성공단제품 1일 판매 및 전시전' 을 2006년 12월 8일 국회에서 8개 입주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여야 의원 및 방문객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06년 중국 상해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전」에 개성공단관 설치

라. 입주기업 금융지원

정부는 공단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환경 및 초기시설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보통 3년거치 5년상환, 기준금리는 국고채 3년물)로 남북 협력기금을 입주기업에 대출하였다. 2004년에 분양한 시범단지 15개 입주기업중 14개 업체에 대한 대출금액을 살펴보면 2004년 321.4억원, 2005년 62억원, 2006년 87.7억원 등 3년간 총 471.1억원(업체당 평균 33.7억원)이다.

또한 2005년에 분양한 1차단지 23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시범단지과 같은 조건으로 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2006년 말까지 14개 업체에 304억원을 대출승인하고 그중 10개 업체에 132억원을 집행하였다. 2007년도에는 아직 미착공상태인 기업들이 공장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대출수요가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입주기업 증가시 남북협력기금 대출로는 한계가 있고 시장경제 논리로 점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향후 입주기업으로부터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 금융기관이 입주기업에 대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남북당국간 합의로 추진되는 사업, 공공시설물 건축 등 신용보증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마. 남북간 통행절차 간소화

1단계 시범단지 및 본단지 1차 17만㎡(5만평) 입주기업 공장의 생산기동이 확대되는 등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원과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행량의 증가에 따라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남북관리구역의 통행방법도 남북간 합의를 통해 1일 입출경 횡수를 2006년 초 14회에서 5월부터 21회까지 늘렸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인 복잡한 육로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역점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무선인식기술(RFID)을 바탕으로 인원, 차량, 주요 물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통행·통관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였다.

2005년 시범사업에 이어 2006년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U-IT선도사업 본과제로 선정되어 정보화촉진기금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RFID 기반기술을 이용한 개성공단 통행·통관 및 물류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북한 방문증명서와 관리위원회의 출입증을 하나의 RFID전자증명서로 일원화하고, 통일부의 차량운행승인서와 관세청의 통행차량증명서 및 관리위원회의 차량통행증을 하나의 RFID카드로 대체하여 인원 출입 및 차량통관 심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EAR) 승인대상 품목 등 주요 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시 물품관리 태그를 부착토록 하여 반출입 및 사후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성공단 물류시스템에서는 관세청 제출서류인 적하목록 및 출도착보고서를 운송의뢰 정보로부터 자동으로 생성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인원·차량·물자에 대한 통행·통관 등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물류비의 절감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통행을 위해 인원 출입시 우리측 출입사무소에 제출하던 출입신고서를 생략하는 조치를 10월부터 시행하였다.

북한은 5월 현대적 X-ray 검사 장비를 구비한 통행검사소(CIQ)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출입심사 및 통관검사가 보다 신속하게 되었다. 또한 긴급 물자반출제를 시행함으로써 긴급한 경우에는 반출당일 신고 후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리위원회 - 세관」간 합의를 통해 기존의 패키리스트(P/L) 및 인보이스(C/I)를 생략하고 물자반출입신고서 1장으로 대체하여 신고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다.

2006년 12월 美 상무부측으로부터 개성공단 RFID 시스템 장비에 대한 EAR 승인을 받음으로써 북한측 통행검사소(CIQ) 및 개성공단 내에 관련 장비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북한 지역까지 RFID시스템이 확대 구축되면 남북 출입시스템을 연계한 인원·차량·물자에 대한 출입심사 및 추적관리가 보다 용이해지고, 주요물자 사후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향후 늘어날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 및 개성관광 등 육로 통행수요에 대비하여 남북군사당국간에 협의 중에 있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조기에 체결하여 육로통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물류창고 및 철도·항만·공항을 연계한 개성공단 물류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북아 물류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바. 질병 예방 및 환경관리

2006년에는 개성공단내 질병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인성 및 식품위생 예방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보건전문가 파견 등 말라리아 환자발생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개성공단 보건위생 전문가 파견 및 전염병 발생 보고체계를 위한 사업장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염병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장 개인위생교육과 응급환자를 위한 전문가 초빙 응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개성공단 내 말라리아 모기채집을 위한 유문 등을 설치하고 매주 1회 얼룩날개모기 개체수 확인 및 유충검사를 통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다. 환자관리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응급환자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따라 입경조치하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친환경적 산업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한측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 평가」에 준하는 환경보호계획을 북한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조성과 운영 단계별 '환경영향 저감방안' 과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등 오염매체별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등을 포함한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조성사업 환경보호계획」을 2005년 12월 15일 남북이 합의하고 관리 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개성공단이 친환경적 공단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4절 남북간 수송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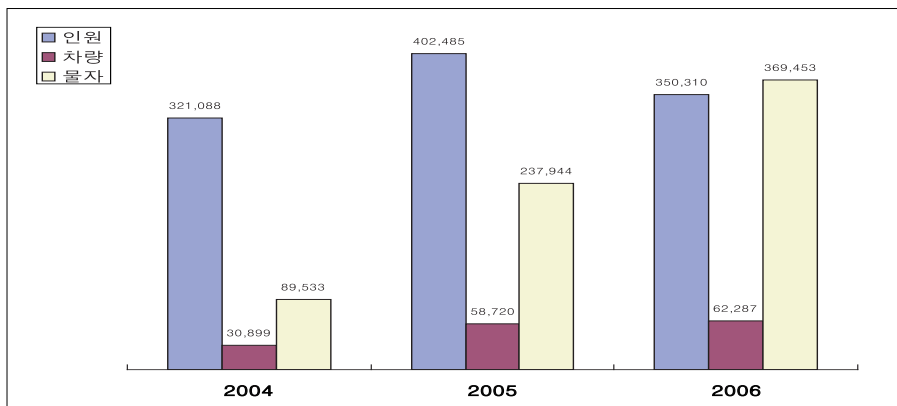
1. 육로

가. 남북 육로출입 현황

2006년 육로이용 방북인원은 금강산관광객 23만4,446명을 포함하여 35만310명으로 2005년도 40만 2,485명보다 약 13%가 감소하였다. 이 같이 육로출입인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객이 대폭 줄어든 데 있다. 육로방북은 경제협력분야 97.1%(금강산관광사업 73.2%, 개성공단사업 16.8%, 사천강 모래반입사업 4%, 철도·도로연결사업 1.1%, 기타 2%), 대북인도적사업 분야 2%,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 분야 0.8% 순으로 이루어졌다.

경의선 도로를 통한 육로방북은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 경협협회의 등 개성지역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2005년 대비 26% 증가한 8만 4,152명이었다. 동해선에서는 금강산관광객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26만 6,158명이 출입하였다.

남북 육로출입 현황



2006년도 육로출입 차량은 경의선 4만 7,563대, 동해선 1만 4,724대 등 총 6만 2,287대로 2005년도 5만 8,720대 보다 약 6% 정도 증가하였다. 차량은 경제협력 분야 93.1% (개성공단 사업 46%, 사천강 모래반입사업 22.1%, 금강산 관광사업 15.5%, 철도·도로 연결사업 3.2%, 기타 6.3%), 대북인도적 사업분야 6.4%, 사회 문화교류 협력사업분야 0.5% 순으로 나타났다.

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남한측 구간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북한 구간은 철도 역사건축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로의 경우 2003년 10월 경의선이 연결되었고, 2004년 10월 동해선 마지막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그해 12월 1일부터 남북간 정상 이용중에 있다. 철도의 경우, 우리측 구간 경의선은 2002년 12월 공사가 완료하였으며, 동해선은 2005년 12월 본선 궤도 부설 등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북한 구간은 경의선, 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역사건축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남북철도연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2006년 상반기내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개통을 목표로 남북 당국간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추진하였다. 2006년 5월 11일과 12일에 개최된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남북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5월 24일 쌍방 군사당국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열차시험운행을 예정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5월 2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한측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쌍방간의 합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2006년 6

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경공업 원자재 지원 문제와 열차 시험운행 실시를 연계시킴으로써 2006년 하반기 중 행사 개최를 위한 이행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10월 핵실험으로 인해 철도 자재 제공 및 기술지원이 잠정 중단되었다. 정부는 철도연결사업 재개를 위한 모멘텀 및 공사현장 유지를 위한 감리인원 정례 파견 등의 최소한의 현장관리 조치만을 시행중에 있다.

향후 남북간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남북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남북출입시설 신축

본격적인 남북간 육로통행시대에 대비하여 경의선 및 동해선의 본 출입시설을 조속히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북출입시설 건설은 남북간 물류확대 및 수송비 절감과 더불어 한반도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인 효과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남북출입시설 신축사업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총사업비 2,746억원(경의선 1,525억원, 동해선 1,221억원)을 의결하여 추진하였다. 남북출입시설은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고객 편의중심의 공간배치 및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2004년 9월 23일 경의선 지역 본 출입시설 건물 착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라산 지역에 약 44만㎡, 동해선 제진 지역에 약 38만㎡의 철도·도로 출입시설이 형성될 예정이다.

2005년 12월 도로 본 출입시설 완공, 2006년 4월 철도 본 출입시설의 완공으로 출입·통관·검역 등 분야별 출입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공간이 확보되었다.

남북 출입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임시 출입시설에서의 출입업무 수행에 따른 대기공간, 편의시설 부족 등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되었다. 현재 도로를 이용한 남북간 반출입 화물과 차량 및 인원 에 대한 출입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철도를 통한 남북출입업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철도·도로 본 출입시설 완공에 이어, 육로를 통한 반출입 화물 및 통행차량 등의 통관업무와 각종 병해충의 유입방지 등 동식물 검역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용야드를 조성 중에 있다. 공용야드에는 세관창고 및 식물 검역 창고, 동물 검역 및 계류 시설과 기타 관리 및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경의선은 2007년 11월, 동해선은 200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2. 해운 및 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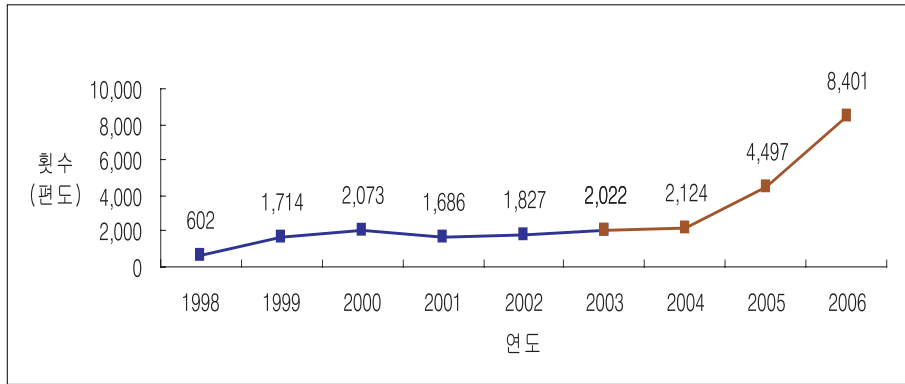
남북간 안정적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고 해운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5월에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2005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와 북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홍남, 청진, 나진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었으며 지금까지 제3국 국적선이 운항하던 남북간 항로에 남북의 국적선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은 해운합의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05년 8월에는 남북해사당국간 전화 및 모사전송 등 2회선의 유선통신망을 가설하였으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상호 교환하였다. 또한 2005년 9월에는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로서 남북해운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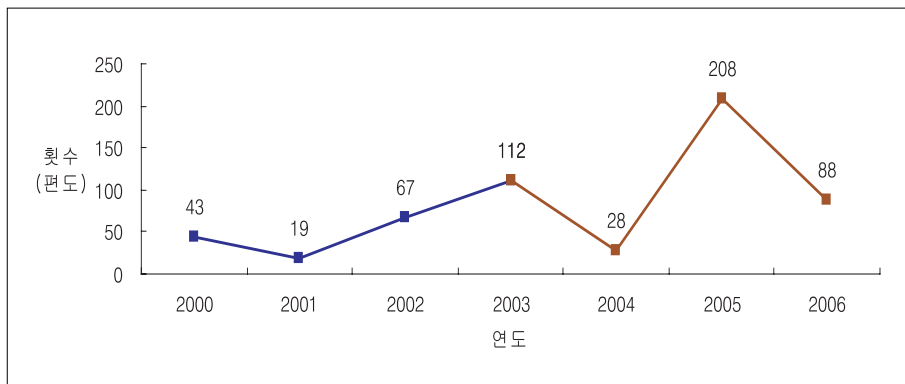
2005년 8월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가 2006년 4월 24일 발효됨으로써 북한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해상항로대가 추가 설정되었다. 2006년 8월에는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남북간 주요항만의 항비 관련 자료를 교환하였다.

2006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8,401회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측 선박의 북한으로의 운항은 8,363회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고, 북한선박의 남한측 해역으로의 운항은 128회이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2006년 12월까지 북한선박은 남한측 해역을 총 173회 운항하였으며, 이중 남북 항구간 운항은 37회이며, 북-북 항구간 운항은 136회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왕래의 현황



남북항공기 왕래의 현황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최초로 서해상의 남북 직항로로 인천-평양 사이를 운항한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6년 7월 이후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2006년 한해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편도기준 88회로 다소 감소하였다. 2006년 5월에는 남북간 운항항공기의 이용공항을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북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남북사회문화협력의 확대

III

제1절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제2절 주요 남북공동행사

제3절 분야별 교류

제4절 계층별·지방자치단체 교류

사회문화교류는 그 분야가 다양하고 남북간 주민의 참여 폭이 넓다는 점에서 남북 상호 간의 공감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는 민간 및 당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MINISTRY OF UNIFICATION



III

남북사회문화협력의 확대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과의 접촉과 왕래를 통해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과 같은 경제분야와 함께 교류협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회문화분야 교류이다.

사회문화교류는 교류 분야가 다양하고 남북간 주민의 참여 폭이 넓다는 점에서 상호 공감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는 민간 및 당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사회문화교류는 양적·질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전년도인 2005년도는 왕래인원과 협력사업이 대폭 증가한 해였다. 2006년은 북한 수해피해 및 북핵실험으로 인해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8.15남북 공동행사와 아리랑축전 등 대규모 왕래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체적인 교류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다소 소강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민간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에는 4,324명(2005년도 10,777명)의 남한주민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293명(2005년도 675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특히, 북관대첩비 환수 및 북한으로의 반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남북공동 현지조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은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지원, 남북당국의 지원합의가 상호견인 역할을 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의 민관 협력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1절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은 종교, 문화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이 상호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이다.

사회문화협력사업은 참여의 폭이 넓기 때문에 남북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는데에 기여하고 상대방인 북한에게도 개방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민간교류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에서도 화해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완충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규모면에서도 크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류분야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2005년의 협력사업 승인건수는 47건으로, 이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년간 협력사업 승인건수 47건과 맞먹는 수치이다. 2006년에는 총 26건의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남북간 체육분야 협력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북 강원도 주관으로 춘천에서 아이스하키 친선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남북간 동계 스포츠 협력이 성사되었다.

남북 문화재관련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평양 안학궁터 남북공동발굴조사,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성역사유적 남북공동발굴조사 협력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북한 소재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북한 문화재 특별전」이 진행되는 등 남북간 문화재 보존을 위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다.

2006년은 남북은 물론 지구촌이 월드컵 열기로 가득했던 해였다. 남북한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았으나, 북한 축구대표팀이 본선진출에 실패해 아쉬움이 있었다. 남북동반 본선진출은 무산되었으나, 우리는 북한에게 월드컵 경기 위성중계를 실시하여 월드컵을 통해 남북이 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2005년 이후 남북 당국이 지원하기로 합의한 협력사업의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민관협력의 남북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북관대첩비를 일본으로부터 환수받아 2006년 3월 1일 개성을 통해 북한에 반환하였다. 안중근 의사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송환하기로 합의한 사업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남북은 중국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5년도 합의 이후,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사전편찬 공정은 20%가량 진행되었다.

2006년 남북사회문화협력은 6.15남북공동행사 개최,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협력과 청년학생·노동자 등 계층별 협력,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협력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2006년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현황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민족화해협의회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개최	'06.2.22 ('06.2.22)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임종석)	북한 저작권사무국, 민화협	북측 저작권 대리·증개사업	'06.3.14 ('06.3.14)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 (대표자 구대열)	북한 조선의학회, 민화협	북한 보건관련 학술회의 개최	'06.3.15 ('06.3.15)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남측위원회(위원장 강만길)	북한 민화협, 문화보존지도국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	'06.4.3 ('06.4.3)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김정배)	북한 민화협, 문화보존지도국	고구려 유적 남북공동조사 - 평양 안학궁터 남북공동 발굴조사	'06.4.10 ('06.4.10)
▲(사)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 (대표 임종석)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금강산가극단』	6.15 공동선언 6주년기념 금강산가극단 특별공연	'06.4.14 ('06.4.14)
▲(사)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 (대표 임종석)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 앨범 '비약' 제작	'06.4.14 ('06.4.14)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박재규)	북한 민화협,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 등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공연	'06.4.14 ('06.4.14)
▲월간『민족21』 (대표 안영민)	북한 통일신보사	북한 통일신보사와의 기사교류 및 방북취재	'06.4.18 ('06.4.18)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및 공동단행본 발간	('06.5.9)
▲민족화해협력범국민 협의회 (대표 정세현)	북한 민화협	2006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	'06.4.19 ('06.4.19)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위원장 강만길)	북한 민화협	북한 문화재 특별전	'06.4.25 ('06.4.25)
▲광복회 (대표 김국주)	북한 당국 (단장 전중수)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	'06.5.16 ('06.5.16)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대표 최병모)	북한 민화협	남북교육협력사업 (연구기자재 지원 및 학술교류)	'06.5.29 ('06.5.29)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한국권투위원회 (대표 박상권)	조선프로권투협회 (서기장 염정환)	제4차 남북프로권투대회 (금강산 온정리 개최)	'05.3.22 (06.6.1)
(주)뉴보텍 (대표 한승희)	북한 조선영화수출입사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06.6.7
▲ 민족 화 해 협 력 범 국민회의회 (대표 정세현)	6.15북측위원회	2006 『6.15민족통일대축전』행사 (2006.6.14~6.17)	'06.6.7 (06.6.7)
▲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소장 유명대)	북한 대외전람총국, 출판물교류협회	북한 전통문화 기록화 사업	'06.6.9 (06.6.9)
▲ 방송위원회 (위원장 노성대)	북한 조선중앙방송 위원회	2006 독일월드컵경기 대북 위성중계 지원사업	'06.6.12 (06.6.12)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북한 민화협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성역사유적 남북공동발굴조사 - 개성역사유적 보수관리를 위한 물자지원 추가	'06.6.20 (06.6.20) (06.7.6)
▲ 6.15민족문화인협회 결성을 위한 남측조 직위원회 (대표자 고은태)	6.15민족문화인협회 결성을 위한 북측조 직위원회	6.15민족문화인협회 결성식 - 06.7.29~30, 금강산 - 6.15민족문화인협회 결성식, 문학의 밤 행사, 홍보물 및 자료집 발간 등	'06.7.27 (06.7.27)
▲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 (06년~09년)	'06.8.9 (06.8.9)
▲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북한 민족 화 해 협의회	재북 임시정부요인 묘소 성묘사업	'06.9.25 (06.9.25)
▲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박재규)	윤이상음악연구소 대외사업처	평양 윤이상음악제 참가 및 협연	'06.10.9 (06.10.9)
▲ (사)남북체육교류협회	4.25체육단	태국 차야퐁컵 국제친선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참가(06.10.22~10.29)	'06.10.18 (06.10.18)
▲ (사)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주종환)	개성지역특구개발 지도총국	『제2차 개성지역 청소년평화통일 숲 가꾸기』 ①2006.11.18~12.9(약800여명), 은행나 무 1만그루 ②2007.3.20~6.20(약4,000여명), 미루 나무 50만그루	'06.11.24 (06.11.24)
▲ (사)한민족어깨동무 (이사장 조영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북한 처소교회 지원을 위한 밤나무숲 조성 사업(06.12~11.12)	'06.12.4 (06.12.4)

주) ▲는「협력사업」승인까지 받은 단체

제2절 주요 남북공동행사

1. 6.15 공동행사

6.15 남북공동행사는 200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5년 남·북·해외 3자로 구성된 협의체 결성 이후 2006년에는 6.15공동행사추진주체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공동위원회)체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 6.15공동행사인 6.15공동선언 발표 6주년 기념 「6.15민족통일대축전」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남한 지역에서 개최된 공동행사는 대체로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2004년 6.15공동행사는 이례적으로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도 6.15공동행사「우리민족대회」가 개최되었던 인천이 수도권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006년 광주개최는 6.15공동행사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공동행사의 지방확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된다.

「6.15민족통일대축전」에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당국과 남·북·해외의 민간이 함께 참여하였다. 북한에서는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대표단 128명과 김기남 단장을 비롯한 당국대표단 19명이 참가했으며, 우리측에서는 백낙청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대표단 469명과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당국대표단 13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해외측위원회에서는 문동환·곽동의 공동위원장 등 145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본 행사는 개막식, 축하공연, 민족통일대회, 부문별 상봉, 남북예술공연, 체육오락경기, 폐막식, 목포 유달산 및 광주학생운동기념탑 참관 순으로 진행되었다. 6.15공동위원회는 행사 기간중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축전에서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교육 등 각 사회 부문별로 대규모 상봉행사를 개최하여 공동행사 대중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6.15민족통일대축전



6.15민족통일대축전 축하공연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가하여 축하연설을 함으로써 행사의 의의를 높여주었다. 행사기간중 남북 당국대표단은 5.18국립묘지 참배, 개·폐막식, 시내참관 등에 참가하였고 별도의 당국기념행사 및 대표단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당국기념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비공식 좌담회라는 새로운 방식의 당국간 접촉을 통해 쌍방 당국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6년 「6.15민족통일대축전」은 열차시험운행 지연이라는 남북간 상황 악화 속에서도 대규모 민간·당국 공동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남북공동행사의 안정화·정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점, 당국차원에서 당국기념행사 및 좌담회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의 계기를 마련한 점을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6.15민족통일대축전」 기간에 북한의 민간대표단 대표인 안경호 단장이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여 행사기간중 비난여론이 있었으며, 안경호 단장은 행사를 마치고 광주를 출발할 때 발표한 출발성명에서 남한의 부정적 여론을 비난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환담시간을 통해 북한 안경호 민간대표단장에게 북한의 내정간섭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의 민간 및 당국대표단은 북한 대표단과의 접촉 및 대변인 논평, 대언론 설명을 통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해명을 요청하였다. 북한 대표단의 광주 출발성명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공동행사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 8.15 공동행사 및 아리랑 공연 방북 취소

2006년은 아리랑공연 참관을 위한 대규모 방북이 성사되지 못했다. 「6.15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는 7월 30일 팩스를 통해 수해피해로 인해 아리랑공연을 계획대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해옴에 따라 아리랑공연은 취소되었다. 아리랑공연 대규모 참관방북 취소에 이어 곧바로 「6.15공동위원회 북측위원회」는 수해피해로 8.15공동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6.15공동행사와 함께 대규모 남북 상호 왕래행사의 양 축을 이뤄왔던 8.15공동행사가 무산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제3절 분야별 교류

1. 체육교류

2006년 남북 체육교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의 영향으로 2005년에 비해 직접적 교류가 다소 저조하였으나,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교류협력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를 비롯하여 국제대회에서의 남북 동시입장, 태권도 통합논의, 권투교류 정례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서울총회 북한대표단 참가 등이 성사되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2005년 12월 북경 제1차 회담에 이어 2006년에 두 차례나 개최됨으로써 단일팀 구성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 6월 개성에서 열린 제2차 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제1차 체육회담에서 이견을 보였던 선수단명칭, 단기, 단가 등에 합의하는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수단 선발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여 차기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3차 체육회담은 2006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제15회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회담에서는 핵심쟁점인 선수선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향후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제대회에서의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은 2006년 2월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12월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 등 두 차례나 성사되었다. 특히 도하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공동입장은 북한의 핵실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사됨으로써

2002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8차례 진행되어온 남북 공동입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제15회 도하아시안게임 개막식 남북 동시입장

남북 태권도 통합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 해였다. 2006년 2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 : World Taekwondo Federation)과 국제태권도연맹(ITF :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총재간 태권도 통합관련 의견교환이 있었다. 2005년 두 차례의 실무회담 이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권도 통합을 위한 실무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11월 제4차 실무회담에서는 ‘태권도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이던 양 기구간의 통합논의에 탄력을 부여하였다.

2004년 10월 중국 심양대회부터 시작된 남북 권투교류협력은 한국권투위원회의 주관으로 2006년 6월초 금강산에서 제4차 프로권투대회가 개최됨으로써 남북간 권투교류가 정례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남북한 권투 발전은 물론 북한의 프로 스포츠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006년 3월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총회에 손광호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북한대표단이 방문함으로써 남북간 스포츠 교류 활성화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피스퀀컵 국제여자축구대회의 북한 여자대표팀의 참가와 태국 청소년 국제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등 예정된 체육교류사업들이 북한의 핵실험 등 주변정세로 갑자기 취소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2. 종교교류

2006년의 남북 종교교류는 하반기의 어려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인적·물적교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조계종에서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06년 11월 19일에는 350여명의 조계종 스님,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 2006년에 건립된 극락전 등 9개동 건물에 대한 「편액제막」과 낙성식을 남북공동행사로 진행하였다. 신계사 복원사업은 2007년까지 대웅전 등 12개동 건물을 복원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9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는 금강산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공동개최함으로써 남북간 불교교류가 정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3월 31일 금강산에서 열린 겨레얼살리기 남북공동행사는 남북한이 민족종교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예장 통합 남선교회 회원으로 구성된 (사)기쁜소식은 낙후된 평양 봉수교회를 전면 재건축하기 위해 2005년 9월 공사를 시작한 이래 2006년에도 활발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6년 11월 29일 봉수교회 상량예배를 위해

91명의 대규모 종교인이 방북하여 남북 합동예배를 드림으로써 남북 종교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7년 8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250명에서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 연 건평 600평의 교회로 재탄생된다.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현장

감리교 서부연회는 2001년 이래 추진해온 평양신학원 운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기적인 방북을 통해 남북기독교인의 인적교류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불교에서는 재단법인 '은혜심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북측에 빵, 밀가루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모범적으로 전개하였다. 천주교에서도 민족화해위원회를 통해 국수공장, 어린이 영양제 공급 등 대북지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종단차원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였다.

3. 문화예술교류

2006년 남북간 문화예술교류는 전시, 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음반제작 등 다양한 장르에서 진행되었다. 4월 29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윤이상음악회 행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선생(1917~95)을 기리는 남북 합동 음악회로서 윤이상평화재단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행사를 주최하였다.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함께 협연한 윤이상 음악회에는 우리측 이종석 통일부장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용태 민예총 회장 등 2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 이일남 평양윤이상음악연구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윤이상 선생 탄생 89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10월 중순 개최된 「2006 제25차 평양 윤이상음악회」에 윤이상평화재단측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하였다.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모습

북한이 해외예술단으로 자랑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금강산가극단」은 「6.15 공동선언 6주년기념 금강산가극단 특별공연」을 6월초 수원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였으며, 민요와 가곡 8곡, 민족기악곡 4곡이 수록된 금강산가극단 50주년 앨범 「비약」을 제작하였다.

북관대첩비의 역사적인 반환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남북간 교류사업 또한 활발히 추진되었다. 2006년 3월 1일 「한일불교복지협회」가 주관이 되어 2005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은 북관대첩비를 북한에 인도·인수하는 행사가 남북 문화재 당국자 및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북한은 반환받

은 북관대첩비를 3월 원소 재지인 함북 길주에 복원하고 이를 우리측 관계자에게 통보하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은 남북 당국 및 민간이 합심하여 문화재를 반환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북한문화재 특별전시전」을 개최하여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약 2개월 동안 북한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국보급 문화재 90여 점을 전시하여 문화재를



실제 북관대첩비 모습

통해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주었다.

또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 속에서도 10월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작가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6.15 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하였다. 문학인 협회에는 우리측 문학평론가인 염무웅 615민족문학인협회 남측 협회장 등 62명과 북한 김덕철 작가동맹부위원장 등 5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남북한 문인들의 결성식은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식(금강산)

한편 2006년에는 서울국제영화페스티벌 등 우리측의 애니메이션 영상사업 관련 관계자들과 평양소재 국영스튜디오인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등 북한 관계자들간에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제무대에서 인정된 북한의 애니메이션 영상 기술력과 우리의 자본력이 합쳐지면 앞으로 사업의 전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교육·학술교류

2006년 남북간 교육·학술교류는 상반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하반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인력 전문가교육,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원건립, 고구려 동북공정 관련 실태조사, 다양한 분야의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에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사업은 2007년 개교를 목표로 1단계 대학원(IT : Information Technology, BT : Bio Technology, MBA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과정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북·해외 교수진이 함께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북한과 협의 중이다.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교수진이 최초로 장기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학생에게 강의를 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국내 여러 대학들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측 시설 현대화 및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설비 등을 지원하고 북한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35만중 250만권에 달하는 자료를 남북이 공유하게 된다. 동 사업은 민족의 지식정보자산을 확충하고 우리 학계에 귀중한 원자료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향후 도서관시스템 통합 및 도서목록 공유 등 남북 도서관 교류 및 참여대학들과 김일성대 간의 학술교류로도 발전될 전망이다.

중국 단둥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하나비즈 닷컴은 2001년부터 2006년 3월까지 3개 기수 총 93명의 교육생을 교육시켰다. 이 사업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의 「우리민족 인재양성센터」가 인수받아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66명을 교육시켰다.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의 인력은 주로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IT관련 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전경

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향후 북한의 과학정책 및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항공과대학교는 2006년 4월 평양에서 정보·생명·나노·환경공학 분야를 주제로 남·북·해외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향후 남북간 과학기술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평양 일대 9기의 고구려고분군에 대하여 남북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실태조사로 고구려사 관련 남북공동연구를 심화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남북 공조대응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통한 남북화해협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진파리 4호분·호남리 사신총·용강대총·쌍영총 등 4기의 고분

이 우리 학자에게 최초로 공개되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

고구려연구재단은 고구려사 남북공동연구를 수행하여, 2006년 4월 남북 공동으로 평양 안학궁터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는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측과 한국사 관련 남북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은 2006년 3월, 5월 각각 중국 상해, 심양에서 북한주민의 건강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남북학술회의를 남·북·중 공동으로 개최하여 북한 내 내분비질환 치료제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남북당국간 합의된 사업으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 사업이 2005년 1차, 2차 실무접촉에 이어 2006년 3월 제3차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제3차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함께 중국 현지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남북한은 중국과 협조과정을 거친 후 6월초 중국 대련시 여순구 여순감옥 뒷산 공동묘지에서 공동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남북공동 시굴 및 발굴을 2007년 2월 또는 3월 중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5. 출판·언론교류

남북한 출판교류는 남북한 공동편찬, 북한 저작물의 국내 출판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펴내는 우리말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은 지역적으로 남·북·해외를 망라하고 방언, 생활언어 등을 망라한 30만 단어 규모의 남북 통합사전으로, 2012년 발간될 계획이다.

남북은 2005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전편찬요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남북공동조사(중국 여순감옥 뒷산)

강에 합의한 뒤, 2006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은 각각 어휘조사를 수행하여 매 분기별 개최되는 남북공동편찬회의에서 사전 올림말을 선정하고 올림말 뜻풀이 방안 및 어문규범 단일화 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전편찬 공정은 약 20%가량 진행되었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북한 저작권 대리중개 관련 합의를 체결하고, 남북 저작권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 저작물의 무단 출간 또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남북 저작권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기 합의가 체결됨으로써 북한 저작물 이용 절차가 보다 용이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2006년 들어 동 재단의 중개로 동화, 전설집, 역사소설, 건강상식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도서가 국내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바 있다. 이러한 출판물은 북한의 사회문화 및 학술연구 성과 등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5차회의

대표적으로, (주)자음과모음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 역사 소설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주몽』, 『독도 지킴이 안룡복』 등 장편 역사소설 5권을 출간하였다. 벽초 홍명희 선생의 손자인 북한 작가 홍석중의 장편소설 『황진이』의 영화화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인기배우 송혜교를

주연으로 한 영화『황진이』가 제작되고 있다.

남북한 방송·언론교류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교류사업 및 지상파 방송사·언론사의 방북취재 등이 진행되었다. 방송위원회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동아시아축구대회에 이어 2006년에는 독일월드컵경기 대북 위성중계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개·폐막식 및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를 포함한 전 경기 화면을 북한에 송출하였다. 국제경기 위성중계 지원은 남북방송교류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방 세계의 발전된 모습을 접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개혁·개방 및 의식개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BS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남북합작 드라마「사육신」을 제작하고 있다. 회당 70분, 총 24회 분량의 역사극「사육신」은 일종의 외주 제작 방식으로 북한이 대본, 배우, 촬영을 전담하고 KBS측은 완성품을 구매하여 우리측에서 방영하게 된다. 기존의 남북 방송교류가 방북취재, 다큐멘터리 촬영 등을 위주로 진행된 반면,「사육신」 제작사업은 외주 제작 방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교류로 주목받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드라마 촬영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2007년에는 국내에 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월간『민족21』은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북한 통일신보, 일본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기사교류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기사 및 사진을 매달 지면에 게재하고 있다. 동 월간지는 부정기 방북취재를 진행하는 등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을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는 조선신보사, 통일신보사와 공동으로 남북공동사진전 「평양 사람들의 서울나들이」를 전국 순회 개최하였다.

6. 기 타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은 2006년 4월 10일과 5월 16일 개성특

구지역에서 「제1차 통일꿈나무 개성지역 식목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때 동 사업에 동참했던 (사)민족화합운동연합은 북한의 개성지역 중앙개발지도총국측 관계자의 요청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제2차 개성지역 평화통일 숲가꾸기」 사업에 합의하여 2006년 매주 토요일 총 6회에 걸쳐 710명이 방북, 은행나무 등 약 10,000그루를 식목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식목행사 외에 개성특구지역 사업 브리핑 청취, 홍보동영상 시청, 사업현장 참관, 현대아산 개성사무소 등 남북간 경제교류의 중심지를 방문하여 남북간 변화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였다.

2006년 9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 故김규식 선생 등의 후손 15명과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50명이 추석을 맞이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묘역에 분산 안치되어 있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였다. 반세기만에 조상의 묘소를 찾은 후손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며, 인도적 차원에서 성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제4절 계층별 · 지방자치단체 교류

1. 직능단체간 교류협력

2006년은 6.15공동위원회 산하 노동자, 청년학생, 농민, 여성 등 각 계층별 분과를 중심으로 다른 해보다 계층 · 직능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여성,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언론 부문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각 계층별로 공유하고 있는 사안을 협의하고 연대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북 여성은 처음으로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2006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여성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통일운동의 방향과 여성들의 과제”를 주제로 논의하였다.



남북여성대표자회의

노동부문은 개성에서 남북 대표 45명이 참가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5월 노동절 기념행사로서 2006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5.1절 평양행사 참관단사업」을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동 행사에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대표 150여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노동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고 참관행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행사 기간중 일부 참가자가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것에 대해, 교류협력질서에 반하는 방북 활동이라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5년도에 두 차례 남북대학생교류행사가 개최된 데에 이어, 2006년도에 대학생 300여명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4월 「남북농민대표자회의」, 11월 「남북언론인토론회」등 각 계층 및 직능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참여정부 이후 민주노동당의 조선사민당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물꼬를 트게 된 정당교류는 2006년도에는 정당별 청년위원회 방북 및 민주노동당 대표단 방북으로 이어졌다. 각 정당(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청년위원회 소속인원 89명은 2006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청년학생 교류사업을 논의하고 평양 역사유적을 답사하였다.

북핵실험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대표단과 북한 조선사민당과의 교류는 지속되었다. 시기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였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연루된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방북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방북기간중 민주노동당 대표단은 북핵실험에 대한 남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는 다양한 분야의 남북 지역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순수 민간과 중앙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양자의 이점을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지면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교류분야로서 기대가 큰 분야다.

강원도는 정덕기 민화협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36명의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2006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춘천으로 초청하여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를 개최하였다. 북한 아이스하키가 1990년 제2회 삿뽀로 동계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획기적 순간이었다. 선수들은 남북의 구별 없이 한데 섞여 ‘우리팀’과 ‘하나팀’을 만들어 친선경기를 벌였다. 또한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강원도 대표단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 문재덕 조선체육지도위원장과 「2014년 동계올림픽」평창 유치에 대한 상호협력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삼지연 빙상장 아이스링크 시스템을 북한에 설치·지원하는 방안에도 합의하였다.

서울시는 「금강산윤이상음악회」 지원을 통해 문화 교류를 활성화했으며, 북한의 요청으로 위내시경 등 의료장비를 평양 조선암센터에 지원하는 등 남북교류에 기여하였다.

경기도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공동으로 2005년에 시작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벼농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도로포장 및 농업시설확충을 비롯한 농업 기반조성사업과 진료소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1월에는 당곡리 주민들이 벼수확량 증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쌀 1톤을 경기도에 선물하기도 하였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감귤 등 농산물 보내기 사업을 2006년에도 실시하여 감귤 1,000톤, 당근 5,000톤을 북한에 전달하였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북 제천시가 2006년에도 가장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였다. 제천시는 북고성군 삼일포농장과 온정각에서 「금강산제천시과 삼일포농장 사과수확 축제행사」와 「금강산제천시과 판매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삼일포농장의 과수생육상태 점검과 기술지도를 통해 남북간 영농기술협력에 기여했다.

한편, 2006년에는 최초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시·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11월 30일 첫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향후 중앙-지방간 및 지자체간 남북교류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 협조를 통해 남북간 지자체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IV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확대 및 제도화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추진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제4절 북한인권 개선 노력

남북간 인도적 사업은 상반기까지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대북지원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당국간 인도적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간차원의 지원은 계속되었으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자립기반 조성 방향으로 정착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IV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2006년 남북간 인도적 사업은 상반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지원 유보조치가 있었으며, 북한은 이에 반발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등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006년 2월 개최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6.15와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여 2차례의 상봉행사와 1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6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으며, 제1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시에는 1978년 8월 6일 군산 선유도에서 납북된 고교생 김영남의 모자상봉이 성사되었다.

대북지원은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정부-민간-국제기구간 역할을 분담하여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하였다. 당국차원에서는 비료 35만톤을 2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하반기부터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보류되는 상황에서도 민간차원의 지원은 지속되었으며, 2006년 7월 발생한 북한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이 한적 및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국내법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확대 및 제도화

남북한 분단 상황이 이미 반세기를 경과하였고 이산가족들도 고령화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참여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이산가족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금강산상봉은 매년 23차례 실시되는 등 실질적 정례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5년부터는 화상상봉이 실시되면서 교류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였다.

2006년 상반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산가족교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조치로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8.15계기 특별화상상봉이 중단되면서 2004년 하반기 상봉 일시 중단에 이어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2006년에 2차례의 금강산 상봉을 실시하였고, 이 중 6.15계기 특별상봉에서는 상봉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다. 8.15계기 특별화상상봉도 그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이지만, 남북이 상봉대상자 확대에 합의하여 향후 사업 재개시 교류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등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6년에는 이산가족 수요에 기초한 객관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이산가족교류 확대에 대비한 내무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당국차원의 교류 추진

당국차원의 교류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4차례의 금강산상봉과 4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다.

교류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은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시범실시를 포함하여 남북 총 39,217명이며, 서신교환도 1차례의 시범실시 600건과 이산가족상봉행사시 79건 등 총 679건이 성사되었다. 2006년에는 상반기 동안 2차례의 상봉행사와 1차례의 화상상봉 실시를 통해 총 674가족 3,236명이 상봉하였고 8,314명이 생사확인을 하였으며 주요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단위: 건/명

구분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총계
	상 봉	(건)	403	200	398	598	400	597	674
	(명)	2,394	1,242	1,724	2,691	1,926	3,134	3,236	16,347
생사확인	(건)	792	744	261	963	681	962	1,069	5,472
	(명)	7,543	2,670	1,635	7,091	5,007	6,957	8,314	39,217
서신교환	(건)	39	623	9	8	-	-	-	679
	(명)	39	623	9	8	-	-	-	679

가. 제13차 이산가족상봉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는 2006년 2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2006년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남한측 99명과 동반가족 49명이 재북가족 239명을, 3

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북한측 100명이 재남가족 420명을 상봉(총 907명)하였다.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북한이 남한측 기자의 취재를 제한함에 따라 공동취재단이 조기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제13차 상봉행사 이후 이러한 돌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자단과 사전협조 등 상황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나. 제14차 이산가족특별상봉

제14차 이산가족상봉행사는 2006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6.15계기 특별상봉 형식으로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2006년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남한측 가족 195명과 동반가족 96명이 재북가족 468명을 상봉하고, 북한측 가족 198명이 재남가족 819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1,776명이 상봉하였다. 특히 제14차 이산가족특별상봉은 상봉대상자를 2배로



제14차 이산가족상봉행사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교류 규모를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14차 이산가족상봉행사는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시 마찰을 빚었던 기자단 취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기자단과 사전협조는 물론 북한과도 수차례의 사전 설득노력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다. 제4차 화상상봉

화상상봉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거동이 불편하여 상봉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6월 17일 정동영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간에 합의되었다. 화상상봉은 2005년 한해에만 8월 15일 제1차 화상상봉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실시되었다.

2006년에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4차 화상상봉 1차례만 실시되어, 우리

2006년도 이산가족 상봉 현황

구분	13차 상봉	14차 상봉	4차 화상상봉
일정	'06.3.20~3.25	'06.6.19~6.30	'06.2.27~2.28
상봉 횟수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작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작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화상상봉 1회
참관	삼일포(금강산)	삼일포(금강산)	-
상봉 가족 수	남한측 148명이 재북가족 239명 상봉(남한측 동반 가족 49명 포함) 북한측 100명이 재남가족 420명 상봉	남한측 291명이 재북가족 468명 상봉(남한측 동반 가족 96명 포함) 북한측 198명이 재남가족 819명 상봉	남한측 153명이 재북가 족 100명 상봉 북한측 119명이 재남가 족 181명 상봉

측 9개 도시, 13개 상봉실과 북측 평양 10개 상봉실을 연결하여, 1일 4회 상봉가족별 2시간씩 남북 동시 10가족이 상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측 153명이 재북가족 100명을 상봉하였고, 북한측 119명이 재남가족 181명을 상봉(남북 총553명) 하였다. 2006년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5·6차 특별화상상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최종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2. 민간차원의 교류 지속

정부는 당국차원의 교류 확대 노력과 함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조용한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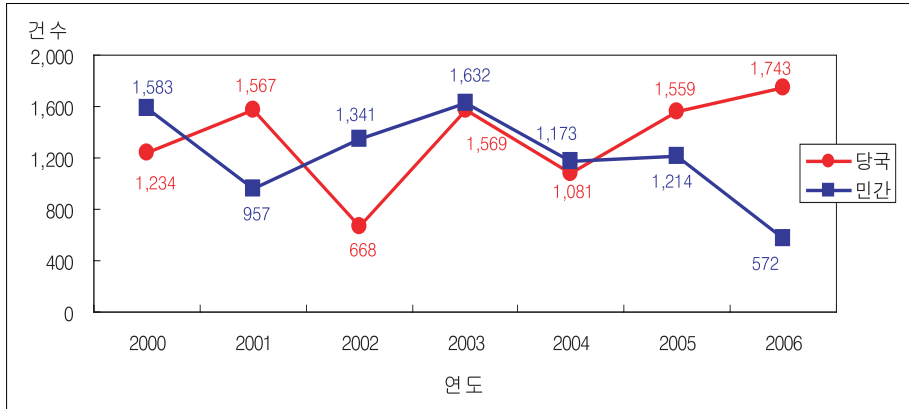
이러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노력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1989년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6년까지 생사확인 3,667건 서신교환 10,680건이 성사되었으며, 제3국을 통한 상봉은 1,585건이 성사되었다. 민간교류는 주로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 언론매체, 동향인 등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류의 중개지역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현황 〉

단위: 건(명)

구분 \ 연도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총계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94	50	1,585
방북상봉									1 (2)	5 (18)	4 (9)	5 (22)	5 (24)	3 (15)	1 (5)	1 (5)	4 (19)	29 (119)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3,667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10,680

2000년 이후 당국, 민간 이산가족 교류현황 추이



3. 교류확대에 대비한 내부기반 조성

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사업은 2000년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3년여 만인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가 성사되어 2005년 8월 31일 금강산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200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2006년 6월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공정율은 30%정도 진행되었으며, 향후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가 건설되면 이산가족상봉을 제도화하고 상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쌀·비료 지원 유보조치에 반발한 북한은

이산가족면회소 개요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관광특구지역내)
- 대지면적 : 50,000㎡(15,000평), 연면적 : 19,835㎡(6,000평)
- 규 모 : 지하1층 지상12층 및 전망대
 - 면회소동(1,000명 수용규모), 면회사무소동(2동), 파워 플랜트 등
- 구 조 : 철골구조 + 철골콘크리트 구조

2006년 7월 19일 이산가족사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7월 21일 면회소 건설인력이 철수하였고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나. 이산가족 실태조사

남북 이산가족문제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 이산1세대의 비율이 감소하고 2세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응하고 이산가족정책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산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기초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이산가족문제 현황 분석과 정책대안 개발을 위하여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이산가족 510가족을 무작위 추출하여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산가족 교류방법으로는 생사·주소확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산1세대와 이산2세대는 이산가족 정체성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산가족 정책 추진시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는 매년 이산가족 교류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가족 교류절차에 대해 안내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청주, 나주, 울산, 마산에서 4차례 실시하였다.

4.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납북자는 크게 6.25전쟁시기 납북자와 전후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쟁시기인 6.25전쟁 중 납북자는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4,532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실시

한 실향사민 등록사업에는 7,034명이 등록하였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납북자는 총 3,79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한 납북자 4명을 포함하여 3,314명(87%)이 귀환하였고, 현재 미귀환자는 481명(어민 4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실종된 국군을 41,971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포로교환시 귀환한 8,726명과 유가족신고 및 관련자료에 의해 전사처리된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2006년말 현재 최소한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3년 포로교환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10월 조창호 중위가 최초로 귀환한 이후 현재까지 총 66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는 37명에 이른다.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남북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시비를 지양하고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 성사에 우선 주력하였다.

2006년 4월 2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기존의 이산가족 틀내에서의 점진적 해결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이 대범하게 호응해 나온다면 우리측도 이에 상응한 협력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북한측은 처음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우리측이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 다양한 접촉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공동보도문에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합의사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합의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부는 현실적 접근방식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사확인의뢰자 명단에 납북자·국군포로를 일부 포함시켜 생사확인과 가족상봉 등 미흡하나마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14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161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북측에 의뢰하여 32가족 136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이 상봉 하였다. 특히 제1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시에는 1978년 8월 6일 군산 선유도에서 납북된 고교생 김영남의 모자상봉이 성사되었다.



김영남 모자 상봉

김영남 모자상봉 성사를 위해 정부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김영남의 생사확인을 요청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대상자 최종명단 교환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을 적극 설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유도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월17일 전통문을 통해 김영남의 생존을 확인하고 김영남 모자상봉을 제의하였다.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상봉 현황

(2차~14차 이산가족상봉)

구 분	생사확인/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 봉	상봉가족
전후납북자	79	14	18	47	13	15가족(69명)
국군포로	82	13	9	60	11	17가족(67명)
합 계	161	27	27	107	24	32가족(136명)

한편,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후 납북피해자지원법’ 이라 함)을 2006년 10월 2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서는 납북자의 송환노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온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후 납북피해자지원법 제정 추진은 정부의 납북자문제 해결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납북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부의 납북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추진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서 정부는 북한 주민이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지난 10년간의 식량·비료 등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었으며,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상호 보완구도하에 북한의 자립·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2005년 정부는 식량난과 경제난의 장기화로 영양부족 및 발육부진 상태가 심각한 북한 영유아(230만명 추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획, 시범 추진하였다.

2006년에도 정부는 당국차원에서 비료 35만톤을 2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또한 5개년 계획하에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민간-국제기구와의 역할 분담하에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왔다. 그리고 7월 5일 미사일 발사로 대북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 수해복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수해복구물자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지원은 일단 유보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던 북한 내 아사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국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급·만성 영양장애나 저체중 현상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고 전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 쌀이나 비료, 긴급구호물품들이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이고 귀중한 도움이 되고 있

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있으며,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만남에서도 북한은 우리의 대북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대북지원 현황

(단위: 만불)

구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	
한 국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8,139	7,522	8,915	9,377	11,541	13,588	19,939	109,118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238	6,017	4,577	6,386	13,250	7,666	8,048	55,366
	계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7	13,539	13,492	15,763	25,612	21,254	27,987	164,484
국제 사회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6,531	27,388	15,680	18,426	12,064	2,481	238,614	
총 계	28,790	10,225	31,073	33,384	40,676	29,554	50,070	40,880	31,443	44,038	33,318	29,906	403,357	

*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분은 정부지원에 포함

1. 정부차원의 지원

가. 직접 지원

1999년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처음 비료를 지원한 이후 매년 20~30만 톤씩 2006년까지 총 225.5만톤 7,058억원 상당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6년에 총 35만톤 1,200억원 상당(1차 15만톤, 2차 20만톤)의 비료를 2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1차는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2차는 5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 북한 선박(11척, 선원 427명)과 인수 요원 28명이 수송에 참여하여, 선적기간 동안 남한측 지역인 울산, 여수, 군산 각 항구에 체류하였다.

2차 20만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추

가지원 논의가 유보되었으나, 당시 진행중이던 잔여물량 3개 항차 24,700톤은 소규모 물량인 점과 당초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원하기로 이미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북한에 전달하였다.

북한은 1998년에 체결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도·시·군(구역) 단위의 비료 분배내역을 우리 측에 통보해 왔다.

대북 비료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 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규모	15.5만톤 (민간차원 4만톤 포함)	30만톤	20만톤	30만톤	30만톤	30만톤	35만톤	35만톤	225.5만톤
금액	462	944	638	832	836	940	1,206	1,200	7,058

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995년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 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해 왔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매년 중국산 옥수수 10만톤씩 총 40만톤 888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2005년 8월 북한이 국제기구의 긴급구호성 지원 종료를 요구함에 따라 2005년도 식량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6년에는 WFP와 북한간 지원내용 및 규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식량지원이 추진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북한내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발병 확산 방제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부터 매년 방제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6년에도 말라리아 방제약품 및 장비, 모기장 등 약 10억 5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총 48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북한 관계자는 WHO국제워크샵 등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2003년부터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UNICEF를 통해 어린이 영양식 및 의약품 등에 6억원을,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을 확대하여 각각 12억원, 10억원, 22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인 산모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2개년 계획으로 지원을 약속하며 2006년 106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정부차원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내역

① WFP(식량지원)

연도	규모	지원액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불 (16억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불 (185억원)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불 (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불 (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불 (234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불 (191억원)
2004	옥수수 10만톤	2,400만불 (264억원)
계	511,950톤	10,836만불 (1,267억원)

② WHO(말라리아 방역, 영유아, 긴급구호)

연도	규모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불 (6.3억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불 (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불 (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불 (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긴급구호세트	87만불 (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불 (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	100만불 (10.5억원)
	영유아지원	1,067만불 (106억원)
계		1,576만불 (163.8억원)

③ UNICEF(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구 모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불 (8억원)
1997	ORS공장, 분유781톤	394만불 (35.4억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불 (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0억원)
2006	영유아지원	230만불 (23억원)
계		974만불 (94.4억원)

2. 민간차원의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국민들의 모금이나 기업들의 기부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북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여 남북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지원사업이 분야별로 전문화되면서 물품의 단순지원에서 사업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분배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남북 주민간 접촉면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보다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상황에서도 민간단체의 물품지원이나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모니터링 인원의 지속적인 방북도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997년 3월 31일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및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제1차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지원도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한 남북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단체도 독자적인 창구로 대북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9년 10월 21일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 등을 규정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대북지원사업자는 1999년에는 9개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 65개 단체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대북지원 역사가 10년을 넘어서고, 2004년에는 용천재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대북지원의 성격도 변모되어 왔다. 기존의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기술 전수가 가능하거나 자립·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원분야도 농업개발, 보건의료, 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의약품·의료기기, 병원·제약공장 시설기자재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액은 6,348억원(반출승인 기준)이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718억원(27%, 국제적십자사 경유분 포함), 독자창구를 통해 4,629억원(73%)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4억원, 민간단체 독자창구를 통해 760억원 등 총 804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 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중 지원의 시급성, 복측 수혜대상과 분배지역,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가. 개별사업

개별사업은 1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1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 7개 단체 33.8억원, 2001년 13개 단체 38.4억원, 2002년 13개 단체 54.5억원, 2003년 18개 단체 75.5억원, 2004년 21개 단체 88.3억원, 2005년 26개 단체에 77.8억원, 2006년에 33개 단체에 80.8억원 등 6년간에 걸쳐 총 449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개별사업의 지원분야 및 품목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씨감자, 젓소농장, 젓염소 농장, 조립사업 등이 지원되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병원·제약공장 시설 기자재,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이 지원되었고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육아원이나 소학교 어린이 급식(빵, 국수, 콩우유 등), 공책공장 등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지원에 수반하여 재배농법 전수, 공동의료기술, 콩우유 작동법, 제약공장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전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농수산물 수송비의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3개 단체에 대해 86.7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 지원한 못자리용 비닐의 경우 북측이 먼저 우리 민간단체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품목이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구성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봄철 북측의 수요에 맞추어 시의성 있게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정부도 2005년에는 16억원, 2006년에는 7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 이후 직항로를 통한 민간단체 기증자의 현장 확인 형식의 대규모 방북도 추진되고 있다. 2006년에는 5차례 476명의 직항로 방북을 포함하여 총 5,586명이 방북하여 대북지원을 매개로 한 남북간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되었다.

나. 합동사업

2004년 용천재해와 대북지원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단체나 개별사업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북한의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성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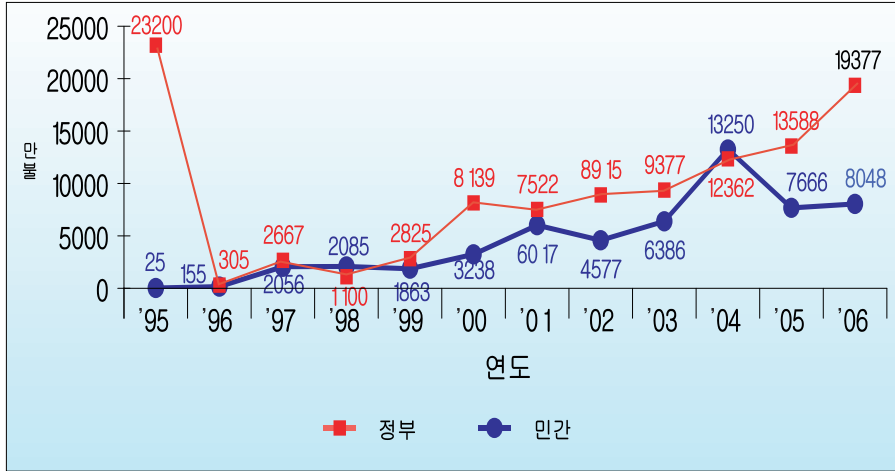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정부의 협조하에 3개 이상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합동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축산현대화 사업, 농업보전용수 개발사업, 모자보건 복지사업, 병원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40여 억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2006년 사업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5개 사업이 결정되어 2007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개 합동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강남군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종합복지모델 개발사업	· 북한 지역개발사업의 모델을 개발 - 지역주민과 접근성이 강한 군지역을 대상으로 영양, 보건, 교육, 위생 사업 진행	○ 신규 (일부사업 2005년 계속)
2.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북한 농민들의 농촌주택개량 사업 - 농촌주택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건설기 교류	○ 계속
3. 복토직파기술을 이용한 남북농업협력 증진사업	· 복토직파법에 의한 복합영농 지원 - 복토직파기술을 이용한 쌀 생산성 향상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이모작 시험	○ 신규 (2007년부터는 자체재원으로 진행)
4. 북한 보건, 의료, 식수환경 개선사업	· 우수처리장 및 지하수 개발, 병원 및 학교 등의 정수시설과 농업용수 개발 - 깨끗한 물 공급으로 수인성 질병 예방	○ 계속
5. 보건의료체계개선사업	· 북한 1~4차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수리 지원 -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 구성	○ 계속

정부 ·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단위: 만달러)



합동사업의 경우 북한의 자립·지활능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사업추진 초기인 만큼 개별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경제협력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한 북한의 이해와 협조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대북지원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관리, 지원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검토, 해결해 나감으로써 합동사업을 대북지원 사업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간차원 대복지원 내역

기 간	규 모	내 역
2000년도	3,238만달러 (38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 : 16개 단체 113억 2,992만원 • 식량, 비료, 한우 500두,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2개 단체 274억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1년도	6,017만달러 (78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 : 286억원 • 식량 14,175톤, 비닐 552톤, 내의 159만벌,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9개 단체 496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2년도	4,577만달러 (57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 : 90억원 • 동내의 118만벌, 라면 39만개, 분유, 의약품, 의류 등 - 독자창구 : 25개 단체 486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3년도	6,386만달러 (76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 : 70억원 • 생필품, 밀가루, 농자재 등 - 독자창구 : 29개 단체 696억원 •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구충제·영양제 등 의약품, 제약설비 및 원료 의약품, 농기계 및 농자재, 유기공설비, 축산용품, 건축용 자재·장비, 밀가루, 분유, 설탕, 의류, 학용품, 생활용품 등
2004년도	13,250만달러 (1,55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 : 441억원 • 밀가루, 분유, 발효기, 운동화,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철근, 휠체어 - 독자창구 : 33개 단체 1,117억원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보일러, 학용품, 피복, 감귤, 놀이기구, 왕진가방, 타일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
2005년도	7,666만달러 (77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 : 46억원 •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축구용품,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학생용가방, 자전거, 화물트럭 - 독자창구 : 43개 단체 733억원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사료 및 가축, 보일러, 학용품, 피복, 감귤, 놀이기구, 생활용품, 시멘트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
2006년도	8,048만달러 (80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 : 44억원 •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축구용품,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학생용가방, 자전거, 화물트럭 - 독자창구 : 58개 단체 760억원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사료 및 가축, 보일러, 학용품, 피복, 생활용품, 시멘트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수해복구 자재 등
계	5억 5,366만달러 (6,346억원)	

다. 민·관 협력체제 강화

인도적 대북지원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도 강화되어 왔는데, 협력의 계기가 된 사례는 2004년도의 북한 용천재해 복구지원이다. 용천재해 지원 과정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간, 민·관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9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는 대북지원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상호 보유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2005년에는 『대북지원 긴급구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동안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경과와 성과를 다룬 『대북지원 10년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합동사업도 동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였다. 2006년에는 북한 수해피해 복구지원, 합동사업을 논의하고 지원을 결정하였다.

3. 수해복구지원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쌀·추가비용 지원 논의를 유보한다는 정부 입장이 정해진 가운데 7월중 북한에 큰 수해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수해 초기에는 외부 지원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으나 남한측 민간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지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8월초 「민화협」, 「북민협」, 「6.15 공동위원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들은 정부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하였다. 정치권에서도 5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의 조속한 대북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러한 정치권 및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미사일 발사문제와는 별개로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한적 및 민간의 긴급구호 및 수해복구 지원

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8월 19일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대북수해 복구지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실무접촉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10만톤(국내산), 자재장비(트럭 10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시멘트 10만톤, 철근 5천톤), 긴급구호물품(모포 8만장, 긴급구호세트 1만점, 기증의약품 등) 등 763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복구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대한적십자 차원 지원

대한적십자사 차원의 수해복구물자 지원은 8월 30일 1항차 출항으로 개시되었다.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8.19, 금강산)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몇 군데 선정하여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만큼, 우리측은 지원과정에서 지원물자 인도요원을 통

한적을 통한 지원계획 및 실적

지원계획		의결금액	지원시기	전달실적 ('06.10.9현재)	비 고
품목	수량				
○ 쌀 10만톤	10만톤	400억원	8.30	○ 쌀 89,500톤	* 10.9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원 유보
○ 자재장비		243억원	개시	○ 자재장비	
- 트럭	100대			- 시멘트 29,585톤	
- 굴삭기	50대			- 철근 3,800톤	
- 페이로더	60대			- 트럭 50대	
- 시멘트	10만톤			- 굴삭기 50대	
- 철근	5천톤			- 페이로더 60대	
○ 긴급구호물품		20억원		- 모포 2만장	
- 모포	8만장			- 긴급구호세트 1만점	
- 긴급구호세트	1만점			- 의약품 4억7천만원	
- 기증의약품 등				상당	
○ 부대경비 등		100억원			

해 동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복구 물자 지원은 잠정 유보되고, 모니터링 문제에 대한 협의도 중단되었다.

나. 민간단체 지원

민간차원에서는 생필품 중심으로 매칭펀드 기금지원분 100억원, 민간단체 자체 지원분 123억원 상당을 포함하여 총 223억원이 지원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대한적십자를 통한 지원 유보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지원은 수해복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긴급구호 품목 위주로 계속되었다.

정부의 민간단체를 통한 100억원 상당의 지원분은 대북지원사업자 연합단체인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지원품목은 신속한 전달을 위해 국내 산 위주로 조달하였다. 추진과정 중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간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06년말까지 정부 매칭 지원분인 100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정부 매칭 지원분의 지원내역은 밀가루 30억원, 생필품(콩기름·세탁비누) 16억원, 의약품 5억원, 의류용품

민간차원 수해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품 목	매칭펀드 지원분	자체재원 지원분
식 량	밀가루	2,995	1,092
생필품	콩기름, 세탁비누	1,579	210
의류용품	내의, 방한복, 양말, 옷감 등	2,652	7,485
복구장비 및 자재	경운기, 리어카, 손수레, 삽 등	1,782	1,066
의약품	구급약 등 약품	543	2,164
운송비	수송 등 물류비	449	288
합 계		10,000	12,305

2006년 정부·민간 지원현황

구분	지원 규모	지 원 내 역
정부차원	19,939만달러 (1,99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35만톤 지원(12,002만달러/1,200억원 상당) -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 지원(101만달러/10억원) -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505만달러/106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 등 지원(230만달러/23억원) - 수해 복구지원(5,202만달러/520억원)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1,338만달러/134억원)
민간차원	8,048만달러 (80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직창구 : 44억원 •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축구용품,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학생용가방, 자전거, 화물트럭 - 독자창구 : 58개 단체 760억원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사료 및 가축, 보일러, 학용품, 피복, 생활용품, 시멘트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수해복구 자재 등

*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분을 정부지원에 포함

(방한복 등) 27억원, 복구장비 및 자재(삽, 손수레 등) 18억원, 운송비용 4억원 등이다. 민간 자체 지원분은 29개 단체 참여하에 의류, 밀가루, 의약품 등 생필품 위주로 123억원이다.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와 북한간 적절한 시기에 분배현장을 방문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나, 북핵 실험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입국시킨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체류국가에서의 체류여건이 개선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복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새터민 민간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국내입국 현황

새터민 국내 입국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년 수십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다.

입국추이

(단위: 명)

구분	'89까지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남	564	80	35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5	422	486	3,910
여	43	6	6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9	961	1,533	5,796
총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9,706

성별 입국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새터민의 입국비율이 남성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여성 새터민의 입국비율이 76%에 달함으로써 남성 입국인원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 새터민 자립·자활 지원정책 내용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여 10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취적(就籍), 주거알선 등 우리 사회 편입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에는 정착지원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가. 사회적응교육

하나원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새터민 정착지원시설로서,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 교육과 초기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안내와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적응교육은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기간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12주에서 10주로 조정되었다. 새터민들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언어와 사고방식·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해 나간다. 가정, 관공서, 도시, 역사현장 등을 탐방하는 현

장학습에서 새터민들은 남한의 실생활을 체험하고 일반 국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가진다.

탈북 및 제3국 도피·은신 과정의 어려움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생긴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하나원 내 개설된 진료소인 「하나의원」에서는 공중보건과의 전문 간호인력이 새터민의 건강을 돌본다.

하나원에서는 또한 기초적인 직업교육·훈련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터민의 취업과 학교진학을 안내하고 돕는다. 통일부는 2006년 5월 새터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와 「새터민 고용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직업교육의 주요 부분은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에서 직업훈련은 직종에 대한 성별 선호와 적합성을 고려하여 남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교육생 문예공모, 입소 환영공연, 수료 환송공연, 야간자율학습 등 자율형·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새터민 교육생에게 교육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과 자립심을 길러 주고 있다.

하나원 교육과정

교육 주제	교육시간	주요 내용
정서안정 및 건강 증진	41시간	○ 심리상담, 심성수련,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
우리 사회 이해 증진	118시간	○ 민주주의, 시장경제, 남한의 문화와 법률 등 교육 ○ 가정·관공서·도시 탐방, 봉사활동 등 현장학습
진로 지도 및 직업기초능력 훈련	144시간	○ 직업정보, 직업훈련·교육제도 안내 및 진로상담 ○ 직종별 직업훈련(폴리텍대학), 직종설명회, 고용지원 기관 및 산업체 현장 방문 ○ 정보화(컴퓨터) 교육
초기 정착지원	57시간	○ 정착금 지급, 주거지 배정, 취직, 주민등록증 발급, 의료지원 등 정착지원제도 이해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새터민들은 하나원 교육기간 중 각각 인근의 삼죽초등학교와 2006년 3월에 개교한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우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 새터민을 위해 하나원 내에 운영해 온 '하나둘학교'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위탁교육 외 시간에 특화된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를 비롯한 7개 민간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진행하는 등 사회적응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사회적응교육뿐 아니라 새터민에 대한 임대주택 알선, 정착금 지급, 호적 취득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새터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은 본원과 분원을 합쳐 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연간 1,900명을 교육할 수 있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개원한 이후 2006년 12월까지 총 8,025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였다. 정부는 증가되고 있는 입국 새터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원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나. 정착기반 지원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새터민들은 사회 각지로 배출된다. 정부는 사회로 진출하는 새터민이 초기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다.

2006년 현재 기본금은 1인세대 기준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노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최고 1,540만원까지 지급한다. 장려금은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립·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새터민에게 최고 1,5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방 거주자에게는 지방 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되도록 적극 주선하고 있다.

정착지원 주요 내용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 1,000만원(1인가구)~3,200만원(7인이상)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주 거	주택알선	○ 임대 아파트 특별알선(영세민 보다 우선알선)
	주거지원금	○ 1,000만원(1인 세대), 1,500만원(2인이상 세대)
사회복지	생계급여	○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대해 지원 - 36만원(1인 세대)~132만원(6인이상 세대) - 근로능력가구는 사회배출 2년차부터 근로조건 부과
	의료보호	○ 의료보호 1종 수급자로서 의료 혜택

다. 취업 지원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46개 고용지원센터에서 53개 고용지원센터로 새터민 취업보호담당관을 확대 지정하여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을 지원·알선해 주고 있다.

새터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
업체수	91	226	274	240	218	323	378
인 원	105	251	296	281	269	439	492
지급액	2억 7천	9억 9천	11억 3천	10억 9천	9억 4천	14억 3천	12억 1천

새터민에게는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11월 현재 658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또한,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2000년부터 도입되어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06년에는 3/4분기까지 378개 사업장, 새터민 492명 고용에 대해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5년 316개 사업장, 새터민 439명 고용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새터민의 자립·자활 노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 교육지원 및 학력·자격 인정

정부는 새터민의 학습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지원도 꾸준히 강화하였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대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사립대학인 경우 정부와 학교가 각각 학비의 반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2006년에는 총 708명의 대학생이 8억 7천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 및 학교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터민 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동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2006년 12월 현재까지 약 80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학생수 증원 등

학교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6년 12월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교육 등 전문 분야 자격인정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마. 거주지 보호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주지에서는 정부 이외에도 사회·종교단체 등 새터민 지원 민간단체에서 각종 생활상담 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새터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정부와 민간단체의 접촉창구 역할 및 민간단체의 통합·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민간단체 활동지원을 공모제로 전환함으로써 새터민 지원영역의 다양화, 민간단체간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민간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2001년부터는 새터민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제는 2005년에 실시된 이후 2006년에 그 활동 영역을 확대·강화하여 약 1,300명의 정착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정착도우미는 새터민의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보 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절 북한인권 개선 노력

북한의 인권상황은 북한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나,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기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하에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관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첫째, 북한주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전반적인 상황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한편, 남북대화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인권관련 기술협력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정부는 국내입국 희망 탈북자에 대해서는 전원 수용하여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정치적·시민적 권리 등도 기본적으로는 생존 가능한 삶의 상황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당국차원에서 쌀·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제기구(WHO·UNICEF 등)와 협력하여 건강관리·영양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농업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넷째, 남북간 최우선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에는 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간 협력해 나가기로

북한인권 관련 정부입장('05.11.3 NSC 상임위원회 결정)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포괄적 개선에 기여한다는 입장임.
-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各國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선택할 수 있다고 봄.
- 정부는 평화변영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정부는 한반도 현실 및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 우선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
 - 정부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
 - 북한당국이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를 촉구함.

합의하였으며,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정리 등 정보자료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정부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센터」와 협조하여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국내 NGO의 워크숍 개최 및 자료 발간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제62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국제인권기구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시 기권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투표입장설명문(EOV)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해 왔다. 2006년의 경우,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였다. 또한 정부는 비릿 문타폰 유엔북한인권 보고관의 방한활동에 협력하고, 미국·EU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기관·NGO 등의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여 북한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우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대북 경수로사업

V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

제2절 경수로사업 중단

제3절 경수로사업 종료·청산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중단된 경수로사업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으나 핵개발 의혹에 대한 북한의 강경입장 고수에 따라 KEDO 집행이사회는 2006년 5월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를 결정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V

대북 경수로사업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된 경수로 건설사업은 1995년 3월 한국·미국·일본 3국에 의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의해 시행되었다.

KEDO는 1995년 12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한 후 1996년 3월 주계약자로 한국전력공사(KEPCO)를 지정하였다. 이후 경비조달 등 여러 사정들로 인해 사업시행이 지연되다가 1997년 8월 초기현장공사가 착공되었고, 1999년 12월 경수로 공급을 위한 주계약이 체결되었다. 2000년 2월 주계약이 발효되고 북한이 2001년 9월 건설허가증을 발급함에 따라 경수로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추진되던 KEDO 경수로사업은 2002년 10월부터 대두된 제2차 북한 핵문제로 2003년 12월부터 2년간 중단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업재개를 위해 노력했으나 미국 등의 지속적인 사업종료 요구와 핵개발 의혹에 대하여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전의 강경입장을 그대로 고수함에 따라 KEDO 집행이사회는 2006년 5월 31일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를 결정하였다.

제1절 경수로사업 추진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간 협상 결과, 북한 핵시설의 동결·해체와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2기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미간의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가 1994년 10월 21일 서명·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고,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KEDO와 북한간에 협상을 통해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등 경수로 건설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되었다. KEDO는 1997년 8월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하였다.

경수로사업비 조달을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예상 사업비를 미화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미화46억달러 기준 미화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미화10억달러(1,165억 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투입된 자원은 북한이 경수로가 완공된 3년 후부터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은 현금이나 현금에 상당하는 기타 수단을 통해 실현하기로 하였다.

경수로사업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KEDO와 한국전력은 1999년 12월 일괄도급 방식으로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2기를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TKC)을 체결하

였으며, 2000년 2월 주계약이 발효되고 북한이 2001년 9월 1일 건설허가증을 발급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공정인 본관기초굴착공사를 2001년 9월 3일 착공하였다.

원자로 1호기 공사는 2002년 8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원자로건물 외벽공사 및 보조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호기도 기초굴착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현장의 부지 정지, 진입도로, 취·배수방과제, 물양장(부지해안에 설치한 부두시설), 용수 및 전력공급설비 등 기반시설공사와 함께 생활부지 내 근로자 숙소, 식당,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나갔다. 공사 착공 이후 KEDO와 북한은 「훈련 의정서」와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켜 2002년 10월 「경수로 공급협정」이행을 위한 13개 의정서 중 8개 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켰다. 또한 KEDO와 북한은 1998년 이후 연간 수차례의 각종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객화선(주1회)·바지선 운항, 통신망 운용(16회선), 직항공로 개설·운용 등을 합의·시행하였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2000년 4월 북한근로자 200명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00명의 근로자를 철수시켰으며, KEDO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3월부터 우즈베키스탄 인력을 투입하였다.

현장공사 진행과 함께 2000년 11월 체결된 「훈련의정서」에 따라 2002년 발전소 운영요원 123명에 대한 18주 기본교육을 금호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북한의 원자력 안전 규제요원 25명의 훈련을 우리 측의 원자력 관련기관에서 실시하였고, 고위정책자 과정 19명은 우리 측 원자력 관련시설도 시찰하였다.

제2절 경수로사업 중단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문제로 한 동안 잠잠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추진되던 대북 경수로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북한 핵문제가 다시 불거짐에 따라 KEDO는 2002년 11월 14일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에 대해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할 것이며, 북한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아가면서 경수로사업 등 여타 KEDO 활동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2002년 11월 21일에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하고 12월 12일의 핵동결 해제 선언, 21일의 5MWe 원자로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22일의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 봉인 제거, 23일의 방사화학실험실 봉인 제거, 31일의 IAEA 사찰관 완전 추방,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선언과 2월의 5MWe 원자로 가동 재개 등의 강력하고 빠른 대응조치를 취했다.

KEDO는 2003년 2월 비공식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로 인해 경수로사업 추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기대하며 당분간 공사속도를 늦추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침 하에 전체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호기 원자로건물 최초 콘크리트 타설 및 발전소지역 내 부대건물 건설 연기, 원자로 격납용기 첩관, 철근 등 보조 기자재의 발주계약 연기 등 불요불급한 공사의 축소 및 순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경수로 공급협정에

근거한 후속의정서 및 북한 노무인력 임금협상 등 북한과 진행되던 각종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경수로 발전소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할 북한요원 훈련도 중단되었다.

한편 2003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미국·중국·북한 간 3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었고, 2003년 8월 개최된 6자회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KEDO 집행이사국 간에는 경수로사업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KEDO 집행이사국들은 수차례 공식·비공식 집행이사회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속도조절 하에서의 사업지속(slow down)’, ‘사업의 일시중단(suspension)’, 또는 ‘사업의 완전종료(termination)’ 등 경수로사업의 장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3년 11월 21일 KEDO집행이사회는 북한 핵문제에 의해 경수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수로사업의 일시중단은 사업의 완전종료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경수로사업의 상징성, 기투입 비용과 경수로사업 중단기간 만료(2004.11.30)까지 핵문제 해결의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단조치 1년 연장’ 방안을 미국·일본 등 집행이사국들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그 결과 KEDO 집행이사회는 2004년 11월 경수로사업 일시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사업의 중단기간 연장 제안에 일단 동의는 하였으나 1년 연장 이후에는 추가연장이 불가하며, 경수로사업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만약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차례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신뢰성

상실 및 경수로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하였다.

2003년 12월 1일부터 사업의 일시중단(suspension) 발효에 따라 경수로사업은 설계, 건설, 제작 등 각 분야의 모든 공정이 원칙적으로 중지되었고, 건설 현장에 대한 보존·관리 조치에 들어갔다.

공사현장에서는 1, 2호기 원자로건물 철근 및 철판 부식방지 조치, 공용설비의 굴착부위 침수 및 붕괴방지, 도방수로 벽면 보호 등 기 완료된 시설물의 보호조치를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하였다. 제작중인 기자재는 품질보장원칙과 비용최소화원칙에 따라 품목별로 보호·관리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부품목은 품질확보 및 작업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시점까지 공정을 완료한 후 보관조치를 취하였다. 부지현장과 제작중인 기자재의 안전한 관리·유지를 위해 부지현장 및 기자재 제작업체에 대한 사업진도 평가와 품질보증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1,500여명에 이르던 부지현장 상주인원도 2003년 12월에 우즈베키스탄 인력 전부, 2004년 2월에는 북한측 인력 100명이 전원 철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2005년 11월말 금호부지에는 KEDO 금호사무소 직원 6명을 포함하여 120여명의 인원이 체류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3년 11월 KEDO의 사업 중지 결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금호현장의 공사관련 장비·차량 280여대에 대한 반출을 금지하고, 12월에는 출입국절차 강화 등 중단기간 중에 ‘잠정조치’ 시행 방침을 통보해 왔다. 이에 KEDO는 사업의 일시중단 결정에 따른 보존·관리활동 및 인력과 장비 철수 등 KEDO-북한간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2차례 고위전문가회의 및 5차례 실무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북한이 제기한 ‘잠정조치’ 문제는 2004년 3월 ‘양해각서’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북한의 의정서 준수 및 체류인원의 신변안

전보장, KEDO 인원의 부지출입절차 일부 수정, 물양장 사용절차 합의 등이 었다. 이로써 사업 중단기간 중 공사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에도 KEDO는 북한의 장비 반출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사무총장단 방북과 실무협의 등을 통해 반출금지 조치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조치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주요 계기 때마다 장비반출 금지조치의 부당성 및 향후 남북경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면서 장비반출 문제 등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 및 경수로사업 추진으로 미국과 KEDO가 북한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기 전에는 철회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KEDO는 경수로 건설공사의 속도조절(slow down)로 인한 유휴 인력·장비 발생에 따른 참여업체의 피해에 대해 한국전력을 통해 2003년 12월과 2004년 7월 2차례에 걸쳐 보상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장비 반출금지 조치에 따른 장비업체의 피해 발생에 대해 2004년 합동시공단은 자체자금으로 건설중장비 41대에 대해 우선 보상을 실시한 데 이어, 2005년 KEDO 차원의 보상방안(선 한국전력 보상, 후 KEDO 보전)이 마련되어 한국전력이 반출금지장비 184대에 대해 총 238억원을 보상금으로 지불하고 장비 손실보상 문제를 마무리하였다.

1997년 8월 경수로사업 착공 이후 사업이 일시중단되기 전인 2003년 11월 말까지 경수로사업은 시공 21.6%, 종합설계 62.3%, 각종 기자재 제작·구매 43.2% 등을 포함하여 종합공정율 약 34.5%의 진척도를 보였다. 2006년 12월 말까지 투입된 경수로사업비는 약 미화 15억 7,500만 달러로, 남한측이 미화 11억 4,600만 달러, 일본 미화 4억 1,100만 달러, 유럽연합 미화 1,800만 달러를 분담하였다.

1998년 11월 KEDO 경수로사업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된 이후 우리 정부는 경수로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국내재원조달 마련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경수로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으로 전기요금 납부금 제도,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등을 검토·추진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2006년 12월 말까지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경수로건설비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하였고, 2006년 12월 말 현재 순 국채발행액은 1조 9,330억원이다.

제3절 경수로사업 종료 · 청산

1. 사업 종료 결의

KEDO는 2003년 11월 대북 경수로사업의 일시중단을 결정할 당시 북핵문제 해결 진전상황 등을 보아가며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를 협의 ·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의혹에 대하여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전의 강경입장을 그대로 고수함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 중단을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부시 미 행정부의 경수로사업 무용론 압박을 받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의 실현, 남북관계의 활성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경수로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고 6자회담의 무기한 참가중단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6자회담 재개 전망마저 불투명해지는 등 북핵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대북 중대제안」을 구상하였다.

2005년 7월 12일 발표된 「대북 중대제안」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KEDO 경수로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200만kw의 전력을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할겠다”는 것으로 이는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 구상이었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중대제안은 제3차 6자회담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좀처럼 일정을 잡지 못했던 제4차 6자회담 개최에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중대제안에는 북핵문제의 한 축인 KEDO 경수로사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

에 대한 해결의 열쇠 역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제4차 6자회담은 13개월간의 공백을 거쳐 2005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NPT 체제가 보장하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과거 연구용 원자로를 핵무기 생산용 시설로 전환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핵시설과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적 우려가 해소되면 평화적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양보함으로써 경수로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 이후 6자는 북핵포기,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체제 안전보장, 대북 경제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6자회담 공동성명을 발표(9.19)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KEDO는 제2차 사업 중단기간 만료(11.30)를 앞두고 11월 집행이사회를 소집하여 경수로사업 종료문제를 중심으로 청산비용 분담문제, 기자재 및 부지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KEDO 집행이사회 및 양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당초 경수로 건설사업이 미국의 주도로 추진된 것임에도 한국이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 왔던 점과 사업의 중도 종료에 따른 청산비용은 경수로 건설사업비와는 다른 성격임을 감안할 때, 한국·미국·일본 3국간에 청산비용 균등 분담에 대한 합의 없는 사업종료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우선 KEDO 경수로사업 종료 문제부터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청산비용 분담 합의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종료 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미국측은 미국 의회의 비용분담 승인문제를 이유로 '선(先) 사업, 종료 후(後) 청산비용 문제 협의'를 주장하며, 청산비용 분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 측은 청산비용의 형평성 있는 분담 원칙에는 동의하나, 청산비용 분담 합의를 사업종료 결정에 연계하는 데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005년 11월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에서 대북 경수로사업 종료 방침이 결정되자 KEDO 고위급대표단은 방북하여 KEDO 대북 경수로사업이 종료 방향으로 협의·추진 중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12월 초 KEDO 경수로사업 종료 방침을 기정사실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경수로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체결된 KEDO-북한간 합의 및 의정서들의 효력 무효, 모든 KEDO 인력의 1개월 내 완전 철수, 현장 장비 및 부지자산의 잔류 조치, KEDO의 사업 종료에 따른 모든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호부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 하에 KEDO-북한간 협의를 바탕으로 철수를 추진하였다. 금호부지 현장인력 철수는 북한의 협조 하에 우리측 선박(한겨레호) 편으로 두 차례 나누어 질서있게 진행되었다. 1진 57명은 2005년 12월 29일에 철수하였으며, 잔여인력 2진 57명은 2006년 1월 8일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무사히 철수하였다.

KEDO는 2006년 1월 대북 공한(公翰)을 통해 부지 현장인력 철수에도 불구하고 부지내 시설·장비·물자·기술문건 등 모든 자산은 KEDO 소유이며, KEDO는 이의 반출 권리가 있고, 사업 종료가 되더라도 KEDO-북한간 관련 협의 및 합의가 없는 한 북한은 부지자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KEDO 자산 훼손 및 다른 어떠한 용도로의 사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KEDO 집행이사국간 경수로사업 종료문제 협의회가 청산비용 부담문제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사업 종결을 추구해 온 우리 정부는 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기자재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일괄타결(package deal) 청산방안을 새로이 마련, 제안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일괄타결 청산방안은 경수로사업의 중도 종료에 따른 청산비용 부담에 대한 집행이사국의 법적 의무가 모호한 상

황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은 청산과정에서 추가로 청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입장에서, KEDO의 채무 불이행(default) 사태를 방지하고 집행이사국들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 EU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일괄타결 청산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 이후에도 사업 청산과정에서 청산비용을 초과하는 이익발생 가능성을 상정하고 한국전력의 과다이익 발생시 처리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일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전력의 과다이익 발생시 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시 처리문제도 상응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하였다. 결국, 경수로사업 종료문제 협의회시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한국전력의 과다이익 발생시 처리문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한다”는 선에서 최종 합의되었다. KEDO는 2006년 5월 31일 집행이사회를 개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업의 일괄타결 종료방식에 대한 집행이사국들의 동의를 재확인하고 경수로사업의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청산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대신 북한 밖에 소재한 KEDO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KEDO 사무국은 집행이사회가 결의한 경수로사업 종료 결정을 북한과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에 공식 통보하였다. 이로써 최초의 국제적 대북 다자협력사업으로 지난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던 KEDO 대북 경수로사업은 결국 미완의 상태로 종결되게 되었다.

KEDO 집행이사회 결의문(5.31) 요지

- 경수로사업 종료 및 한전의 기자재 인수
 - 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 종료 결정
 - 한국전력은 부지 외에 소재한 KEDO 소유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고, KEDO에 대한 재정적 클레임을 포기
 - 상기 기자재 및 청산비용 처리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것임을 확인
 - 한국전력은 향후 기자재 활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 한국전력의 기자재 인수를 위한 집행이사국들의 기자재 수출 허가 협조 원칙 확인
 - 한국전력은 청산비용 이외에 KEDO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여하한 정치적·재정적 책임에서 면제
- 대북관계
 - 경수로사업 관련 재정적 손실에 대한 KEDO의 대북 청구권 보유 원칙 확인
 - KEDO의 부지내 자산 소유권 재확인 및 북한에 대한 자산 반출 요청
 - KEDO-북한간 분쟁발생시 경수로공급협정 제15조(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
- 공급협정 제15조 : 당사자간 분쟁 미해결시 국제중재재판을 통해 해결
- KEDO 장래
 - KEDO는 사업 종료절차 완료시 해체
 - 사업 종료결정 직후 KEDO 사무국 축소작업 시행
- 은행 용자금 처리
 - 경수로사업 관련 차관 및 자금조달협정에 따라 KEDO와 관련정부(한국 및 일본)간 협의 개시

2. 사업종료 이행

2006년 5월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에서 결의 채택한 일괄타결 청산방식이 한국측 기업(한국전력)에 과다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과 EU는 사업 종료협정(Termination Agreement) 초안 작성과정에서 클레임 처리절차 문제와 향후 기자재 활용·처리 결과, 즉 한국전력의 과다이익 발생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우리 정부는 6월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에서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며 일본과 EU를 설득하여 KEDO측 사업 종료협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KEDO 집행이사회는 우리 측의 주도로 작성된 KEDO측 사업종료 협정문안을 승인하고 한국전력과의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KEDO 사무국과 7월 서울에서 한국전력과 경수로사업 종료 결의 이행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 KEDO가 제시한 종료협정(안)을 중심으로 입장 및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양측간에는 인수 기자재 매각 및 재활용, 클레임 처리 등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전력은 협상에서 KEDO측이 주장하는 과다이익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전력측의 과다손실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9월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전력의 입장을 반영한 종료협정 수정안을 마련하여 다른 집행이사국들에 대한 설득 노력을 적극 전개하였다. 한편 KEDO는 경수로사업이 미완성 중도에 종료된 것과 관련한 대북 손실보상 요구 문제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 결정하였다.

KEDO 집행이사회는 10월 개최된 클레임 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전력이 클레임 현황과 처리결과 등을 KEDO에 제출하고 KEDO가 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자재 활용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의 이익이 청산비용을 초과할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KEDO 집행이사국 간 합의를 바탕으로 KEDO 사무국과 한국전력은 11월 뉴욕에서 2차 사업종료 협상을 개최, 종료협정 문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을 하였다. 2차 협상에서 가서명된 경수로사업 종료협정(Termination Agreement)은 2006년 12월 8일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와 한국

분야 협력사업의 법적·제도적 기틀 형성에 본보기가 되었다.

경수로사업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경수로 건설공사 시공 및 기자재 제작 등에 우리의 부담(미화 11억 4,600만 달러)을 상회하는 금액(미화 12억 400만 달러)을 국내업체가 수주하는 등 국내 고용창출 및 생산·부가

〈경수로사업 종료협정(TA) 요지〉

- 일반사항
 - 경수로사업 종료협정(TA)은 KEDO-한국전력간 모든 합의(주계약, 각종 합의서 및 관련 서신 등)를 대체

- KEDO 및 한국전력의 일반의무
 - KEDO는 북한 영역 밖에 있는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국전력에 양도
 - 한국전력은 현재 미지급된 유지·보관비용(2005년 8월~11월)을 제외하는 모든 비용 및 클레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

- 클레임 처리절차 및 보고
 - 한국전력은 클레임 규모에 대한 KEDO 확인없이 협력계약자와 클레임 합의 가능
 - KEDO는 최종 클레임 규모가 적절하다고 판단시 한국전력에 확인
 - 한국전력은 기자재 활용결과를 KEDO에 정기적으로 보고
 - 기자재 활용결과, 한국전력 이익이 청산비용 초과시 향후 협의

- 건설현장 자산 소유권
 - 한국전력은 건설 현장의 시설 및 소유권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
 - KEDO와 한국전력은 기자재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집행이사국들이 수출통제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양해

- 한국전력의 면책의무 및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
 - 한국전력은 종료협정 및 주계약(TKC) 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제3자가 제기하는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KEDO를 면책
 - 한국전력은 제3자가 제기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KEDO를 면책

- 제3자에 대한 책임
 - KEDO는 제3자가 KEDO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TKC 및 협력계약 관련 클레임은 제외)으로부터 한국전력을 면책
 - 한국전력은 제3자가 한국전력에 제기하는 클레임(KEDO의 채권자, 북한 및 KEDO의 계약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은 제외)으로부터 KEDO를 면책

전력 이사회에서 각각 승인, 12월 12일 정식 서명·발효되었다.

한편 KEDO 집행이사회는 KEDO 장래문제와 관련, 경수로사업 청산과 관련한 주요 조치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기구인 KEDO 사무국을 2007년 4월말을 목 표시한으로 해체를 추진키로 하고, KEDO 법인격은 향후 대북문제, 재정문제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전력은 2006년 12월 KEDO-한국전력간 체결된 사업 종료협정(TA)에 의거, 협력업체에 대한 클레임 처리와 함께 현재 국내외에 보관·관리되어 있는 KEDO 기자재를 인수, 매각 및 재활용 등 사업청산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KEDO 경수로사업 종료와 청산문제 협의과정에서 1) 금호부지 체류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2)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없게 하며, 3) 우리측이 경수로 기자재를 인수, 투입 비용의 사장을 방지한다는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추진해 나갔으며 궁극적으로 상기의 원칙과 목표들은 달성되었다. 중도에 사업이 종료되어 청산단계에 들어간 KEDO 대북 경수로사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평가하여 자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추진해온 KEDO 대북 경수로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정부가 KEDO 대북 경수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화합과 공동발전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남북관계에서 경수로사업은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경수로사업을 통해 남북경협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는 금강산관광 사업 및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가능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KEDO와 경수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 및 서방측 인사·기업들과 대거 접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계약, 사업, 노동, 협력방법 등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습하게 되었다. 또한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한은 통행·통신·통관 등의 분야에 있어 적지않은 개방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KEDO와 체결된 각종 협정·의정서 등 제도적 장치는 여타

가치를 유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이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면, 엄청난 외교적 노력과 사업비를 쏟은 KEDO 경수로사업 수행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DO 경수로사업 추진 일지

- 1994.10.21 북한·미국 기본합의 서명(제네바)
- 1995. 1.23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회단」 설치
- 1995. 3.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뉴욕)
- 1995.12.15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1996. 7.19 한국전력 '대북 경수로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 1997. 1. 8 경수로 '부지' 및 '서비스이용 의정서' 발효
- 1997. 8.19 경수로 부지 정지공사 착공
- 1998.11. 9 KEDO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 합의
- 1999. 5. 3 KEDO-일본간 차관공여협정 서명
- 1999. 7. 2 KEDO-한국간 차관공여협정 서명
- 1999.12.15 KEDO-한국전력간 주계약(TKC) 서명
KEDO-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 서명
- 2000. 4.21 북한, 사용후 연료봉 봉인작업 완료
- 2001. 9. 3 KEDO 원전 본관기초굴착공사 착공
- 2002. 7.20 KEDO관련 동해직항공로 첫 취항(양양-선덕)
- 2002. 8. 3 원자로 1호기 콘크리트타설공사 실시
- 2002.10.16 북한,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 시인
- 2002.11.14 KEDO 집행이사회,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
- 2003.12. 1 KEDO 경수로사업 1년간 일시중단(suspension) 발효
- 2003.12.17 경수로 건설현장 우즈베키스탄 인력 철수
- 2004. 2.29 경수로 건설현장 북한 인력 철수
- 2004.12. 1 KEDO 경수로사업 중단기간 1년 연장 발효
- 2005. 7.12 한국정부, 대북 직접송전 제안
- 2005. 9.19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 2005.11.22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종료 원칙 합의
- 2005.11.30 KEDO 경수로사업 중단기간 만료
- 2006. 1. 8 경수로건설 KEDO 및 현장 잔류인원 최종 철수
- 2006. 5.3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종료(termination) 결정
- 2006.11. 7 KEDO-한국정부 간 대출금 상환유예 양해각서(MOU) 체결
- 2006.12.12 KEDO-한국전력간 사업 종료협약(TA) 서명·발효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

VI

제1절 제도적 기반 조성

제2절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기능 활성화

제3절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영

제4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관계 진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국내적 기반 구축과 더불어 남북간 경험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VI

남북관계 발전 기반 조성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6년 남북간 왕래인원이 10만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2005년 남북교역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 시대에 진입한데 이어 2006년에는 1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 등의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다.

우선 정부는 남북관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여야 합의하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 발전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진전되는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내적 기반 구축과 더불어, 남북간에도 경험분야를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였다. 2000년 4개 합의서를 시작으로 2006년 현재 총 13개 경험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보다 제도화된 여건하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10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어 남북경협을 위한 다양한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남북경협을 위한 높은 벽을 한 단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제도적 기반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제1절 제도적 기반 조성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대화가 증가하고 각 분야의 교류·협력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뒷받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대북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 있어서 국회·정당의 협력과 국민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12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6년 6월 남북관계 발전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동법 시행령('06.6.30)과 시행규칙('06.11.17)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 평화공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완비하였다.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 주요 구성 : 총4장 23조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원칙 △남북관계 성격
-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 △정부의 책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 * 발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정부위원 11인, 민간위원 9인(국회추천 7인, 위원장추천 2인) 등
- 제3장 남북회담대표 임명 등
 - △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 △공무원의 복한 파견 등
-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절차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및 효력정지
- 부칙
 - △법률 시행전 국회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에 대한 경과조치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발전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추진,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남북관계 이용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북정책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되 현실적으로 내국관계나 국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아울러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합의된 정신을 국내법으로도 재확인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 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 대북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다각적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에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1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대국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지던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절차와 대표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른 권한 행사와 대북정책의 합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포함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 등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 발효절차를 마련하고 동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발전법의 발효와 함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체계를 완비함으로써 대북정책의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또한 남북간 회담·교류 등 모든 대북정책을 법령 안에서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남북관계 발전법 시행령 주요 구성 : 총4장 23조

- 제1장 총칙
 - △ 제정목적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요청 △기본계획 등 고시 △ 유관부처간 협조 △ 시행계획 점검 등
- 제2장 위원회 등
 - △ 발전위원회 운영 및 심의사항 △ 실무위원회 구성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남북회담운영을 위한 협의 △ 공무원의 북한 파견 등
- 제4장 남북합의서 공포 등
 - △ 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 합의서의 공포 및 관리 △ 합의서의 효력정지

2.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법령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8차례에 걸쳐 관련법령을 개정하였고,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하위 법령도 갖추어 왔다.

2005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2005.5.31) 작업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변화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물품의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포괄승인제를 도입하였고,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 주민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금강산관광객등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2005.1.31)하여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증서류를 면제하고,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2005.3.23)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및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남북이 합의하여 개성공단 내 설치한 남북경제협력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운영규정」을 새로이 제정(2005.11.20)하였다.

2006년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2006.1.20)하여 손실보조의 기업별 약정한도를 높이고, 기금지원의 공정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사업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승인 절차에 대한특례」를 개정(2006.5.12)하여 북한방문증명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북한도 우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채택(2005.7.6)하여 남북경제협력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3.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및 제도화 추진

남북경제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합의수준을 넘어 법적·제도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북간 합의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남북간 경협분야 합의서들을 채택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협합의서를 체결(2000.12.16)한 데 이어, 2004년까지 추가로 「남북해운합의서」 등 9개 경협합의서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남북은 각기 내부절차를 거친 후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13개 경협합의서를 정식 발효시켰다. 한편 정부는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고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5.12.29)하였다. 동법에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체결된 13개 경협합의서는 물론 향후 체결될 남북간 경협합의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경협분야 합의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진행중인 경협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등 남북공동기구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권능을 갖는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은 2006년 6월에 개최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일정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4일 쌍방 위원명단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였으나, 이후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후속 합의서 체결, 공동위원회 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3개 경협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2000.12.16 체결	2003.6.30 국회동의	2003.8.20 발효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2002.12.6 체결	2004.9.23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02.12.8 체결	2004.9.23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2004.12.9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12 체결	2004.9.23 국회동의		2005.8.1 발효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4.1.29 체결	2004.9.23 국회동의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4.13 체결	2004.12.9 국회동의		
남북해운합의서	2004.5.28 체결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절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기능 활성화

남북간 경제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개소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하 경협사무소)는 남북 사무소간 상시적 협의를 통해 경협여건을 개선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업협의를 지원하고 있다.

1. 남북기업간 사업추진 지원

경협사무소 개소로 남북기업간 사업협의를 개성에서 진행되어, 우리 기업들이 제3국에서 북측과의 사업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던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5년까지 중국 단둥에서 매년 5월 및 11월경에 개최되던 의류 위탁가공 상담회를 2006년 부터 경협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의류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간 사업협의를 경협사무소로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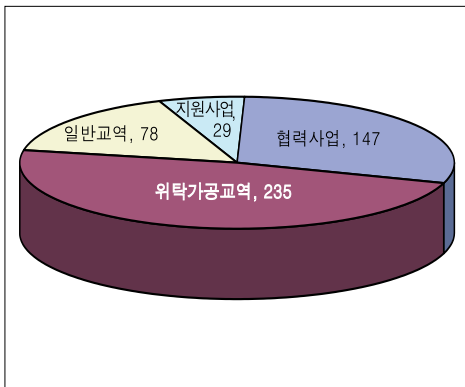
경협사무소 개소 이후 남한측 기업인 1,556명, 북한 민경련 및 기업소 관계자 1,262명이 개성을 방문하여 총 489회의 남북기업간 사업협의를 개최되었다.

경협사무소는 나아가 북한측 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대북 경협사업 제안, 작업진도 파악, 물품선적 확인 등 다양한 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북한 현지 공장방문이 어려운 남한측 기업들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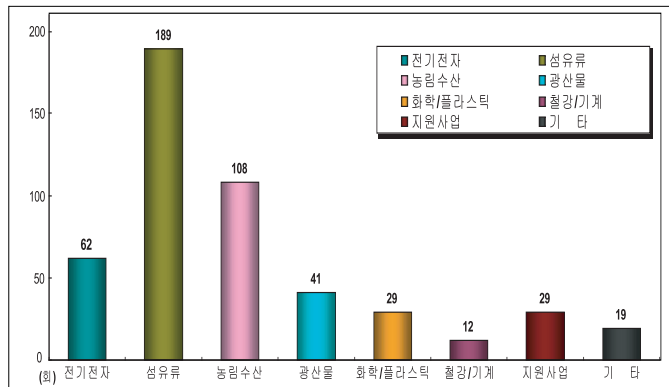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현황

기 간		협의건수	방 문 인 원		
			남 측	북 측	합 계
2005년	11월	17	33	27	60
	12월	26	127	84	211
	소 계	43	160	111	271
2006년	1월	11	48	32	80
	2월	26	67	63	130
	3월	23	106	61	167
	4월	66	145	71	216
	5월	41	137	109	246
	6월	61	173	156	329
	7월	39	156	126	282
	8월	34	115	116	231
	9월	26	80	83	163
	10월	19	72	54	126
	11월	39	98	114	212
	12월	61	199	166	365
	소 계	446	1,396	1,151	2,547
	합 계	489	1,556	1,262	2,818

사업형태별 사업협의 건수



사업분야별 사업협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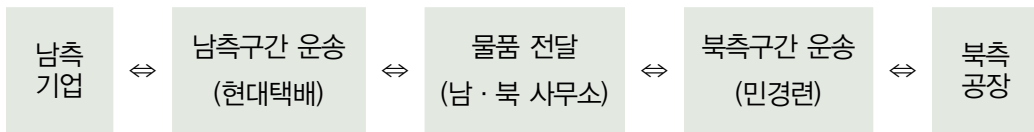


남북경협과 관련한 각종 문건(원산지증명서, 사업계약서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경협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도 제고되고 있다.

2. 대북사업 추진여건 개선

2006년 5월 4일 남북측 사무소간 「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종래 중국을 경유하여 전달되던 견본이 개성을 통해 송달 가능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57개의 우리 측 기업들이 총 223건의 견본을 송달함으로써 견본 송달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남북간 견본 송달지원 체계



남북기업의 실무자들이 견본 또는 시제품(試製品)을 보면서 경협사무소에서 기술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남북경협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전기전자분야로 경협분야를 다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협의를 2006년 1월 「(주)폴리통상→모란봉피복공장」간 첫 기술협의 후 2006년 12월 31일 현재 총 50회 개최되었다.

아울러, 북한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발급받는 데 종래 1개월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2006년 5월 이후 일정기간 동안 수시방북이 가능한 복수초청장이 발급(전체 초청장 대비 26.3%)되었다.

3. 경협 촉진사업 추진

경협사무소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소 초기에는 남북측 경협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경협사무소로 초청하여 총 4회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경협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4월 이후에는 이러한 간담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 의류, 농산물, IT등 분야별 교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업추진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소내 상품전시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상품전시실에는 남북간 위탁가공 교역제품, 개성공단 생산제품, 북한 생산제품 등 총 5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향후 경협사무소에서는 상품전시회 교차 개최, 경제시찰단 상호과견, 북한 무역실무인력 연수 등 다양한 경협 활성화 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협기업 초청 간담회



경협사무소내 상품전시실

제3절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1.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2006.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계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0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1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6
2001	500,000	1,080	310,000	29,406	840,486
2002	490,000	78	505,000	42,036	1,037,114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계	3,246,400	2,294	3,752,683	398,203	7,399,580

* 공자기금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자발적인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6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3조 2,464억원, 민간출연금 23억원, 운용수익금 3,77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조 7,527억원, 기타 수입금 211억원 등 총 7조 3,996억원이 조성되었다.

한편, 북핵실험 등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여 2007년도 정부출연금 규모는 5,000억원으로 2006년도 6,500억원에 비해 1,500억원이 감소하였다.

2.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크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무상지원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유·무상 지원으로 대별하여 집행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무상지원 사업은 2006년 12월말까지 총 571억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인적왕래 지원 53억원, 사회문화협력 지원 74억원 등 총 127억원이 집행되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적왕래 분야에 금강산 체험학습경비 지원 47억원,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관경비 지원 1억원 등 12건의 지원이 있었고,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30억원, 6·15 민족통일대추전행사 지원 13억원, 평양과기대 건립 지원 10억원 등 20건의 지원이 있었다.

남북교류협력 유상지원 사업은 2006년 12월말까지 총 2,160억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교역경협 자금으로 479억원(교역자금 대출 27건 73억원, 경협자금 대출 23건 406억원)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5년 293억원(교역자금 대출 82억원, 경협자금 대출 211억원) 대비 63% 증가한 규모이다.

민족공동체회복 무상지원 사업은 2006년 12월말까지 총 1조 9,436억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 이산가족지원사업은 99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3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25억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지원 68억원 등이다.

2006년도 인도적 지원사업은 60건 2,12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비료 35만톤 지원 1,200억원, 대북 수해복구 지원 552억원,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대북연료 지원 52억원 등이다.

2006년도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총 23건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636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 448억원,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지원 277억원 등이다.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유상지원 사업은 2006년 12월말까지 총 2조 2,467억원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에는 대북 역사(驛舍)건축 기자재 차관대출 153억원,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대출 78억원 등 총 5건 359억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부터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과 자체검증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금지원 결정 및 집행·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지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2006.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는 기금사업 건수

구분	자금 종류	91~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경 상 사 업	인적왕래지원		277	253	23,686	1,142	1,056	3,786	5,289	35,487	
			(1)	(1)	(9)	(3)	(7)	(13)	(12)	(43)	
	남 북 교 류 협 력 지 원	사회문화협력 지원	980	637	102		654	3,098	7,468	7,375	20,314
			(3)	(1)	(1)		(2)	(10)	(18)	(20)	(50)
	교역경험손실 보조		1,268								1,268
			(1)								(1)
	소 계		2,248	914	354	23,686	1,796	4,154	11,253	12,664	57,070
			(4)	(2)	(2)	(9)	(5)	(17)	(31)	(32)	(94)
	이산가족교류 지원		986	2,830	1,299	2,029	2,996	3,158	13,289	9,908	36,494
			(3)	(5)	(5)	(6)	(6)	(5)	(7)	(6)	(28)
	민 족 인도적 지원 사업		260,827	97,737	97,615	122,585	150,134	122,547	186,621	212,536	1,250,600
			(13)	(9)	(25)	(30)	(36)	(46)	(52)	(60)	(202)
	공동체 회 복 지 원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4,882	15,994	89,850	36,789	76,318	76,096	204,475	152,091	656,493
			(1)	(3)	(1)	(5)	(6)	(10)	(18)	(23)	(36)
- 경제분야협력 기반조성		4,882	14,578	89,850	36,789	76,318	76,033	204,475	152,091	655,015	
		(1)	(1)	(1)	(5)	(6)	(9)	(18)	(23)	(33)	
- 사회문화분야 협력기반조성			1,416				62			1,478	
			(2)				(1)			(3)	
소 계		266,695	116,560	188,763	161,402	229,447	201,801	404,385	374,534	1,943,588	
		(17)	(17)	(31)	(41)	(48)	(61)	(77)	(89)	(266)	
경상사업지원 합계		268,943	117,474	189,118	185,088	231,243	205,954	415,639	387,199	2,000,657	
		(21)	(19)	(33)	(50)	(53)	(78)	(108)	(121)	(360)	

용 자 사 업	남 북 교 류 협 력 지 원	교역·경협 자금대출		500	46,072	36,157	18,710	37,377	29,311	47,910	216,037
			(1)	(10)	(8)	(31)	(76)	(51)	(50)	(209)	
		- 교역자금 대출		500	1,072	390	7,933	13,677	8,259	7,327	39,158
			(1)	(9)	(5)	(29)	(64)	(37)	(27)	(172)	
		- 경협자금 대출			45,000	35,767	10,777	23,700	21,052	40,583	176,879
					(1)	(3)	(2)	(12)	(14)	(23)	(37)
	소 계		500	46,072	36,157	18,710	37,377	29,311	47,910	216,037	
		(1)	(10)	(8)	(31)	(76)	(51)	(50)	(209)		
	민 족 공동체 회 복 지 원	민족공동체 회복지원대출	67,523	86,740	18,955	127,325	192,053	145,957	206,781	27,004	872,338
			(1)	(1)	(1)	(2)	(4)	(4)	(7)	(4)	(11)
		경수로사업 대출		325,936	300,284	300,883	328,745	86,984	22,678	8,883	1,374,393
			(1)	(1)	(1)	(1)	(1)	(1)	(1)	(1)	(1)
		소 계	67,523	412,676	319,238	428,208	520,798	232,941	229,459	35,887	2,246,731
			(1)	(2)	(2)	(3)	(5)	(5)	(8)	(5)	(12)
	용자사업지원 합계		67,523	413,176	365,310	464,365	539,508	270,318	258,771	83,797	2,462,768
			(1)	(3)	(12)	(11)	(36)	(81)	(59)	(55)	(221)
	총 계		336,466	530,650	554,428	649,454	770,751	476,273	674,409	470,995	4,463,425
			(22)	(22)	(45)	(61)	(89)	(159)	(167)	(176)	(581)

2003년 2월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등 기금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 대출(30억원 미만 교역자금대출, 50억원 미만 경협자금 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실적한도)대출방식의 도입, 금리인하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였다.

2004년 1월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등 기금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요자금의 70~80%에서 80~90%로 대출규모를 확대하였고, 신용대출 대상 기업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신용대출 비율을 종전보다 10% 인상하고, 신용보증서 제출시 미보증금액에 대해 신용대출, 북한 소재 자산을 첨단보로 인정, 신용대출 실시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였다.

2005년 1월에는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북 투자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맞추어 기존의 경협자금 대출을 투자자금 대출, 산업용지분양자금 대출, 운전자금 대출, 사회간접자본 시설자금 대출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한정된 기금재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타 금융기관과의 협조 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남북간 교역의 안정성 제고와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2004년 5월부터 교역분야 손실보조제도를, 2004년 9월에는 경협분야 손실보조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9월부터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자금을 대출 승인 하면서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는 등 대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6년 1월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손실보조 약정한도를 상향조정(경협손실보조는 20억원에서 50억원, 교역손실보조는 5억원에서 10억원) 하고 경협손실보조 신청요건 등을 완화(3년이상 업력→1년이상 업력)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하고 기금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4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내 부처간 협의기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은 통일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5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3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말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개 부처 1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총 178회 개최하여 모두 35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06년에만 총 1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모두 49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교류협력 부문이 25건,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인도적 지원부문 8건,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개성공단 건설 관련 부문이 4건,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이산가족 교류 부문 3건, 기타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 개정」 등이 9건을 차지하였다.

2006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회차	의결일자	안건	
		의안번호	의안
164	'06.1.9	300	남북협력기금운영관리규정 개정
165	'06.1.26	301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평양과기대 건립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02	백두산지구 관광인프라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03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66	'06.2.8	304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67	'06.2.17	305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협력기금 지원
		306	제1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지원
168	'06.2.27	307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308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309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10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 한국전력IT 협력기금 대출 승인
		311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
169	'06.3.27	312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본청사 및 숙소 신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0	'06.4.10	313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14	금강산 관광지역 소방설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1	'06.4.27	315	남북간 육로통행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16	북측 통신연락소 수요 통신자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17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18	2006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19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개정
		320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21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2	'06.5.26	322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323	UNESCAP의 제2차 대북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24	제14차 6.15계기 특별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협력기금 지원
		325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북협력기금 대출변경
		326	동해선 남북도로연결 총사업비 변경 및 소요자금 지원
173	'06.6.13	327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개정
		328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29	남북공동행사 관련 남한방문 북한주민 접촉절차에 관한 특례 제정
		330	2006 『6.15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4	'06.7.10	331	통합상황실(경의선)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32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일부 개정
175	'06.8.25	333	동해선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립 소요자금 지원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334	금강산·개성지역 기상관측장비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35	2006년도 포항공대의 『북한 경제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36	2006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37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338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6	'06.9.28	339	'06년도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40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IT인력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41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용역재착수 등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
		342	(주)신원, (주)태성산업에 대한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
177	'06.10.29	344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345	경의선 열차시험운행 행사비 정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78	'06.12.22	346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47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48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집행계획 변경
		349	대북 자재·장비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추가분 지원 증액



남북대화의 진행

VII

제1절 정치분야 회담

제2절 군사분야 회담

제3절 경제분야 회담

제4절 인도·사회문화 분야 회담

2006년의 남북대화는 2005년부터 확대되어온 남북대화의 기초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져왔으나, 하반기 상황으로 남북대화의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북간 판문점 및 군당국간 연락채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상황관리 노력을 지속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VII

남북대화의 진행

2006년의 남북대회는 2005년도부터 확대되어 온 남북대화의 기조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져 정치분야 5회, 군사분야 4회, 경제분야 8회, 인도·사회문화분야 6회 등 총 23차례 개최되었다.

정치분야에서는 2006년 4월에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문제제기로 당초 일정보다 연기되어 개최되었으나,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호혜적 경협구조 창출, 과거청산·인도주의 문제 실천, 남북협력의 저변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에 동의함에 따라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회가 5월에 진행되었다.

군사분야에서는 2004년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이후 1년 9개월여만에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3월2일 부터 4일까지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5월 16일에서 18일간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어,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문제 등 서해평화정착 문제와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강하구 골재채취,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호혜적 경협사업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인도·사회 분야에서는 2월 21일 부터 23일 까지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상봉 확대문제 등을 협의하였고,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등 사회문화 분야의 회담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여건이 일순간에 악화되었다. 미사일발사 직후 7월11일 부터 13일 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설득하였으나, 상호 입장차이로 회담은 조기종료되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남북간 관문점 및 군당국간 연락채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상황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8월의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실무접촉, 10월의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11월의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등의 남북대화도 계속 추진해 나갔다.

남북회담개최현황 (2001년~2006년)

구 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161	8	33	38	25	34	23
정치 분야 (28건)	남북장관급회담	15	2	2	4	2	3	2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1		1				
	남북차관급회담	1					1	
	특사파견	3		1	1		1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4					3	1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2					2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실무접촉	2						2
군사 분야 (34건)	남북군사실무회담·수석대표접촉	8	2	3	2			1
	남북군사실무접촉	10		6	4			
	군사통신실무자접촉	1		1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2			2			
	장성급 군사회담	4				2		2
	장성급 실무대표회담·수석대표접촉	7				3	3	1
	장성급 군사통신실무접촉	2				2		
경제 분야 (66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급접촉	13		2	4	2	4	1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					1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4					1	3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회담	2	1	1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5		1	2	1	1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12		3	5	2		2
	임남담 공동조사실무접촉	1		1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2		1		1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2		1				1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	1	1		1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1						1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1	1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5		2	1	1	1	
	남북해운협력협의회	1					1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1					1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1					1		

경제 분야 (66건)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1			
	청산결제실무협의	3			1	2		
	청산결제거래위한 은행접촉	2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4		1	3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1				1		
사회 문화 인도 분야 (33건)	남북적십자회담	5	1	1	1		1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5		2	1	1		1
	대북 수해복구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						1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실무접촉	3					3	
	금강산면회소건설 비공개접촉	2			2			
	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	3			3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무접촉	1					1	
	8.15 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2					2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3					1	2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 실무접촉	3					2	1
	용천재난구호회담	1					1	
	아시아경기대회참가실무접촉	2		2				
	U대회참가실무접촉	1			1			
아테네올림픽공동입장실무접촉	1					1		

제1절 정치분야 회담

2006년에는 2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였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에 의해 연기되어 개최되었던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2006.4.21~24)에서는 초반 남북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5년 활성화된 남북대화의 기초를 이어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7.11~13)에서는 쌍방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회담을 조기 종료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 이외에도 정치분야에서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실무접촉(2006.5.23), 2차례에 걸친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실무접촉(1차 : 5.16~17, 2차 : 5.29)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1. 남북장관급회담

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8차 장관급회담은 당초 2006년 3월 28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을 이유로 연기를 통보해 옴으로써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고 20여일 연기된 4월 21일부터 24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종석(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유진룡(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실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부국장) 전중수(조평통 부장)

우리측은 2006년도에 열리는 첫 번째 고위급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평화 및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데 목표를 두고 회담에 임하였다.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상호 호혜적 경험구조 창출, 인도주의 문제의 실질적 해결, 새로운 사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의했다.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장성급 군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서해 공동어로 등 평화정착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강하구 골재채취,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민족공동 자원개발 특구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상호 호혜적인 경험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분단이 초래한 불행한 과



거를 청산하고 민족 화해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우편물·영상물 교환 등을 통한 상봉기회의 확대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항의하고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외세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낡은 대결시대의 그릇된 관행과 관습,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 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모든 합동군사연습 완전 중지, 지역·업종·규모에서 제한없는 투자와 경제협력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6.15를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지정하고 오는 6.15 공동선언 6주년 행사에 남북당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 및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한 끝에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호혜적 경험 확대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등 8개항의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회담 초기 북한은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 존중,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의 끈질긴 설득으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남북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경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우리 측이 제기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공동자원 개발 등에 대해 북측은 공감을 표시하였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등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은 김영남씨 문제와 관련된 우리 측의 확인요청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
2.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4.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
5.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
 -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
 -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건설사업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
6.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7.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8. 제19차 장관급회담을 '06.7.11~14까지 부산에서 개최

나.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회담이었다. 8개월째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여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예정된 날짜에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측은 회담 개최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정세가 어려울수록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및 국제사회의 입장을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7월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핵심의제로 삼고, 이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으로 회담에 임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종석(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유진룡(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실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정일(조평통 부국장) 전중수(조평통 부장)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진전되고 있던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했고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하던 국내 여론이 악화되었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여론 또한 도전을 받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6자회담 복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이를 통해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만약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은 보다 엄중해질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한편, 북한은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과 정세를 위해

하는 제반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자고 하면서 성지·명소·참관지 제한 철폐, 합동군사훈련 완전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서도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좁혀지지 않자 북한은 회담의 조기 종결을 제의하였고, 우리측도 쌍방간의 입장 차이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논쟁만 반복하기보다는 회담을 종결하는 것이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공동보도문 합의없이 회담을 조기종료하였다.

2. 6.15 남북공동행사 당국간 실무접촉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한다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광주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006년 5월 23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실무협의를 통해 대표단의 규모는 8.15 민족대축전 때와 같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정도로 하고, 대축전 기간 중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에 기본적으로 참가하되 당국대표단간 공동기념행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일정 관련 세부사항은 관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하기로 하고, 6개항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남중(통일부 과장)	황철(내각사무국 과장)
대 표	백원필(통일부 사무관) 김혜경(통일부 사무관)	정금철(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리영국(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원)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작년 8.15 민족대축전 때와 같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정도의 당국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
2. 북한 당국대표단의 남한 지역 체류기간은 2006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
3. 쌍방 당국대표단은 대축전기간 중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에 기본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국대표단간 공동기념행사 등을 진행
- 4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지난 해 공동행사의 관례에 따름.

3.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실무접촉

2005년 8월 15일 남북공동행사시 북한 당국 대표단장으로 서울에 왔던 김기남 당비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방북 초청의사를 전달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6년 4월 중·하순경 방북 희망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같은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방북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북시기를 6월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2월 20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4월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월중 방북에 동의”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움에 따라 방북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차례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북한측에서는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여하였다.

가. 1차 실무접촉(5.16-17, 금강산호텔)

1차 실무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방북시기는 6월 하순 3박 4일 일정으로 하고, 방북단은 특별수행원, 경호·의

전·의료지원단, 정부지원단, 기자단 등으로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차 실무접촉은 5월 29일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나. 2차 실무접촉(5.29, 개성 자남산 여관)

2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1차 접촉시 제기사항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방북 경로 및 방북단 규모 등 주요 쟁점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의 결과,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구체적인 방북경로, 방북단 규모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접촉을 갖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2차 접촉 후 6월14일부터 광주에서 개최된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기간 중 우리 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북한 관계자 사이에 동 문제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확답을 미룸으로써 쟁점사항이 합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정세변화가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출상황 때문에 지난 5월달에 합의했던 6월말 방북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방북 연기 결정을 6월 21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위한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제2절 군사분야 회담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05.12.13-16)에서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과 북은 2월 3일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개최하여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이후 1년 9개월여만에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3월2일에서 3일까지 통일각에서 개최되었고 이어서, 5월16일부터 18일까지 평화의 집에서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두 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은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 설정, 경협외 군사적 보장문제 등을 중점 협의의제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나, 북한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우선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실질적인 협의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었다.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및 실무회담

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이 2월3일 관문점 북한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문성묵 국방부 대령이, 북한측에서는 박기용 인민무력부 상좌가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의제, 개최일자, 장소 등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회담의 의제는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회담장소와 개최일자에 있어 의견차이가 있었다.

회담장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5년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은 현지시설 등 여건문제를 이유로 백두산 개최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지는 입장을 제시하고, 회담 개최일자도 3월말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회담장소 변경 제의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수용하였으나, 회담 개최일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므로 2월 중순 경으로 개최일자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이틀간 판문점 북한지역 통일각에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나.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2.3, 판문점 통일각) 이후, 남북 쌍방 군사당국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3월 2일부터 3일까지 판문점 북한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한민구(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김형수(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과장) 엄현성(국방부 대령)	리형선(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제2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제시하고,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철도·도로를 이용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과 제2차 국방장관

회담개최 문제 협의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서해상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문제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도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 문제와 함께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공동어로 실시, 충돌방지 개선 등 서해상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졌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5월초 우리측이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이 회담개최에 동의함에 따라,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한민구(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김형수(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과장) 엄현성(국방부 대령)	리형선(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5월 25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문제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3차 회담에서 제기한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등 서해평화정착 방안 에 대해서도 본격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남북이 관할하여온 수역과 그 기준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존중·준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지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와 같이, 서해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우리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로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시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2.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북한은 2006년 9월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간에 이미 이룩한 군사적 합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 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10월 2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문성묵 국방부 대령이, 북한측에서는 박기용 인민무력부 상좌가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측이 장성급군사회담 합의를 위반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통행질서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장성급군사회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미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

협사업의 군사보장 조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열차시험운행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서 군사보장합의서의 채택 문제가 우선적으로 협의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제3절 경제분야 회담

경제분야에서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등 총 8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경의선, 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의 태도변화로 이행되지는 못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같은 호혜적 성격의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하는 한편, 과학기술협력, 자연재해 공동방지, 제3국 공동진출 등 실질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실무회담의 개최에도 합의하였다.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위원급 실무접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세 차례의 위원급 실무접촉에서는 열차시험운행 실시와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이 주된 협의과제였다.

가.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2005년 11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이후 남과 북은 협의 중인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서면협의를 통해 합의서안을 조율하였다. 이후 북한의 제안에 따라 2006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남과 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의 쟁점인 경공업 원자재 제공규모와 상환방식에 대해 입장을 조율하였으나, 상호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웠다.

이외에도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수산협력사업 등 진행 중인 경협사업과 필요한 군사적 보장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서교환 방식 또는 추가접촉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남과 북은 2006년 4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일정과 협의안건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제의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본회의 개최 전에 제3차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이 5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천식(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 권영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북한은 먼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타결하고, 열차시험운행을 비롯한 철도·도로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지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반면, 우리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이전에 개최되는 예비회담의 성격을 가진 만큼, 한강 하구 골재채취, 자원개발 특구, 열차시험 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개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경험 현안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와 관련, 경공업 원자재 제공규모 및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유무상통의 원칙이 지켜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열차시험 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도 경공업 원자재 제공규모와 상환방식, 열차시험 운행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입장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다 결국 동 실무접촉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다.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이후 개최된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는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던 열차시험운행을 2006년 5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북은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의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남북은 동 접촉에서 열차시험 운행 행사계획,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일정 및 장소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천식(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 권영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열차시험운행은 기념행사를 5월 25일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주빈은 장관급으로 하고, 참석자 규모는 총 500명으로 합의하였다. 경의선에는 우리측 통일부장관(이종석)과 북한측 장관급회담 단장(권호웅)이 참석하고, 동해선에는 우리 측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이 북한측 철도상(김용삼)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의 제공규모, 상환방식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며, 최종 합의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2006년 5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열차시험운행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무산되었다. 이에 우리측은 5월 2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북한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측은 북한의 정확한 의도 파악하고 열차시험운행에 관한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 전달할 필요성,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 서 개최하였다.

동 회담에서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

해서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쌍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9개항의 합의를 채택하고,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우리측은 무엇보다 열차시험운행 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민족공동 자원개발, 개성공단 건설 등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경제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무회담의 추진일정도 협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위원장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주동찬(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김천식(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 나도성(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 원인희(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강계두(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 권영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북한은 회담기간 내내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였다. 그렇지만 열차시험 운행 연기와 관련하여 우리측에 대해 서해 NLL 문제협약에 호응하고, 상대방의 사상 및 체제모독을 중지하며, 군사적 보장을 위한 결실 있는 경협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였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개통식 일정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였고, 회담기간 내내 동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반면, 북한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를 우선 채택, 발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실시’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를 조건부로 연계하여 최종 합의를 채택하였다. 쌍방은 6월 6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를 서명·채택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최종 서명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요지

1.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
2.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
3. 제2차 개성공단 실무접촉(6.20-21, 개성)을 개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및 숙소 문제 등 협의
4. 제1차 임진강 수방 실무접촉(6.26-27, 개성)을 개최, 공동조사 방법 등 협의
5. 자연재해 공동 방지에 적극 협력,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6. 경제·자원개발 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 문제 협의(7월중 개성 실무접촉 개최)
7. ‘경공업 및 지하자원협력 합의서’ 발효 시점에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8. 문서교환방식으로 △수산협력 실무협의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상사중재위·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 공동위원회 명단교환 및 회의 일정 협의
9. 9월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요지

1.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 북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대가를 상환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수량, 수송 경로 등은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2.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 북측은 2006년 중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슘크링카 등으로 상환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 하는 가격
4. 북측은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
5.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슘크링카 등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자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
6. 북측은 합의되는 협력대상의 광물 탐사 자료, 굴진, 채광, 선광 등 설비자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자료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보장
7. 북측은 현지 공동조사, 투자효과성 평가, 시설설치와 기술지원, 기반시설, 출입 및 체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 운행 등 보장
8. 남과 북은 합의서 발효 1개월 이내에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통보

2.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가.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를 통해 합의된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개통식 문제 협의를 위해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2006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개통식 문제, 추가 자재·장비 지원 문제, 자재·장비 사용내역서 징구, 시험운행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개통식은 이미 남북간 수차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홍광표(건설교통부 팀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 표	김기혁(통일부 과장)	김 용(광복총회사 총사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부원)

례 합의된 사항인 만큼, 행사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과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에 규정된 자재·장비 사용내역서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 개통식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입장과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일정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으며, 우리측에 자재·장비의 추가지원을 요청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3회, 대표접촉 2회 등 6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하였으나,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차기 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과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남북은 2006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과 철도개통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열차시험운행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홍광표(건설교통부 팀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 표	김기혁(통일부 과장)	량기건(민족경제협력연합회 책임부원)

을 5월 25일 실시, 철도·도로 개통식을 6월 14일 개최, 철도·도로 운영을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 마련, 철도·도로 자재장비 사용 내역서 통보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열차시험운행 및 궤도검측차 운행과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등 한단계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철도개통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3회, 비공식 수석대표면담 1회 등 총

합의서 요지

1.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 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시험운행을 5월 25일 진행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 부록 1에 따르며, 열차 시험운행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로 협의, 확정
 -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구간 자기측 지역에서 각기 사전 점검을 진행하며 시험운행전 1-2시간에 앞서 북측구간에서 남측 궤도검측차에 의한 공동점검을 진행
2.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① 남측은 북측의 경의선 및 동해선 역사건축 마무리 및 개성역 배수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재를 본 합의서 부록 2와 같이 제공
제공된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 『첨부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
 - ② 북측 철도연결구간에서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차량장비 기술지원이 계속 진행되도록 협력
 - ③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철도·도로 연결 공사용 자재·장비 사용내역을 빠른 시일 내 남측에 통보
3.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운영을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며, 열차 운영을 위한 열차운영주파수는 155.9250MHz로, 작업용 주파수는 155.9625MHz로 하기로 한다.
4. 빠른 시일 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소규모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점차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
5.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 명단을 빠른 시일안에 교환하고, 합의되는 날짜에 제1차 회의를 진행

6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호입장을 조율하고 총 5개항의 합의서에 가서명하였으며,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추후 문서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6년 6월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고경빈(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박철수(개성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대 표	박 철(통일부 팀장) 서명교(건설교통부 팀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경제담당 부원) 류창만(중앙특구지도총국 3처장)

쌍방은 출입증 제도의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건설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하였다. 북한은 우리측이 제시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지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노동력 공급문제는 개성시 외부로부터의 인력조달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주택과 편의시설의 건설을 남한측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출입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연중 상시통행보장을 위해 양측 출입사무소(CIQ)를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근로자 임금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

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환전소 설치·운영과 통근열차 운행과 개성공단 방문 확대, 기반시설 건설 협조 등도 제시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노력·공동해결 원칙’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2회 등 총 3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과 북은 200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접촉에서 쌍방은 개성공단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를 비롯한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개성공단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편의시설 건설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년 6월 21일
개 성

4.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에 따라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을 2006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2005년에 실시한 단독조사결과 검토,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 실시방안, 홍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세부대책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이 전달해 온 단독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공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원인희(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고상복(기상수문국 부국장)
대 표	김기혁(통일부 과장)	김태이(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동조사 실시계획을 조속히 협의·확정하며,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수피해 방지대책과 임진강유역 댐 및 임남댐 방류계획의 사전통보, 황강댐·구룡댐 건설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측의 수용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홍수통보체계 수립과 산림조성사업이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대책의 근본문제라고 주장하고, 산림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묘목 제공방안과 수량을 우선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단독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제공한 것이며, 공동조사는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루어지면 시행할 수 있고, 홍수예보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댐 방류계획의 사전통보에 대해서는 북한 지역의 댐들이 모두 ‘무넘이 언제’ (수문이 없는 댐)들이므로 현재로서는 통보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4회, 전문가접촉 1회, 대표접촉 2회 등 총 8차례의 접촉을 통해 협의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5절 인도·사회문화 분야 회담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은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제7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인도분야 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끝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도 남북은 북한의 수해 복구지원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분야에서의 남북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갔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과 2차례에 걸친 2008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하였다.

1.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우리측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06년 1월 12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1월 16일 회신 전화통지문에서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개최할 것을 수정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부위원장)
대 표	유종렬(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우영관(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동 회담에서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생사주소 확인, 화상상봉·대면상봉행사의 정례화,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확대 실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우리측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6차 적십자회담 및 장관급회담(제15차~제17차)에서 일관되게 제기해온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일반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빠른 시일내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테두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였으나, 그동안 부인해 오던 전쟁이후 시기 행방불명자의 문제를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

우편물 교환 및 생사·주소확인 정례화 문제는 북한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쌍방은 6.15 계기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과 6.15 및 8.15 계기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우리측은 화상상봉센터 설치와 이산가족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설비자재 등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합의서 요지

1.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규모는 남북이 각각 200명씩) 진행
2. 6.15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규모는 남북이 각각 60가족씩) 진행
3.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
4.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
5. 남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는 데 필요한 설비자재 등을 북측에 제공(이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3월중 개최)
6.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은 6월경에 금강산에서 개최

2.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

북한은 2006년 3월 8일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면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실무접촉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지난 제7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측의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자재를 북한측에 제공하는 문제 등 인도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회담기간을 연장하여 3월 22일까지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황정주(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양측은 이산가족사업 확대에 필요한 차량 및 물품구입비용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였으나, 물품구입 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화상상봉센터 설비자재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설비자재의 구체적 사용내역 확인과 더불어 우리측 인원의 현장방문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였고, 북한은 현장방문을 구두로 약속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6.15 계기 상봉은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생사확인 후보자 수가 적을 경우 상봉하지 못하는 가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후보자 수를 확대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세부일정 등에 대해서 판문점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간에 이견이 가장 컸던 분야는 화상상봉 정례화 문제로서 우리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에 필요한 자재설비를 지원하는 만큼 5월부터 월 1회 화상상봉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화상상봉 정례화 문제는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대응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남북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6월 13일 까지 화상상봉센터 건설을 위한 설비자재 지원문제를 협의하였다.

3. 대북수해복구 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2006년 8월 14일 우리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지난 7월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수해 복구자재·장비, 응급구호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1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2006년 8월 1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 실무접촉은 북측의 미사일발사(7.5) 이후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끝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문제 협의를 통해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했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임용훈 (대한적십자사 남북국제본부장)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대 표	김남중(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송혜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황정무(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양측은 실무접촉을 통해 쌀 10만톤, 복구자재·장비 등 지원품목 및 규모에 대해 대체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였다.

분배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분배지역을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복구 후 방문을 주장하다가, 우리측 제안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수해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쌀 등의 지원품목이 조속한 시일내 전달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한 전달을 요청해 왔다. 이로써 남북은 북한의 수해규모, 지원품목 및 규모, 전달시기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마무리하고 별도의 합의서 체결없이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우리측은 실무접촉결과를 토대로 북한측의 수해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해복구 지원품목과 규모를 결정하고, 8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수해복구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은 쌀 10만톤, 시멘트·철근·덤프트럭 등 복구자재 및 장비, 모포, 적십자 응급구호세트 및 기타 의약품 등이었다.

대북 수해지원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전까지 쌀 89,500톤, 시멘트 29,585톤, 철근 3,800톤, 트럭 5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모포 2만장, 긴급구호 세트 1만개, 의약품 등 약 522억원 상당 이루어졌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전달 예정이었던 물품에 대한 지원이 보류되었다.

4. 제3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2005년 중 두 차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05.9.7, '05.11.22)시 합의한 바대로 안중근의사 순국기념일(3.26)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조사 일정 등을 협의할 필요에 따라 우리측은 2006년 3월 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제3차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이 3월 10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를 수락함으로써 3월 20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3차 남북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최완근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전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대 표	이성원(통일부 과장) 김영란(통일부 과장)	김창규(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우리측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3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측에 1986년 중국 현지 답사시 확보한 자료 및 추가 확보자료가 있으면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2005년 11월 14일에 전달한 자료 외에는 더 이상 넘겨줄 자료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05년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수집 조사단이 일본 현지에서 확보한 안중근의사 유해 매장관련 추가자료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우리 측은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남북 공동조사단을 3월 중 구성, 관문점을 통해 명단을 교환하고 4월중 중국 현지답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은 공동조사단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의 사항은 관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하지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공동조사단 구성 및 현지답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4월중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남북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정세 등을 이유로 실무접촉은 어렵다고 언급하며 관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을 주장하였다.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3차 남북실무접촉에서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했으나, 양측은 큰 틀에서 이견없이 이번 실무접촉의 의의 및 사업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보도자료 요지

1. 남과 북은 2006년 3월 20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에 관한 제3차 실무접촉을 진행하였음.
2.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남측이 제공한 일본현지조사 자료를 상호 검토한 후 위치확인을 위해서는 현지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음.
3. 남과 북은 현지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 조사방법, 조사시기에 대해 4월중 관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
4. 또한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 유해위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추가자료들을 정리하는대로 계속적으로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음.

5.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가.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

2006년 4월 13일 우리 측이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을 4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이 2006년 6월 16일 남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6월 29일 개성에서 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측이 동의함으로써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북한은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담에 참여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안민석(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이성원(통일부 팀장) 오영우(문광부 팀장)	정해만(내각 체육지도위 부국장) 박일남(내각 체육지도위 책임부원) 박천일(내각 체육지도위) 정금철(민화협 참사) 이영국(조평통 서기국 부원)

남북은 상호입장을 제시하고 이견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선수단 명칭, 단기, 단가, 공동훈련, 공동위원회 설치, 단일팀 선포식 등에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핵심사항인 선수선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선수선발원칙에 대해 공개선발전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일방만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연맹 랭킹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한은 집단경기(축구, 배구 등)는 선수선발 전 없이 5:5 동수로 선발하고, 개별 및 기록경기는 자격경기전(예선전 등)에서 개별적으로 참가하여 자격을 획득한 남북 선수 모두를 참가시키는 이중적 선발원칙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남북간 경기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종목이 있음을 설명하고 5:5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선발원칙”을 북한이 받아들일도록 설득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출전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시기적으로 촉박한 일정과 자체 선수훈련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여 협의되지 못함으로써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는 각각 참가하게 되었다.

남과 북은 이견을 보인 선수선발 문제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회담을 7월 중순 금강산에 진행하기로 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을 마무리하였다.

나.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회담

2006년 11월 10일 북한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5회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카타르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해 왔다. 아울러 제15차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남북선수단 개·폐막식 공동입장을 제의하면서 실무문제들은 현지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측 제의를 수용하면서 11월 27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회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양측 수석대표를 NOC위원장으로 격상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3차 체육회담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게 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김정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문재덕(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대 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이성원(통일부 팀장) 오영우(문광부 팀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정해만(내각 체육지도위 부국장) 박일남(내각 체육지도위 책임부원) 박천일(내각 체육지도위) 김영철(조선올림픽위원회/아태참사)

우리측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북한측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각각 구성하였다.

남과 북은 2006년 11월 29일 카타르 도하 현지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회담일정에 합의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3차 체육회담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단일팀 구성의 핵심 쟁점사항인 선수선발 원칙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세부 선발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측은 경기력 우선 선발이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우수선수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단일팀의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하고, IOC 등 국제기구에서 엔트리를 확대할 경우 남북간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명하였다. 북한은 객관적인 평가 및 선발기준이 부족하며, 남과 북 전체인민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면서 5대5 동수선발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세부적인 선수선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은 우리측 입장에 대해 진전된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최종 합의를 체결에는 응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양측은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석대표 간에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계속 협의하고 제4차 체육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회담을 종결하였다.

한편, 11월 30일 전체회의 개최전 실무접촉을 갖고 제15차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남북선수단 개·폐막식 공동입장과 단일기 독도표기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국제경기대회에서 통산 8번째로 공동입장하였다.



통일정책의 추진기반 확충

VIII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제3절 통일교육을 통한 합의기반 강화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강화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지원서비스 활성화

제6절 국민 만족을 위한 통일업무 혁신

2006년 한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정책고객과의 대화, 온라인과 홍보물을 통한 정책설명과 통일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대북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VIII

통일정책의 추진기반 확충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견도 보다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과정이 더욱 확대되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4대추진원칙중 하나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적 참여 확대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는 대북정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개방·확대하여 왔다. 또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하였다.

통일부는 2006년 한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정책고객과의 대화, 온라인과 홍보물을 통한 정책설명과 통일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대북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과 만남을 추진하였다.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1. 정책고객과의 대화 추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오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열린 통일포럼」과 2004년 하반기 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장·차관 및 간부진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대화채널이다. 2006년에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민들에게 정책을 상세히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2006년 한해 동안 장·차관은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438회에 걸쳐 언론사와 학계의 남북문제 전문가 그룹은 물론 남북자 관련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정책현안 및 정부입장을 설명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해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분야별 정책고객 관리도 강화하여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비롯한 각 본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자,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인 정책고객과의 직접 대화를 총 1,786회 실시하였다.

이같은 지속적인 정책고객과의 만남과 정책설명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실수요 고객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실현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지문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추진에 참고

하였다. 사회 각 분야의 원로급 인사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를 통해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006년에는 참여정부 제2기 통일고문회의를 새롭게 구성, 총3회의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건의하였다.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 통일교육, 남북회담의 6개 분과 66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2006년 한해동안 총 24회 개최하고, 주요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였다.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 평가회의를 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2회의 정기회의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지문을 통해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및 금강산 체험학습 통일교육 효과 조사를 비롯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서비스 인지도 조사 등 총 6회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정책수립 및 업무개선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의 통일의식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여론조사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 국민의 참여 활성화

정부는 2005년 8월부터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통일고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일리지 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홈페이지 상의 '국민참여마당'에 개설된 '전자공청회', '통일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 및 '통일교육',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마일리지 회원은 2006년 말 현재 총 36,984명이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홈페이지의 '자유토론방', '정책제안' 코너 등에 네티즌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홈페이지 방문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일리지 회원을 포함한 네티즌들이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매월 '통일e眸' 제호의 웹진을 발간하고 있다. 웹진에는 통일정책 정보를 비롯하여 통일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물 소개, 북한에 대한 자료 등을 흥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여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현장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6년 7월에는 정책고객 40여명을 통일부로 초청, 정책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견학하게 하였으며, 12월에는 우수 정책제안 고객과 통일정책모니터 등 20명을 초청하여 '민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금강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5년 이후 마일리지 회원과 자원봉사자 모임인 통일서포터즈 회원 등 130여명이 대북 수해물자 지원, 청소년 금강산체험 연수요원, 통일문화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여 행사 진행을 돕는 등 통일 업무 현장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2004년부터 남북경협 종사 기업인, 학자, 이산가족,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주요 대북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당초 전문가 및 경협 관계자 등 100명으

로 시작했던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2006년에는 분야별 대북정책 및 사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객집단 757명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 국민 333명 등 총 1,090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모니터링 대상과제로 연두업무 계획의 핵심과제 및 주요사업과 관련된 과제 중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10~12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경험, 개성공단 사업,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대북지원, 통일교육 등의 과제에 대해 총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일정책 모니터링」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고객의 목소리를 반영,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만족도 조사결과는 업무개선 및 사업부서 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3. 민간 통일단체 활동 지원

1990년대 이후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는 20개의 신규단체가 추가되어 12월 말 현재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은 총 183개이다.

활동 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교육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국제사회, 시장, 시민사회 등이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국가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왔던 통일정책 분야에서도 민간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민간의 정책참여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민간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각종 국민참여형 통일행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통일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 증가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단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주요 통일사업 추진 민간단체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협력할 부분을 모색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통일만화 그리기 대회', '통일소원 음악회', '통일문예제전' 등 각종 대중행사에 대한 상장, 표창, 후원명칭 사용 등을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공동 사회문화교류 행사로 추진된 '6.15민족통일대축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공동 중국 현지조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남북 화해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체들의 통일정책 토론회, 포럼 등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제언을 적극 수렴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한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교육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북한과 상설적인 대화창구를 갖고 여러 가지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및 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새터민의 생활안정, 사회적응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교육협의회는 회원단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였다.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1.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의 다양화

가. 통일부 홈페이지 및 부서 블로그

통일부 대표홈페이지(www.unikorea.go.kr)는 1996년 12월 개통한 이래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통해 정책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사이트로 자리잡아 왔다.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일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콘텐츠 확충과 디자인 개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분야별 홈페이지 현황

사이트 명	주 소	주 요 내 용
통일부	unikorea.go.kr	부서블로그, 통일소식, 국민참여, 정책자료, 북한연구, 전자민원, 통일부 소개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소장자료검색, 북한/통일정보, 자료실, 북한영화소개, 북한실상설명회, 참여마당
남북회담본부	dialogue.unikorea.go.kr	회담소식,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회담자료실, 판문점, 도서검색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새소식, 남북이산가족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남북교류협력시스템	interkorea.unikorea.go.kr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개성공단
사이버통일교육센터	uniedu.go.kr	온라인 통일강좌, 청소년통일배움터, 자료실, 참여마당

또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긍정적인 해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도 강화해 왔다. 현재 통일부가 운영하는 소속별 홈페이지는 북한자료센터 등 5개가 있다.

인터넷에서 일반화된 블로그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통일부 소식을 접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 8월 정책홍보본부, 혁신재정기획본부, 남북경제협력본부, 사회문화교류본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남북출입사무소, 하나원, 경제협력협회사무소의 부서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통일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되고 차별화된 통일관련 정보와 블로그의 특징인 친근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속한 검색기능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공간이 만들어진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부서블로그의 개설은 인터넷의 주요 사용계층인 청소년에 대한 통일정책 홍보 기능 강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네티즌의 참여와 쌍방향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부서블로그에 게시되는 자료는 통일부 부서소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 각종 통계, 전문가의 통일칼럼, 보도자료, 통일부 행사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자료가 등록되고 있으며, 공모전, 전자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공지하고 안내하는 채널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2006년 부서 블로그에 등록된 자료는 총 1,866건이며 총방문자 119,649명으로 일일평균 자료등록 12.5건, 방문자 798명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부서블로그 운영 현황(2006.8.1~12.31)

부서 블로그명	등록건수	방문자 수	블로그 주소
정책홍보본부	169	22,928	http://blog.naver.com/uni_policy
재정혁신기획본부	59	4,312	http://blog.naver.com/uniinno
남북경제협력본부	80	4,932	http://bolg.naver.com/unieconomy
사회문화교류본부	136	4,692	http://bolg.naver.com/unicul
개성공단사업지원단	1,106	56,631	http://bolg.naver.com/unigaeseong
남북출입사무소	62	4,110	http://bolg.naver.com/uni_chulip
하나원	148	20,289	http://bolg.naver.com/uni_hanawon
남북경제협력 협회사무소	106	1,755	http://bolg.naver.com/unioffice
합 계	1,866	119,649	

나. 정책고객서비스(PCRM)시스템 운영

정책고객서비스는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민간의 고객관리기법인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도입한 것으로, 일종의 맞춤형 정책홍보 서비스를 말한다.

2006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고객서비스를 위해 2004년 2월에 도입한 PCRM시스템에 등록된 고객명단을 재정리함에 따라 2006년말 현재 등록고객은 총 23,500여명에 이른다. 이들 고객을 각 부서 혹은 팀의 실정에 맞게 단위업무별로 분류·관리함으로써 '맞춤형' 홍보에 보다 근접토록 하였다. 이 밖에 통일문제 전문가나 대북 교류 및 지원 관련 NGO 관계자, 언론·방송인 등은 통일

부 전체 차원의 공통고객으로 별도로 범주화하여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PCRMS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자료는 대북지원 및 북핵문제 등 주요 정책설명 자료를 비롯하여 통일문화페스티벌과 같은 주요행사 안내, 정기적인 뉴스레터 등 총 244건에 이른다. 또한, PCRMS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와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경우 북한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와 「주간 북한동향」을 발송하는 등 PCRMS 시스템 운영개선에 반영하였다.

2006년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당시 정부입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PCRMS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전자공청회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사이버 상에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등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 9월부터 2006년 말까지 총 18차례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통일부 홈페이지 자체 게시판에서 운영되어 오다 2006년 6월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신문고 게시판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에 적극 참여한 네티즌을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시상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2006년에는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등을 주제로 2회의 전자공청회가 열렸고, 총 242명이 2,081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2006년 1차 전자공청회에서도 청소년용 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

었다. 특히 참여마당신문고와의 게시판 통합 이후 첫 공청회인 2006년 2차 전자공청회는 참여마당신문고 공청회 기준으로 타 부처와 비교 시 의견 제시 건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5.8~2006.8기준)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에 참고할만한 수준 높은 의견들이 다수 개진되고 있으며 성숙한 토론문화와 함께 통일부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2006년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 기간	주제	의견 제시	총 접속수
제 1 차	2.17 ~ 3.2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 남북한 청소년 교류방안	1,679건	21,040회
제 2 차	8.16 ~ 8.31	북한미사일발사에 우리 정부가 쌀 비료의 지원을 연계시킨 것에 대한 의견, 북한 수해발생 후 긴급구호성 지원을 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결정에 대한 의견, 북한 수해지원의 방식과 규모에 대한 의견	402건	2,607회

2. 홍보매체의 다각화

가. 홍보자료 발간, 보급

2006년 홍보자료는 대부분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통일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작·보급하였다. 세대별 계층별 관심사와 눈높이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 누구나 통일부의 각종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총 5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그 중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설명자료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국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평화번영정책의 긍정적 성과, 금강산·개성공단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그 중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인쇄광고는 통일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통일부 직원을 모델로 기용, 전국의 주요 대학신문 및 지하철 무가지에 게재되어 젊은 층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는 힘,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홍보영상물은 태극기 아래 하나 되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싸이의 'We are the One' 을 배경음악으로 서울·수도권 및 전국 주요극장에 상영되어 평화를 지켜내는 국민의 저력과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06년 주요 홍보자료 현황

자 료 명	발간(상영)내역	형 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해설자료	국문 부	브로슈어
참여정부 3년, 평화번영정책 성과	국문 부	브로슈어
지하철 무가지·대학신문 광고 - 평화를 향한 발걸음 편	지하철 무가지(3개), 대학신문 24곳	인쇄광고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설명자료	국문 5,000부/영문 3,000부	책자
통일홍보영상물 -태극기편	전국 20개 극장	영상자료

나. 통일부와 함께하는 카트라이더 그랑프리

통일부는 통일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져가는 청소년들이 실생활 속에서 통일문제에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홍보 브랜드를 개발하여왔다.

2004년 마린블루스, 돌리, 마사마로 등 인기캐릭터가 등장한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웹 카툰을 제작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데 이어, 2005년에는 유명 온라인게임인 카트라이더의 캐릭터 및 이미지를 활용하여 ‘돌이 아닌 하나로’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통일홍보 애니메이션 2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카트라이더를 이용한 홍보를 2005년부터 시작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온라인 게임상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통일부와 함께 하는 카트라이더 그랑프리”를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간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으로 구분·진행하여, 총 220,641명이 참여하였다.

“2006년 통일부와 함께 하는 카트라이더 그랑프리”는 “달려라 통일~누려라 행운! 아무도 달려보지 않은 통일의 길을 달리며 푸짐한 행운까지 누려라”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었으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게임 참여의 재미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 통일부 로고를 활용한 홍보
 - 통일부에 대한 이미지 제고
- “달려라~ 통일! 누려라~ 행운! 아무도 달려보지 않은 통일의 길을 달리며 푸짐한 행운까지 누려라” 대회 슬로건을 통한 홍보
 -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해 게임참여자가 통일의 길로 간다는 기분을 들게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유도
- 통일부 로고 풍선 제작 지원
 - 카트라이더 이용자들의 카트에 통일부 로고 풍선을 달게 함으로써 통일부와의 유대감 제고

제 Ⅷ 장 통일정책의 추진기반 확충



“2006년 통일부와 함께 하는 카트라이더 그랑프리”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맵상에 “I ♥ UNIKOREA”,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달리는거야”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이미지 광고를 접하고 이를 통해 통일문제를 친근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 통일부 블로그 콘텐츠 공모

“당신의 숨은 끼를 통일부에 보여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남북관계 및 통일부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동영상 콘텐츠(UCC)를 2006년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참신하고 재미있는 통일관련 콘텐츠 확충으로 2006년 8월에 개설한 부서블로그를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공모에 참여한 작품수는 총 141건으로 크리에이티브 카피설득력, 비주얼 참신성, 광고적 임팩트, 제작기법, 열의 등을 기준으

로 평가하여,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통일부 부서블로그에 등재하여 공모전 참여자 및 국민들이 수상작의 작품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포털 부서블로그를 홍보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최근 인터넷 트렌드를 반영한 공모전 시행으로 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국민의 친근감과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부’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3. 언론매체 활용 홍보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대북정책 추진 관련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도자료는 통일부 등록 기자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와 「통일부 뉴스」(unikorea.korea.kr)에도 게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18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또한 장·차관이 33회, 본부장 및 대변인이 161회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및 방송출연 등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주요 언론사 논·해설위원, 비정부단체(NGO), 통일부 등록 기자들과 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내용과 관련동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2006년에 열린 제18차 및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4월, 7월), 남북경제추진위 제12차회의(6월), 제13차 및 제14차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3월, 6월) 등에는 내외신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통일부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남북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통일부는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을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북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통일부 뉴스」(unikorea.korea.kr)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뉴스」는 2003년 9월에 개설된 이래 ‘정책속보’, ‘보도자료’, ‘포토뉴스’, ‘통일만화 남남북녀’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북정책 추진성과를 알려왔다.

2006년에도 「통일부뉴스」를 통해 남북회담 개최 현황, 개성공단 개발 현황,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대북 비료·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3절 통일교육을 통한 합의기반 강화

1. 통일교육의 추진체계 정립

가.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및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2월, 「2007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 기본방향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한 국민역량 강화를 위해 평화공존시대를 지향하는 평화교육 강화,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기능 강화, 통일미래를 대비하는 실천적 기본역량 제고, 수요자 지향의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 지역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확대를 설정하였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남북협력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평화교육의 제도화 추진, 남북관계 진전 및 통합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고객맞춤형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통일교육 실시범위 확대의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중점추진과제에 입각하여, 8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교육청 및 통일교육협회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록함으로써 2007년 한해 정부,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이 일관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나. 「통일교육지침서」 개편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지침서」를 매년 수립,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2007년도 통일

교육지침서」는 평화번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변화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평화교육 요소를 반영하여 통일을 위한 과제로 민주시민의식과 평화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에서는 ‘평화의식 함양’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무엇보다 남북 통합과정에 점진적으로 대비하는 실천적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개인적 차원에서 통일미래상을 조망하고, 통일에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남북주민간 갈등해결 및 공존능력 배양을 위해 「새터민 문제에 대한 교육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계기별 통일교육」 단원을 추가하여 학교현장에서 6.15, 6.25, 8.15 등 계기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통일교육발전토론회 개최

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 또는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총 7회에 걸쳐 인천, 제주, 경남, 서울, 경북교육청과 2,230여명의 초·중·고 교장·교감, 통일교육교사, 장학사 및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진단하는 계기를 가졌다.

아울러, 2006년 11월에는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전문가를 통일교육원으로 초청, 「통일교육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 및 집중토론을 실시하였다.

2.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개설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회담이 제도화되고, 교류협력이 양적·질

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내 핵심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리더십, 변화대처능력, 통합·조정능력을 갖춘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1기 과정은 2006년 2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국가기관 국·과장급 및 공기업 간부 29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생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중앙부처 및 경기도, 강원도 등 5개 지자체의 국·과장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공기업 간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은 통일정책, 북한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등 분야별 전문강의, 남북 교류현장 및 북한지역 방문, 해외사례연구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생들이 현업에 복귀한 후 남북관계 관련업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절차를 배우고, 교류협력 종사자들의 다양한 사업경험담을 통해 성공·실패 사례를 학습하는 등 실용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3. 초청 통일교육의 전문화·체계화 추진

2006년에는 학교교사, 공직자, 방북예정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총 25,836명이 초청 통일교육을 이수하였다. 분야별로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955명을 비롯하여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1,555명, 원격(온라인)통일교육 참가자 1,654명,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17,444명, 공직자 1,447명, 사회 각계 인사 2,781명 등이 이수하였다.

2006년의 주요 목표인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한반도 통일의 과

제와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비전과 공직자의 역할' 등의 교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민주시민의식과 갈등해결능력 배양,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추진, 교육과정 운영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도 중점을 두고 통일교육을 추진했다.

아울러,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강의와 더불어, 토론 및 주제발표, 현장체험 등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참여도 및 교육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도별 통일교육 이수자 (단위 : 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
사회통일교육전문인력	1,018	1,447	1,187	955	4,607
학교통일교육전문인력	4,610	3,716	1,679	1,555	11,560
원격통일교육	-	561	956	1,654	3,171
남북교류협력관련 대상자	9,152	12,996	20,401	17,444	59,993
공직자	1,056	1,268	1,087	1,447	4,858
사회각계인사	1,251	1,046	1,110	2,781	6,188
계	17,087	21,034	26,420	25,836	90,377

한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9월 18일부터 3일간 '하나되어 함께여는 통일세상'이라는 주제로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3,500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각종 문화행사·공연과 접목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인 '남북청소년대화'에서는 새터민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과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 행사 장면

또한 ‘청소년 통일학습장’, ‘통일갤러리’, ‘북한음식마당’ 등을 통해 북한 현실에 대한 간접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화로 떠나는 북한 여행’, ‘북한만화영화 상영’ 등을 통해 북한청소년과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통일교육원을 직접 찾아와서 방북교육을 받는 기존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측으로 출경하는 날 당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영상교육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출입근로자 및 단기체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4. 찾아가는 통일교육 실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일 통일교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대학생 통일포럼' '남북관계 현안설명회' 등 다양한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1일 통일교사'는 통일부 직원이 모교, 자녀학교 또는 연고기관을 방문하여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통일부 전체 직원의 35%에 해당하는 연인원 181명이 1일교사로 참여하여 40,465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통일부 직원들의 업무경험에 바탕을 둔 생생한 현장교육을 통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영상물 시청, 눈높이 강의, 놀이교육을 묶어서 실시하는 전문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총 18개교 4,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생 통일포럼'은 대학생들이 연구·발표·토론하는 학생 중심의 참여행사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12개 대학에서 총 1,95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학생들이 서로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대학 사회 통일논의 활성화 및 대학생들의 통일 지향적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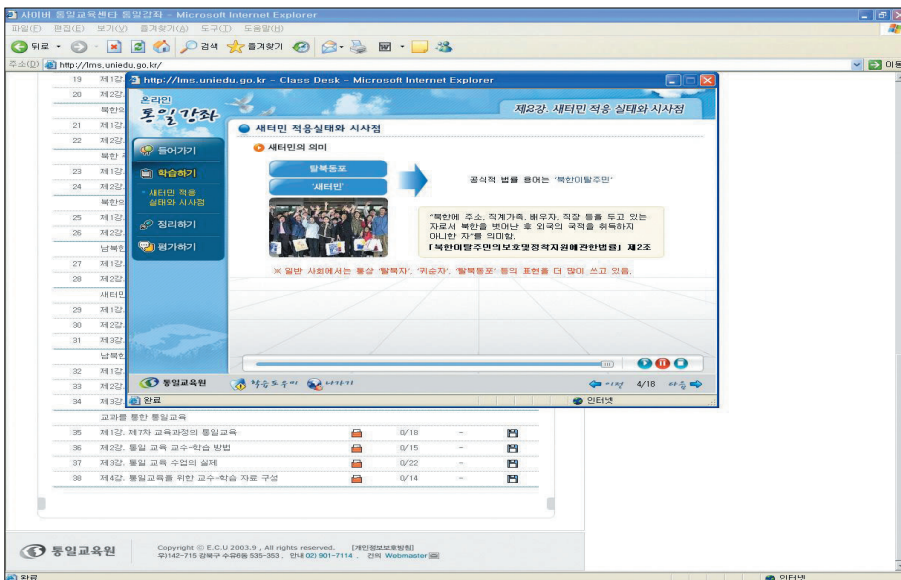
'남북관계 현안설명회'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 발생시 통일부 간부,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지역을 찾아가서 총 25회 2,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국민 직접 설명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기반 확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계기로도 활용하였다.

5. 온라인 통일교육의 활성화

정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를 구축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200여명으로 2006년 말에는 방문자수 495만여 명을 돌파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교원 대상 원격통일교육 직무연수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격통일교육 장기과정(60시간, 4학점)」 직무연수를 인가받아, 기존 단기과정 직무연수와 병행하여 총 13회(단기 10회, 장기 3회) 1,654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원격통일교육 화면

한편, 청소년들의 통일 무관심을 해소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방식의 통일게임, 통일만화, 북한 청소년 백과, 한마음학교 등의 청소년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였으며, 금강산체험소감문과 기념사진 공모, 통일 4행시, 팔도강산 사이버통일글짓기, 도전통일벨 등 다양한 사이버 통일교육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특히 도전통일벨은 50문항의 퀴즈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통일에 대한 관심도 및 흥미 제고와 함께 학습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6. 고객맞춤형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정부는 국민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북한이해」와 「통일문제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06년판 「북한이해」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분야별 변화상과 관련한 사진·도표 자료를 보충하였다.

「통일문제이해」에서는 ‘6자 회담’ 관련 주변정세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및 남북관계의 분야별 진전 상황 등을 반영하였다. 이들 기본교재는 각급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도서관·통일교육 관련 민간기관 등 8,400여 곳에 배포·활용되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및 북한 관련 주요 시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로 2006년에는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등 3종, 화보자료인 「사진으로 본 북한주민의 생활」, 통일교육 참고교재인 「의사소통적 통일교육」 등의 부교재도 발간하였으며, 남북간 인적 왕래의 유형 다양화, 방북 절차상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북한방문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 남북교류협력사업차 북한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학교통일교육 교사들에게는 필요한 실용적인 통일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교

시간의 네트워크 구축 촉진을 위해 「통일교육소식」을 연 2회(6월, 12월) 발간하여 일선교육청, 통일교육 시범학교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통일칼럼, 통일교육 사례 등 통일교육에 유익한 콘텐츠로 꾸며진 웹 매거진(Unizine)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교원과 통일교육위원 등 통일교육 관계자 25,000여 명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여 대상별로 세분화된 영상교재를 제작·보급하였다. 2006년에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성과 및 통일비전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다큐영상물 「한반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사회통일교육용으로 제작·배포하였으며, 청소년용 영상교재인 「가자미의 눈물」의 제작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모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통일문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가 부족한 재외동포들을 위한 통일교육교재 개발을 추진, 1차적으로 재미동포 2~3세대를 위한 영상교재 「준이의 통일여행」 제작을 추진하였다.

7.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가. 학교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이 될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정보·자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 400명으로 「통일교육장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시범학교(초등학교 5, 중학교 11, 고등학교 4, 총 20개교)를 지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고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전국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총 288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6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45명이 응모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선작을 선정, 시상하였다.

특히, 학생 및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남북관계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교생과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체험학습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이 행사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통일교과 담당교사, 통일교육 이수교사, 통일교육 이벤트 참가 학생들과 통일교육 시범학교 학생 등 16,398명 등이 참여하였다.

나. 사회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시민사회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통일교육협의회에는 2006년말 현재 민화협, 평화문제연구소, 경실련 통일협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94개의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공, 각종 교재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하였다.

2006년도에는 통일교육협의회 본부 차원에서는 통일교육사례발표, 대학생 통일캠프, 통일교육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시민·청소년·정책개발 등 분과위원회에서는 「여성통일학교」,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청년평화통일아카데미」, 「청소년통일영상제」 등의 대상별 통일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통일교육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 대상 「열린시민강좌」, 「평화통일세미나」 등을 개최, 지역주민들의 통일의식 향

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통일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설 및 정보 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9개 지역(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부산, 경남, 경북, 제주)을 중심으로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6개), 통일교육위원협의회 등 단체(3개)를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주체로 지정하였다. 9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총 281회의 통일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통일교육위원,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 통일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 연계체제도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712명의 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위원들의 교육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초청 연찬교육 실시(2회), 통일대화의 광장 행사(1회)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자료 제공, 북한 현지방문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였다.

통일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관은 현재 부산, 광주, 인천, 청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전시자료, 통일관련 정보자료 등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학생층을 중심으로 총 32만여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전국 통일관 소재지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강화

1. 주요국과의 정책협의

2006년에는 두 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10.9)으로 인해 한반도 내의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6자회담 재개가 1년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는 더욱 국제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강화하였다.

2006년 하반기에 집중된 주요국과의 정책협의를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대책, 향후 전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통일부는 그 같은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북핵 문제의 해결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요국과의 정책협의를 위해 미·중·일·러 등 주한 대사들을 수시로 만나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실무자들도 주요 외국공관들과 다양한 레벨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상황 관리를 위한 공조체제 강화에 힘썼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힐(Christopher Hill) 미 국무부 차관보와도 수차례 정책협의를 갖고 6자회담 재개 문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행 등에 있어 한·미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2006년 4월과 7월, 두 차례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직후에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회담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주요국에 전달하였다.

한편 그동안에는 주로 필요성 발생시 집중되었던 주요국과의 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평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2006년 9월 19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외무성 관계자와 실무정책협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중 협력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한·중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북한의 핵실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아베정권 출범에 따른 일본의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제3차 한·일정책대화가 양국 외교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정책대화에서는 북핵 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 전망과 한일 공조 문제를 논의하고,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

2006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러 실무정책협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 러시아 외무성 북핵담당 보좌관 등 러시아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동 협의회에서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과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였다.

2006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6자회담 재개 시점에 맞춰 한·미 실무정책협회가 워싱턴과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워싱턴에서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미 정부 각 부처 인사들과 만나 양국간 대북정책 추진 공조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미국 상하원 차기 주요 지도자들의 보좌관들과 만나 북핵 정국에서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KEI·헤리티지 재단 등 워싱턴의 주요 한반도 문제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한편 뉴욕에서는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 사업에 대한 레프코위츠 특사의 견해를 청취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그레그(Donald Gregg) 아시아 소사이터티 회장 등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국제 네트워크 강화

국제사회에서 대북정책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통일 우호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관리 사업은 2005년 말부터 시작된 국내외 3대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한반도 전문가 등 해외 여론주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동 연구모임은 장기적으로 우호세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이나 한반도 문제 현안에 대한 국제여론을 신속히 수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가 컸다.

먼저 해외주재 통일관이 각자의 주재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한반도 전문가연구모임」의 경우 미국 6회, 일본 4회, 중국 1회, 독일 1회 등 총 12회가 개최되었다.

모임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KEI 등 유수의 연구기관 소속 한반도 전문가 15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계관 등을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6자회담, 북한 핵실험, 한미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경우, 여러 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한

반도 전문가로 연구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북일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아베정권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정세전망,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6자회담 재개 및 북핵 실험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한 외국인 전문가 연구모임」은 미국인 전문가 모임 2회, 일본인 전문가 모임 2회, 유럽인 전문가 모임 3회 등 총 7회 개최되었다.

국내 장기체류중인 미국인 전문가 모임에서는 한·미관계 현안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서울 주재 일본 신문 및 방송사 지국장 등이 참여한 일본인 전문가모임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반도 정세,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등을 주제로 통일부 직원들과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또한 유럽인 전문가 모임에서는 개성공단사업 추진성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또한, 방한 전문가들을 초청, 통일부 직원들과 공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는 「인터내셔널 포럼」은 올해 총 8회 개최되었다. 올 한해에는 미 국무부 전직 관계관,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관계, 미중관계, 미일관계, 미국의 대북 및 대아시아 정책 등을 주제로 직원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다.

올해 통일부를 방문한 고위 외국 인사로는 번스(Nicholas Burns) 국무차관, 본드(Christopher Bond) 상원 의원, 롬니(Mitt Romney) 전 주지사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추이리루 현대국제관계 연구원장 등 중국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고위 인사들이 있었다.

3. 해외 정책홍보 확대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홍보는 「통일캐러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캐러반은 대상국가의 주요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의회·언론계·교계 및 동포사회 등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대북정책설명회’, 주요 연구기관·학계 소속의 한반도 전문가와의 학술회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국제문제전략회의’,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실시하는 의원 외교 차원의 ‘통일문제 의원워크숍’ 등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05년부터 주변 4국 및 유럽 주요국가를 대상지역으로 실시되어온 동사업이 올해에는 한반도 정세의 긴박한 변화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었다. 필요에 따라 대북정책설명회와 국제협력전략회의를 병행추진하여 양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통일캐러반」은 2006년 한 해동안 미국(4월17일~21일 워싱턴 및 11월29일~12월 6일 워싱턴·샌프란시스코), 일본(5월30일~6월3일 히로시마·오사카 및 12월26일~28일 동경), 중국(9월18일~22일 북경·상해 및 12월8일~9일 북경), 러시아(9월23일~30 모스크바·뻬제르부르크·블라디보스톡) 및 EU 지역(5월15일~21 런던·브뤼셀·베를린) 등에서 총 8회 개최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개성공단(미국), 북한 인권(유럽) 등 지역별 관심사에 정책설명회의 초점을 맞추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였다.

올해 실시된 통일캐러반의 특징은 국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지 인사들과의 보다 심도깊은 토론 및 양방향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실시된 미국지역 전략회의(4월 18일 워싱턴)에서는 워싱턴지역 한반도 전문가들과 개성공단사업의 전략적 의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 실시된 전략회의(12월 4일 버클리대)에서는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미 서부지역의 전문가들과 폭 넓은 토론을 벌였다.

2006년 「통일캐러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 국제정세의 현실에 맞춰 북핵 문제와 6자회담이 토론의 주 의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지역 전략회의(6월 2일, 교토 동지사대)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안보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지역 전략회의(9월 20일, 북경대)에서는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전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러시아 지역 전략회의(9월 28일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과 평가는 하반기 미국지역과 중국지역(12월8일~9일, 북경)에서 개최된 전략회의에서도 주요 주제가 되었다.

한편 2006년 5월에는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통일정책 해외설명자료』를 발간하였다. 동 자료는 해외 주재 외교관 등이 주재국 정부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 있는 공관에 배포되었다.

영문 홍보자료로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을 소개하는 『The Road to Korean Unification』 소책자 1,300부를 5월에 발간한데 이어, 12월에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정리한 『Preserv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소책자 3,000부를 발간하였다. 이들 책자는 미국지역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의 재외 공관 및 지역 한인회를 통해 현지 전문가와 동포들에게 배포되었다.

「통일캐러반」 실시를 통해 접촉하게 된 주요 인사들에게는 PCRМ을 통해 주간 영문 뉴스레터 등 관련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 올 한해 PCRМ 주소록에 등록된 주요 해외 인사들에게는 영문 뉴스레터가 총 24회, 영문 정책속보

가 총 11회 발송되었다.

영문 뉴스레터는 매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관계 뉴스를 소개하였고, 정책속보는 북한 핵실험과 같은 긴급사안 발생 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지지기반 확대에 기여하였다. 영문 뉴스레터를 수신하는 해외 주요인사의 수는 연초에 630여명에 머물던 것이 연중 계속 증가하여 12월말에는 이미 700명을 넘었다. PCRМ 수신자 주소록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의 학계, 언론계, 정계의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영문 뉴스레터를 통한 해외홍보는 정부부처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앞서 시행된 것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교류 현황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홍보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남북간 화해와 협력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한민족공동체 의식 발전을 도모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같은 맥락에서 통일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3일 부터 10일까지 해외동포 밀집 거주 지역의 하나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제16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대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브라질지역 거주 재외동포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동 토론회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포사회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중국 및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 동포사회는 동포사회 형성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북한과의 잦은 교류 및 북한 주민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대북정책 추진과 통일기반 확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곳 동포사회의 8개 신문·방송에 민족의 동질감을 살리고 남북관계 현황을 이해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통일칼럼」을 매월 게재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에도 중국 하얼빈 흑룡강신문사의 「신춘문예」 등 8개 동포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 12건을 지원하여 북한 접경지역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을 고취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지원서비스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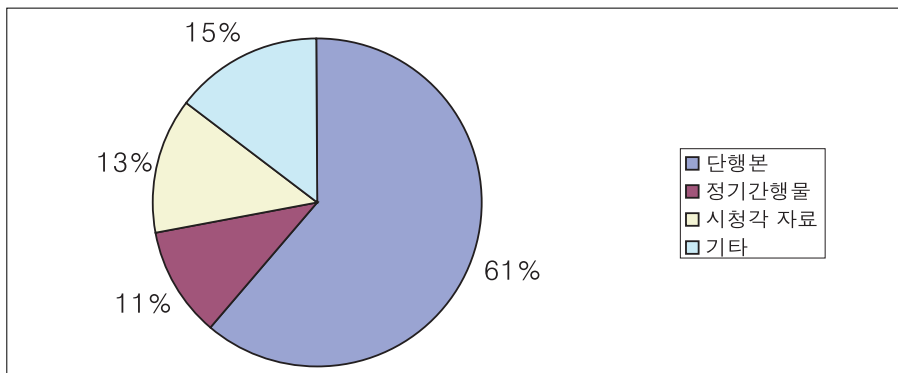
1. 북한 정보자료 개방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고,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실상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 5천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화일 자료 3천여건, 시청각자료 6천 7백여 건, 통일부 발간물 6천 2백여 건 등 총 9만 2천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

종 류	자 료 건 수
단행본	18,284
정기간행물	3,203
시청각 자료	3,990
기타	4,406
계	29,883



조선중앙TV프로그램 편성표

조선 중앙TV 프로그램(2006. 12. 27)

시 간	방 송 순 서
※ 본 프로그램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09:13	※ 김정일, 인민군 제3993군부대 관하 구분대 시찰
09:20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영장을 모시여(23)
10:10	〈서정시〉 나의 조국
10:30	〈조선기록영화〉 공화국의 평범한 공민들
11:24	〈조선예술영화〉 우리 대의원
12:47	〈녹화실황〉 평양 모란봉교예단의 요술공연중에서
13: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13:20	〈좌담회〉 세계합창경연에서 우승의 영예를 펼친 여학생 합창단 ((제4차 세계합창경연 참가자들과 함께))
14:00	- 김정일, 인민군 제109군부대 지휘부 시찰
14:08	〈조선기록영화〉 평양국제영화축전
14:28	〈녹화실황〉 함경남도 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중에서
14:59	〈텔레비전기념무대〉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언제나 백승을 떨치리
16:11	〈화술소품축전〉 촌극 : 백두산마을 사람들
16:47	- 날을 따라 변혁하는 금야군을 찾아서(제2회)
17:00	- 보 도
17:11	- 오늘호 중앙신문개관
17:25	〈아동방송시간〉 아동영화 : 다람이와 고슴도치(제27부)
17:46	〈녹화실황〉 2006년 학생소년들의 지덕체 자랑이야기
18:36	-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더욱 빛내인 한해
19:00	- 김정일, 인민군 제109군부대 지휘부 시찰
19:08	〈소개편집물〉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김일성 헌법
19:25	〈녹화실황〉 인민군 협주단 여성민요 2중창 무대
20:00	- 보 도
20:40	〈텔레비전연속극〉 한 여당원의 추억(제3부)
21:33	- 장군님 품에서 영생하는 영화인들(인민배우 전재연)
21:58	〈서사시〉 축복받은 경연무대(2)
22:13	- 김정일, 인민군 제3993군부대 관하 구분대 시찰

한편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단체 회원 및 새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는 바, 2006년도에는 총 35회 개최에 2,734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6년 12월말까지 총 404회의 북한실상설명회가 개최되어 총 3만 2천여명이 참가하였다. 2006년도 참가자의 대상별 분포를 보면, 대학(원)생 61%, 교사 17%, 중고생 11%, 기타 11%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2,200여 편의 북한영화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적으로 북한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북한영화 상영을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 청주통일관 등 6개 지방도시로 확대하여 상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북한영화를 총 632회 상영하여 18만 2천여명이 관람하였으며, 1990년 이후 총 4,677회를 상영, 86만 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국민 누구나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에서 북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하는 등 북한 TV시청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1998년부터 북한의 도서, 그림, 우표, 음반 등 반입자료에 대한 심의를 주관한 이후 2006년까지 총 265회 34,453건에 대하여 심의를 시행하였다.

1999년 12월 통일부 소장 비이념성 북한자료 5천여권을 일반자료로 공개하였으며, 2003년 특수자료취급인가증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04년 국회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정보자료교류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05년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그리고 2006년에는 이화여대 통일학연

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북한자료 이용에 획기적 발전을 기할 것이다.

2. 통일·북한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국민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과 북한문화 체험요구 증가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북한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북한정보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정보자료 접근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북한 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북한영상자료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는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북한정보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용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요자들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국민들이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통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자료센터 오픈하우스를 개최하였다.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을 지향하고자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1,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여, 북한 선생님과의 이야기 한마당, 북한말 알아맞히기 퀴즈, 새터민과 함께 하는 북한 동요 및 율동 따라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통일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고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통일문제의 국제화 일환으로 2006년 8월 전 세계 도서관계 최대 행사인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 연맹 서울대회 기간 중 북한자료센터 주관으로 200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ference) 방문도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계 20여 개국 관련인사 40여명이 참여하여 통일·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3. 북한 정보자료 지원·관리시스템 혁신

통일부는 북한자료의 효율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선주파수(RFID)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에 대한 RFID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체 소장자료 10만여 권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하여 자료대출 및 반납 처리속도를 기존의 10분의 1로 단축함으로써 북한자료 이용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자료의 소장여부 및 위치 등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별도의 회원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RFID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자료이용 회원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유로운 출입과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고객 중심의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를 전면 개편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기능을 강화하였고,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13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소장자료의 정보 및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들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영화 소개 코너, 북한교과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북한실상 이해의 장'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제6절 국민 만족을 위한 통일업무 혁신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종 행정제도·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이며 질적 변화를 추구해왔다.

통일부도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에 노력한 결과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정부혁신평가에서 '변화노력이 조직 전반에 확산' 되는 '혁신4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혁신추진 초기의 다양한 혁신노력은 부문별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조직전반으로 혁신을 확산하고 업무의 모든 부분에서 국민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추진방식상 일방향적, 소수 담당자 중심의 혁신이 추진됨으로써 혁신추진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못하고, 혁신피로감이 나타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6년은 '일과 혁신의 융합'을 기조로 삼아 통일부의 모든 업무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의 성과를 '국민 속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혁신의 성과들이 결실을 맺어간 해라 할 수 있다.

1.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혁신추진기반 강화

가.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혁신목표와 전략의 수립

최근 남북관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통일부의 정책고객들이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관련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통일정책의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외부 환경변화와 내부역량을 분석하고 통일부 주

요 이해관계자 및 고객들의 요구 분석을 토대로 2006년 혁신목표를 '혁신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 증진'으로 설정하였다.

혁신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정책중심」, 「정보화」, 「국민중심」, 「전문화」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를 선택하고 향후 2010년까지 5년간의 혁신 로드맵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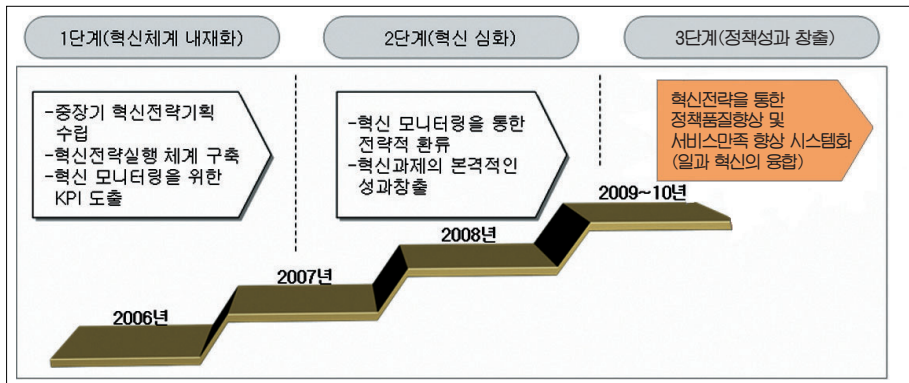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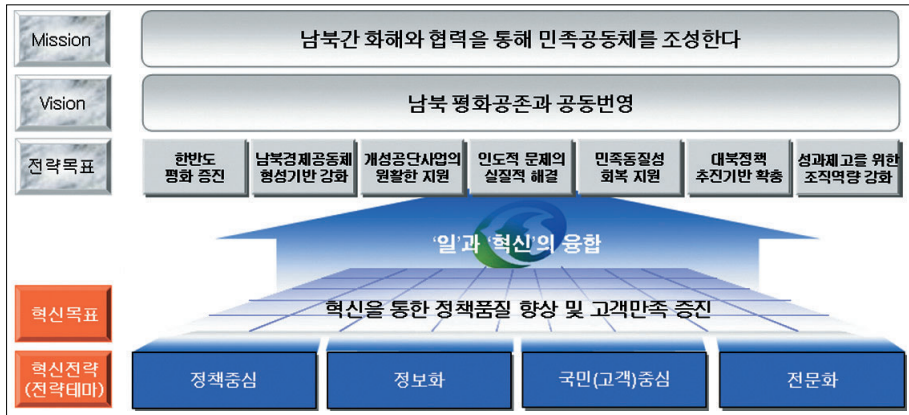
「정책중심」이란 대북정책 총괄 조정부처로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중장기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일상업무에 접목하여 시스템에 기반한 문서처리와 정보공유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중심」이란 큰 틀에서는 단일방향의 국민의견수렴 차원에서 벗어나, 국민과 시민단체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문화」란 급변하는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부 직원들의 지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수립된 혁신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시급성, 중요도, 실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혁신과제를 채택하고 2010년까지 중장기 관점에 입각하여 혁신계획을 체계화시켰다. 통일부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점차 다양화·국제화하는 통일업무와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통일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비전 미션 체계도 및 통일부 혁신 로드맵(안)

나.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혁신역량 배양

통일부가 혁신 로드맵에 따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원들의 창조적 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상시학습을 제도화하는 등 학습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팀장에게는 '부하직원 육성책임'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학습 후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에게는 직급별로 '최소의

무학습시간 을 부여하여 학습을 권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 교육기관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고, 직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학습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업무와 떨어지지 않는 학습환경을 구축하였다.

부내 학습동아리의 경우 직원들이 수동적·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 2006년도에는 자발적이고 활동이 적은 학습동아리를 폐지하고 그 대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동아리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개성공단 법제 네트워크」, 「북한경제학습」 등 남북관계가 질적·양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학습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였다.

이 외에도 혁신리더십, 변화관리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로 차별화된 혁신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북핵실험, 독도문제 등 통일관련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 「통일혁신아카데미」, 「전직원 혁신 워크숍」 등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학습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통일혁신아카데미 사진

2. 통일업무 혁신성과

가. 일 잘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

단발성행사 위주의 혁신활동만으로는 지속적인 업무혁신과 내재화된 혁신문화를 담보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효율적 행정, 투명한 행정, 분권화된 행정 등 참여정부의 혁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 기반의 혁신추진이 필요했다.

2006년에는 기관장 대면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온라인 보고시스템 및 문서속성카드를 활용함에 따라 보고대기 시간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어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장관에게 보고되는 정책보고 문서를 대통령비서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처간 장벽을 없애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되자 주요 정책에 대한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정책입안단계부터 정책결정단계까지의 정책적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팀제 및 본부제를 전면 도입하여 직급에 관계없이 능력중심으로 팀장을 임명하였다. 또한 팀장의 전결비율도 기존 4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확대시켜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팀장의 업무 책임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통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는 내부적인 행정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들의 편의향상으로도 이어졌다. 교류협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 관련 민원이 시스템을 통해 창구가 일원화되고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북간 통행시 통행인원·차량·물자에 대한 정보가 부처간 공유됨에 따라 유사한 종류의 서류를 여러 부처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이 사라지게 되어 통일부의 정책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의 형성 노력

통일부는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정책개발포럼」을 운영해왔다. 이 포럼은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장관 이하 전직원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7차례의 포럼을 통해 31개의 제안이 발굴되었으며, ‘남북방재협력 방안’, ‘한강하구 골재 공동이용’ 등의 아이디어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모두에게 공동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안으로 남북간 합의서에 명문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해 조직차원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2006년에는 실패를 은닉하기 보다 공개하여 동일한 실수의 재발을 막고 조직의 경험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패사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차관 이하 간부 전원이 참석한 동 토론회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지연 사례’ 등 각 실패사례의 원인 분석과 시사점을 청취하고 토론 후 실패사례의 우수 분석 부서에게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장차관 이하 전간부가 참여한 실패사례토론회('06.9)

또한, 갈수록 증대되어 가는 통일업무의 다양성, 전문성을 보완하고 내부 층원에 따른 조직의 경직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대북 에너지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 박사급 8명을 선발한데 이어 2006년도 법률 전문가, 북한학 전문가 등 총 8명을 특별채용하였다.

다. 통일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

‘일과 혁신의 융합’ 및 ‘실사구시’ 형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혁신의 가시적 성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규모의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는 남북간 주요회담 행사시 부처간 업무연계, 정보공유 및 운영절차 혁신을 통해 남북간 대규모 행사시 인력의 약 32%, 소요예산 43%를 절감할 수 있었다. (2005년과 2006년 장관급 회담 인력 및 소요 예산 기준)

또한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남북 통행인원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개성공단·금강산을 오가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고객만족 남북출입행정서비스’를 혁신과제로 내걸고, 민원인들의 출입경 동선 분석, 불편사항 및 주기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늘어난 통행인원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는 혁신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민원인 제출서식 6개→1개, 출입신청 접수창구 일원화)

뿐만 아니라 무선인식 기술을 이용한 RFID기반의 통합 출입·물류체계로 구축함으로써 출입경 절차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민원인들의 제출서식을 통합하고 관련부처간 정보를 공유·통합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남측 출입경 시범실시 결과 심사 소요시간 약 50%감축, 만족도 20% 향상)

또한 북한관련 자료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가 저해되고 청소년층의 통일 무관심 현상이 심화되므로, 북한영화를 우편으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북한자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용자수 전년대비 162% 증가)

통일교육원에서는 청소년층을 통일교육의 핵심고객으로 정하고 청소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상과 놀이를 이용한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존 간접교육의 틀을 벗어나 통일교육전문가가 직접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에듀테인먼트형'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6개교 약4,000여명 대상 시범실시)

'06년 주요 혁신성과

분 야	주요 혁신성과
남북회담행사운영	○ 인력 32%, 예산 43% 절감(장관급 회담)
남북출입절차간소화	○ 민원인 제출서식 6개 → 1개, 출입신청 접수창구 일원화 ○ RFID 기반 출입물류체계 구축
북한자료 우편서비스	○ 서울에 편중된 북한자료를 우편을 이용하여 전국에 대여 (이용자수 전년대비 162%증가)
에듀테인먼트형 통일교육	○ 청소년 대상 놀이를 결합시킨 통일교육실시

3. 통일업무 정보화를 통한 업무시스템 체계화 및 고객서비스 개선

2006년 정보화예산 규모는 12월에 추가된 육로통행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약 110억원으로 이는 2005년보다 423% 증가한 규모이며, 총 14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보화 추진의 청사진 없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기는 시스템간 연

동 부족이나 자료의 중복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정보화 아키텍처를 2006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구축하였다. 통일부의 정보화방향 및 추진과제와 전략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향후 전략적 정보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사업별로 대표적 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보면 개성공단의 경우 RFID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 인원·차량·주요물자에 대해 통행·통관 심사를 자동화하여 소요시간 단축 및 대북 반출 물자에 대한 이동 경로 통제, 물자관리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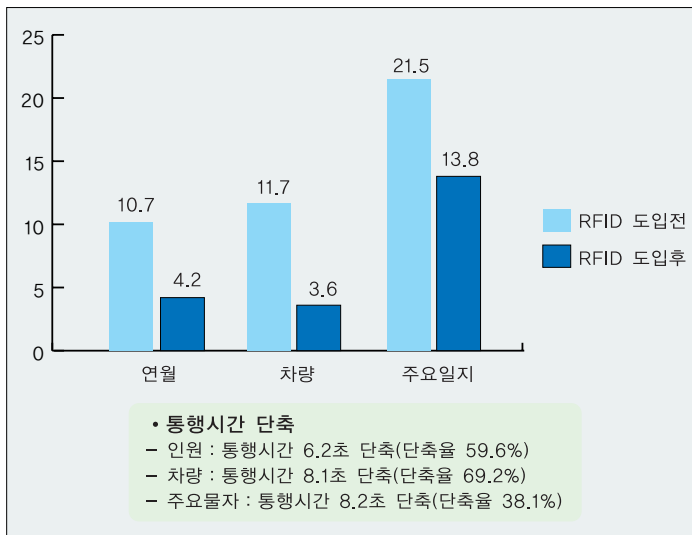
새터민 거주지 정착지원서비스망 구축사업은 새터민에 대한 기본 인적자료 및 정착지원 관리를 위한 DB 구축 및 기관 연계를 통해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이산가족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민원 처리 및 공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사업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가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기초자료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정DB구축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 축적된 남북한 교류협력 및 북한정세현황, 북한사회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문서·도서·보고서(텍

통행시간 단축



스트 97,500면), 이미지(2,100면), 동영상(4,530건)의 자료를 체계화된 디지털로 변환하여 자료분석의 기반 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략적이고 균형잡힌 성과관리 실현 및 성과 관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조직과 개인의 업무 목표를 일치시키고 지속적인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해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 및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등 업무 관리 방식을 혁신하고자 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보화 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부처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정보화에 기반한 내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정책고객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통일행정DB 구축사업 착수보고회